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000-00

정책보고서 2018-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직무분석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김희성 · 강혜규 · 함영진 · 하태정 · 김정숙 · 황정윤

【책임연구자】

김희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저서】

지방화의 진전과 복지격차: 전달체계 여건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공저)

사회서비스 지역격차 파악 및 해소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공저)

【공동연구진】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함영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하태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김정숙 연세대 SSK 미래정부연구센터 전임연구원

황정윤 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 연구원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직무분석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홍 식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1
제3절 분석 자료	5
제2장 시군구 직무분석	71
제1절 시군구 본청 직무량 분석	9 1
제2절 시군구 읍면동 직무량 분석	2 4
제3장 복지수요 및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현황 분석	9 5
제1절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현황	1 6
제2절 복지수요 대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현황	2 7
제4장 적정·증원 소요인력 추계 및 배치 방안	7 8
제1절 시군구 전달체계 정상화 증원 소요인력 추계	9 8
제2절 증원 소요인력 배치 방안	9 9
제3절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증원 소요인력 추계	1 0 1
제4절 커뮤니티케어 증원 소요인력 추계	3 0 1
제5장 결 론	105
제1절 분석 결과 요약	10
제2절 정책 제언	19
부 록	111
부록 1: 시군구 본청 정책영역별·유형별 직무량 분석	111
부록 2: 시군구 읍면동 기능별·유형별 직무량 분석	941

표 목차

〈표 1-1〉	시군구 본청 표준직무분류체계	2.....	1
〈표 1-2〉	시군구 읍면동 표준직무분류체계	3.....	1
〈표 2-1〉	시군구 본청 기능별 직무량 총괄	9.....	1
〈표 2-2〉	시군구 본청 유형별 직무량 총괄	0.....	2
〈표 2-3〉	시군구 본청 영역별 직무량 총괄	1.....	2
〈표 2-4〉	1유형 기능별 시군구 본청 직무량	2.....	2
〈표 2-5〉	2유형 기능별 시군구 본청 직무량	3.....	2
〈표 2-6〉	3유형 기능별 시군구 본청 직무량	4.....	2
〈표 2-7〉	4유형 기능별 시군구 본청 직무량	5.....	2
〈표 2-8〉	5유형 기능별 시군구 본청 직무량	6.....	2
〈표 2-9〉	6유형 기능별 시군구 본청 직무량	7.....	2
〈표 2-10〉	7유형 기능별 시군구 본청 직무량	8.....	2
〈표 2-11〉	복지기획 및 정책 영역 직무량	9.....	2
〈표 2-12〉	복지시설 영역 직무량	0.....	3
〈표 2-13〉	통합조사 영역 직무량	1.....	3
〈표 2-14〉	통합관리 영역 직무량	2.....	3
〈표 2-15〉	기초생활보장 영역 직무량	3.....	3
〈표 2-16〉	자활 영역 직무량	4.....	3
〈표 2-17〉	희망복지지원 영역 직무량	5.....	3
〈표 2-18〉	노인 영역 직무량	6.....	3
〈표 2-19〉	장애인 영역 직무량	7.....	3
〈표 2-20〉	보육 영역 직무량	8.....	3
〈표 2-21〉	아동드림스타트 영역 직무량	9.....	3
〈표 2-22〉	청소년 영역 직무량	0.....	4
〈표 2-23〉	여성가족다문화 영역 직무량	1.....	4
〈표 2-24〉	시군구 읍면동 영역별 직무량 총괄	2.....	4
〈표 2-25〉	시군구 읍면동 유형별 직무량 총괄	3.....	4
〈표 2-26〉	1유형 기능별 읍면동 직무량	4.....	4
〈표 2-27〉	2유형 기능별 읍면동 직무량	5.....	4
〈표 2-28〉	3유형 기능별 읍면동 직무량	6.....	4
〈표 2-29〉	4유형 기능별 읍면동 직무량	7.....	4
〈표 2-30〉	5유형 기능별 읍면동 직무량	8.....	4
〈표 2-31〉	6유형 기능별 읍면동 직무량	9.....	4
〈표 2-32〉	7유형 기능별 읍면동 직무량	0.....	5
〈표 2-33〉	상담 단위업무 직무량	1.....	5
〈표 2-34〉	신청·접수 단위업무 직무량	2.....	5
〈표 2-35〉	대상자 사후관리 단위업무 직무량	3.....	5

〈표 2-36〉	찾아가는 방문 상담 단위업무 직무량	4	5
〈표 2-37〉	복지사각지대 발굴 단위업무 직무량	5	5
〈표 2-38〉	사례관리 단위업무 직무량	6	5
〈표 2-39〉	민관협력 단위업무 직무량	7	5
〈표 2-40〉	기타 행정 업무 단위업무 직무량	8	5
〈표 3- 1〉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정원 현황	1	6
〈표 3- 2〉	시군구 본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직렬별 배치 현황	2	6
〈표 3- 3〉	시군구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직렬별 배치 현황	3	6
〈표 3- 4〉	1유형 지자체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정원 및 직렬별 배치 현황	4	6
〈표 3- 5〉	2유형 지자체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정원 및 직렬별 배치 현황	5	6
〈표 3- 6〉	3유형 지자체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정원 및 직렬별 배치 현황	6	6
〈표 3- 7〉	4유형 지자체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정원 및 직렬별 배치 현황	7	6
〈표 3- 8〉	5유형 지자체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정원 및 직렬별 배치 현황	8	6
〈표 3- 9〉	6유형 지자체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정원 및 직렬별 배치 현황	9	6
〈표 3-10〉	7유형 지자체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정원 및 직렬별 배치 현황	1	7
〈표 3-11〉	시군구 인구 및 복지대상자 규모 현황	3	7
〈표 3-12〉	급여 유형별 직무량 반영을 위한 가중치 산출	4	7
〈표 3-13〉	기존 복지대상자와 복지급여 특성 반영 복지대상자 규모의 비교	4	7
〈표 3-14〉	기존 복지대상자 대비 시군구 본청 정원 현황	5	7
〈표 3-15〉	급여특성 반영 복지대상자 대비 시군구 읍면동 정원 현황	6	7
〈표 3-16〉	1유형 지자체별 복지대상자 대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현황	7	7
〈표 3-17〉	2유형 지자체별 복지대상자 대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현황	8	7
〈표 3-18〉	3유형 지자체별 복지대상자 대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현황	9	7
〈표 3-19〉	4유형 지자체별 복지대상자 대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현황	0	8
〈표 3-20〉	5유형 지자체별 복지대상자 대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현황	1	8
〈표 3-21〉	6유형 지자체별 복지대상자 대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현황	3	8
〈표 3-22〉	7유형 지자체별 복지대상자 대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현황	4	8
〈표 4- 1〉	시군구 유형별 복지 담당 공무원 1인 당 복지수요	9	8
〈표 4- 2〉	시군구 유형별 복지수요 연계 적정 소요인력 기준	9	8
〈표 4- 3〉	시군구 유형별 적정 소요인력 및 증원 소요인력 규모 추계	0	9
〈표 4- 4〉	1유형 지자체별 적정 소요인력 및 증원 소요인력 규모 추계	1	9
〈표 4- 5〉	2유형 지자체별 적정 소요인력 및 증원 소요인력 규모 추계	1	9
〈표 4- 6〉	3유형 지자체별 적정 소요인력 및 증원 소요인력 규모 추계	2	9
〈표 4- 7〉	4유형 지자체별 적정 소요인력 및 증원 소요인력 규모 추계	3	9
〈표 4- 8〉	5유형 지자체별 적정 소요인력 및 증원 소요인력 규모 추계	5	9
〈표 4- 9〉	6유형 지자체별 적정 소요인력 및 증원 소요인력 규모 추계	6	9
〈표 4-10〉	7유형 지자체별 적정 소요인력 및 증원 소요인력 규모 추계	7	9
〈표 4-11〉	시군구 본청 증원 소요인력 기능별 배분·배치 기준 및 인력 규모	9	9

〈표 4-12〉 시군구 본청 증원 소요인력 영역별 배분·배치 기준 및 인력 규모	0	0	1
〈표 4-13〉 읍면동 증원 소요인력 배분·배치 기준 및 인력 규모	1	0	1
〈표 4-14〉 서울시 읍면동의 복지수요 연계 적정 소요인력 기준 적용 시 증원 소요인력	2	0	1
〈표 4-15〉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증원 소요인력	2	0	1
〈표 4-16〉 커뮤니티케어 복지수요 대응 증원 소요인력	4	0	1
〈표 4-17〉 커뮤니티케어 통합돌봄창구 전담 증원 소요인력	4	0	1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수행 프레임워크	1	1
----------------------------	---	---

부표 목차

〈부표 1-1〉 복지기획 및 정책 영역 직무량 분석: 1유형 지자체	1	1	1
〈부표 1-2〉 복지기획 및 정책 영역 직무량 분석: 2유형 지자체	1	1	1
〈부표 1-3〉 복지기획 및 정책 영역 직무량 분석: 3유형 지자체	2	1	1
〈부표 1-4〉 복지기획 및 정책 영역 직무량 분석: 4유형 지자체	2	1	1
〈부표 1-5〉 복지기획 및 정책 영역 직무량 분석: 5유형 지자체	2	1	1
〈부표 1-6〉 복지기획 및 정책 영역 직무량 분석: 6유형 지자체	3	1	1
〈부표 1-7〉 복지기획 및 정책 영역 직무량 분석: 7유형 지자체	3	1	1
〈부표 1-8〉 복지시설 영역 직무량 분석: 1유형 지자체	4	1	1
〈부표 1-9〉 복지시설 영역 직무량 분석: 2유형 지자체	4	1	1
〈부표 1-10〉 복지시설 영역 직무량 분석: 3유형 지자체	5	1	1
〈부표 1-11〉 복지시설 영역 직무량 분석: 4유형 지자체	5	1	1
〈부표 1-12〉 복지시설 영역 직무량 분석: 5유형 지자체	5	1	1
〈부표 1-13〉 복지시설 영역 직무량 분석: 6유형 지자체	6	1	1
〈부표 1-14〉 복지시설 영역 직무량 분석: 7유형 지자체	6	1	1
〈부표 1-15〉 통합조사 영역 직무량 분석: 1유형 지자체	7	1	1
〈부표 1-16〉 통합조사 영역 직무량 분석: 2유형 지자체	7	1	1
〈부표 1-17〉 통합조사 영역 직무량 분석: 3유형 지자체	8	1	1
〈부표 1-18〉 통합조사 영역 직무량 분석: 4유형 지자체	8	1	1
〈부표 1-19〉 통합조사 영역 직무량 분석: 5유형 지자체	8	1	1
〈부표 1-20〉 통합조사 영역 직무량 분석: 6유형 지자체	9	1	1
〈부표 1-21〉 통합조사 영역 직무량 분석: 7유형 지자체	9	1	1
〈부표 1-22〉 통합관리 영역 직무량 분석: 1유형 지자체	0	2	1
〈부표 1-23〉 통합관리 영역 직무량 분석: 2유형 지자체	0	2	1
〈부표 1-24〉 통합관리 영역 직무량 분석: 3유형 지자체	1	2	1
〈부표 1-25〉 통합관리 영역 직무량 분석: 4유형 지자체	1	2	1
〈부표 1-26〉 통합관리 영역 직무량 분석: 5유형 지자체	1	2	1

〈부표 1-27〉	통합관리 영역 직무량 분석: 6유형 지자체	2	2	1
〈부표 1-28〉	통합관리 영역 직무량 분석: 7유형 지자체	2	2	1
〈부표 1-29〉	기초생활보장 영역 직무량 분석: 1유형 지자체	3	2	1
〈부표 1-30〉	기초생활보장 영역 직무량 분석: 2유형 지자체	3	2	1
〈부표 1-31〉	기초생활보장 영역 직무량 분석: 3유형 지자체	4	2	1
〈부표 1-32〉	기초생활보장 영역 직무량 분석: 4유형 지자체	4	2	1
〈부표 1-33〉	기초생활보장 영역 직무량 분석: 5유형 지자체	4	2	1
〈부표 1-34〉	기초생활보장 영역 직무량 분석: 6유형 지자체	5	2	1
〈부표 1-35〉	기초생활보장 영역 직무량 분석: 7유형 지자체	5	2	1
〈부표 1-36〉	자활 영역 직무량 분석: 1유형 지자체	6	2	1
〈부표 1-37〉	자활 영역 직무량 분석: 2유형 지자체	6	2	1
〈부표 1-38〉	자활 영역 직무량 분석: 3유형 지자체	7	2	1
〈부표 1-39〉	자활 영역 직무량 분석: 4유형 지자체	7	2	1
〈부표 1-40〉	자활 영역 직무량 분석: 5유형 지자체	7	2	1
〈부표 1-41〉	자활 영역 직무량 분석: 6유형 지자체	8	2	1
〈부표 1-42〉	자활 영역 직무량 분석: 7유형 지자체	8	2	1
〈부표 1-43〉	희망복지지원 영역 직무량 분석: 1유형 지자체	9	2	1
〈부표 1-44〉	희망복지지원 영역 직무량 분석: 2유형 지자체	9	2	1
〈부표 1-45〉	희망복지지원 영역 직무량 분석: 3유형 지자체	0	3	1
〈부표 1-46〉	희망복지지원 영역 직무량 분석: 4유형 지자체	0	3	1
〈부표 1-47〉	희망복지지원 영역 직무량 분석: 5유형 지자체	0	3	1
〈부표 1-48〉	희망복지지원 영역 직무량 분석: 6유형 지자체	1	3	1
〈부표 1-49〉	희망복지지원 영역 직무량 분석: 7유형 지자체	1	3	1
〈부표 1-50〉	노인 영역 직무량 분석: 1유형 지자체	2	3	1
〈부표 1-51〉	노인 영역 직무량 분석: 2유형 지자체	2	3	1
〈부표 1-52〉	노인 영역 직무량 분석: 3유형 지자체	3	3	1
〈부표 1-53〉	노인 영역 직무량 분석: 4유형 지자체	3	3	1
〈부표 1-54〉	노인 영역 직무량 분석: 5유형 지자체	3	3	1
〈부표 1-55〉	노인 영역 직무량 분석: 6유형 지자체	4	3	1
〈부표 1-56〉	노인 영역 직무량 분석: 7유형 지자체	4	3	1
〈부표 1-57〉	장애인 영역 직무량 분석: 1유형 지자체	5	3	1
〈부표 1-58〉	장애인 영역 직무량 분석: 2유형 지자체	5	3	1
〈부표 1-59〉	장애인 영역 직무량 분석: 4유형 지자체	6	3	1
〈부표 1-60〉	장애인 영역 직무량 분석: 5유형 지자체	6	3	1
〈부표 1-61〉	장애인 영역 직무량 분석: 6유형 지자체	6	3	1
〈부표 1-62〉	장애인 영역 직무량 분석: 7유형 지자체	7	3	1
〈부표 1-63〉	보육 영역 직무량 분석: 1유형 지자체	7	3	1
〈부표 1-64〉	보육 영역 직무량 분석: 2유형 지자체	8	3	1
〈부표 1-65〉	보육 영역 직무량 분석: 3유형 지자체	8	3	1

〈부표 1-66〉 보육 영역 직무량 분석: 4유형 지자체	8...3... 1
〈부표 1-67〉 보육 영역 직무량 분석: 5유형 지자체	9...3... 1
〈부표 1-68〉 보육 영역 직무량 분석: 6유형 지자체	9...3... 1
〈부표 1-69〉 보육 영역 직무량 분석: 7유형 지자체	9...3... 1
〈부표 1-70〉 아동·드림스타트 영역 직무량 분석: 1유형 지자체	0...4... 1
〈부표 1-71〉 아동·드림스타트 영역 직무량 분석: 2유형 지자체	0...4... 1
〈부표 1-72〉 아동·드림스타트 영역 직무량 분석: 3유형 지자체	1...4... 1
〈부표 1-73〉 아동·드림스타트 영역 직무량 분석: 4유형 지자체	1...4... 1
〈부표 1-74〉 아동·드림스타트 영역 직무량 분석: 5유형 지자체	1...4... 1
〈부표 1-75〉 아동·드림스타트 영역 직무량 분석: 6유형 지자체	2...4... 1
〈부표 1-76〉 아동·드림스타트 영역 직무량 분석: 7유형 지자체	2...4... 1
〈부표 1-77〉 청소년 영역 직무량 분석: 1유형 지자체	3...4... 1
〈부표 1-78〉 청소년 영역 직무량 분석: 2유형 지자체	3...4... 1
〈부표 1-79〉 청소년 영역 직무량 분석: 3유형 지자체	4...4... 1
〈부표 1-80〉 청소년 영역 직무량 분석: 4유형 지자체	4...4... 1
〈부표 1-81〉 청소년 영역 직무량 분석: 5유형 지자체	4...4... 1
〈부표 1-82〉 청소년 영역 직무량 분석: 6유형 지자체	5...4... 1
〈부표 1-83〉 청소년 영역 직무량 분석: 7유형 지자체	5...4... 1
〈부표 1-84〉 여성·가족·다문화 영역 직무량 분석: 1유형 지자체	6...4... 1
〈부표 1-85〉 여성·가족·다문화 영역 직무량 분석: 2유형 지자체	6...4... 1
〈부표 1-86〉 여성·가족·다문화 영역 직무량 분석: 3유형 지자체	7...4... 1
〈부표 1-87〉 여성·가족·다문화 영역 직무량 분석: 4유형 지자체	7...4... 1
〈부표 1-88〉 여성·가족·다문화 영역 직무량 분석: 5유형 지자체	7...4... 1
〈부표 1-89〉 여성·가족·다문화 영역 직무량 분석: 6유형 지자체	8...4... 1
〈부표 1-90〉 여성·가족·다문화 영역 직무량 분석: 7유형 지자체	8...4... 1
〈부표 2- 1〉 상담 기능 직무량 분석: 1유형	9...4... 1
〈부표 2- 2〉 상담 기능 직무량 분석: 2유형	9...4... 1
〈부표 2- 3〉 상담 기능 직무량 분석: 3유형	9...4... 1
〈부표 2- 4〉 상담 기능 직무량 분석: 4유형	0...5... 1
〈부표 2- 5〉 상담 기능 직무량 분석: 5유형	0...5... 1
〈부표 2- 6〉 상담 기능 직무량 분석: 6유형	0...5... 1
〈부표 2- 7〉 상담 기능 직무량 분석: 7유형	1...5... 1
〈부표 2- 8〉 신청·접수 기능 직무량 분석: 1유형	1...5... 1
〈부표 2- 9〉 신청·접수 기능 직무량 분석: 2유형	1...5... 1
〈부표 2-10〉 신청·접수 기능 직무량 분석: 3유형	2...5... 1
〈부표 2-11〉 신청·접수 기능 직무량 분석: 4유형	2...5... 1
〈부표 2-12〉 신청·접수 기능 직무량 분석: 5유형	2...5... 1
〈부표 2-13〉 신청·접수 기능 직무량 분석: 6유형	3...5... 1
〈부표 2-14〉 신청·접수 기능 직무량 분석: 7유형	3...5... 1

〈부표 2-15〉 대상자 사후관리 기능 직무량 분석: 1유형	3·5·1
〈부표 2-16〉 대상자 사후관리 기능 직무량 분석: 2유형	4·5·1
〈부표 2-17〉 대상자 사후관리 기능 직무량 분석: 3유형	4·5·1
〈부표 2-18〉 대상자 사후관리 기능 직무량 분석: 4유형	4·5·1
〈부표 2-19〉 대상자 사후관리 기능 직무량 분석: 5유형	5·5·1
〈부표 2-20〉 대상자 사후관리 기능 직무량 분석: 6유형	5·5·1
〈부표 2-21〉 대상자 사후관리 기능 직무량 분석: 7유형	5·5·1
〈부표 2-22〉 찾아가는 방문 상담 기능 직무량 분석: 1유형	6·5·1
〈부표 2-23〉 찾아가는 방문 상담 기능 직무량 분석: 2유형	6·5·1
〈부표 2-24〉 찾아가는 방문 상담 기능 직무량 분석: 3유형	6·5·1
〈부표 2-25〉 찾아가는 방문 상담 기능 직무량 분석: 4유형	7·5·1
〈부표 2-26〉 찾아가는 방문 상담 기능 직무량 분석: 5유형	7·5·1
〈부표 2-27〉 찾아가는 방문 상담 기능 직무량 분석: 6유형	7·5·1
〈부표 2-28〉 찾아가는 방문 상담 기능 직무량 분석: 7유형	8·5·1
〈부표 2-29〉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능 직무량 분석: 1유형	8·5·1
〈부표 2-30〉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능 직무량 분석: 2유형	8·5·1
〈부표 2-31〉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능 직무량 분석: 3유형	9·5·1
〈부표 2-32〉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능 직무량 분석: 4유형	9·5·1
〈부표 2-33〉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능 직무량 분석: 5유형	9·5·1
〈부표 2-34〉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능 직무량 분석: 6유형	9·5·1
〈부표 2-35〉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능 직무량 분석: 7유형	0·6·1
〈부표 2-36〉 사례관리 기능 직무량 분석: 1유형	0·6·1
〈부표 2-37〉 사례관리 기능 직무량 분석: 2유형	0·6·1
〈부표 2-38〉 사례관리 기능 직무량 분석: 3유형	0·6·1
〈부표 2-39〉 사례관리 기능 직무량 분석: 4유형	1·6·1
〈부표 2-40〉 사례관리 기능 직무량 분석: 5유형	1·6·1
〈부표 2-41〉 사례관리 기능 직무량 분석: 6유형	1·6·1
〈부표 2-42〉 사례관리 기능 직무량 분석: 7유형	1·6·1
〈부표 2-43〉 민관협력 기능 직무량 분석: 1유형	2·6·1
〈부표 2-44〉 민관협력 기능 직무량 분석: 2유형	2·6·1
〈부표 2-45〉 민관협력 기능 직무량 분석: 3유형	2·6·1
〈부표 2-46〉 민관협력 기능 직무량 분석: 4유형	2·6·1
〈부표 2-47〉 민관협력 기능 직무량 분석: 5유형	3·6·1
〈부표 2-48〉 민관협력 기능 직무량 분석: 6유형	3·6·1
〈부표 2-49〉 민관협력 기능 직무량 분석: 7유형	3·6·1
〈부표 2-50〉 기타 행정 업무 기능 직무량 분석: 1유형	3·6·1
〈부표 2-51〉 기타 행정 업무 기능 직무량 분석: 2유형	4·6·1
〈부표 2-52〉 기타 행정 업무 기능 직무량 분석: 3유형	4·6·1
〈부표 2-53〉 기타 행정 업무 기능 직무량 분석: 4유형	4·6·1



〈부표 2-54〉 기타 행정 업무 기능 직무량 분석: 5유형	4	6	1
〈부표 2-55〉 기타 행정 업무 기능 직무량 분석: 6유형	5	6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직무분석을 토대로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적정 소요인력 규모를 산정하고 효과적인 인력 배치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행안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정책과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정책 추진을 위한 증원 소요인력 규모를 산출함.
-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설정하여 추구함.
 -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지업무 수행의 충실성 강화 및 지역사회 미충족 복지수요 대응력 강화를 도모함.
 - 지자체의 환경적 특수성을 반영한 인력 배치 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자체 복지인력의 불균형 현상을 완화함.

2. 주요 연구 결과

□ 시군구 본청 직무량 분석

- 업무의 충실성을 강화하고 미충족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시군구 본청의 적정 인력규모를 분석한 결과, 실제 현원인 평균 65.52명에 비해 40.84명이 더 필요한 평균 106.35명으로 파악됨.

〈표 1〉 시군구 본청 기능별 직무량 총괄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65.52	100.00	106.35	100.00	40.84	162.33
상담	12.52	19.10	20.16	18.95	7.64	161.02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6.23	9.51	10.01	9.41	3.78	160.67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6.03	9.20	9.32	8.76	3.29	154.56
사업 기획 및 홍보	4.31	6.58	7.32	6.88	3.01	169.84
사업 관리	5.66	8.63	9.23	8.68	3.57	163.07
대상자 관리	7.51	11.46	12.58	11.83	5.07	167.51
시설 관리	6.73	10.28	11.27	10.60	4.54	167.46
자원 관리	1.42	2.17	2.51	2.36	1.09	176.76
단체 및 법인 관리	4.13	6.31	6.64	6.25	2.51	160.77
행사 참여	3.28	5.01	4.95	4.65	1.67	150.91
업무관련 역량 개발	2.87	4.38	4.96	4.67	2.09	172.82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4.83	7.37	7.39	6.95	2.56	153.00

- 시군구 본청 인력규모를 7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자체 유형에 따라 인력규모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차이가 가장 큰 기능은 1유형(86.76명)이며, 그 다음으로 3유형(60.49명)과 4유형(56.42명)의 순이며, 농촌형 지자체인 7유형(18.49명)과 5유형(24.59명)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의 차이가 비교적 적은 수준임.

〈표 2〉 시군구 본청 유형별 직무량 총괄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평균	65.52	100.00	106.35	100.00	40.84	162.33
1유형: 광역 도시형	122.37	186.77	209.13	196.64	86.76	170.90
2유형: 일반 도시형	61.93	94.52	96.76	90.98	34.83	156.24
3유형: 대규모 제한 도시형	91.41	139.52	151.90	142.82	60.49	166.17
4유형: 소규모 제한 도시형	74.67	113.98	131.09	123.26	56.42	175.55
5유형: 도·농형	64.96	99.14	103.65	97.46	38.69	159.56
6유형: 대규모 농촌형	47.73	72.85	72.32	68.00	24.59	151.52
7유형: 소규모 농촌형	41.07	62.69	59.56	56.00	18.49	145.01

□ 시군구 읍면동 직무량 분석

- 업무의 충실성을 강화하고 미충족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 인력규모는 실제 현원인 평균 5.14명에 비해 2.39명이 더 필요한 평균 7.53명임.

〈표 3〉 시군구 읍면동 영역별 직무량 총괄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5.14	100.00	7.53	100.00	2.39	146.50
상담	1.56	30.35	2.37	31.47	0.81	151.92
신청·접수	0.85	16.54	1.20	15.94	0.35	141.18
대상자 사후관리	0.76	14.79	1.13	15.01	0.37	148.68
찾아가는 방문 상담	0.65	12.65	0.97	12.88	0.32	149.23
복지사각지대 발굴	0.25	4.86	0.36	4.78	0.11	144.00
사례관리	0.39	7.59	0.58	7.70	0.19	148.72
민관협력	0.21	4.09	0.30	3.98	0.09	142.86
기타 행정 업무	0.48	9.34	0.62	8.23	0.14	129.17

- 읍면동 인력규모를 7대 유형으로 구분한 결과, 지자체 유형별로 인력규모의 편차가 존재하는데,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차이가 큰 유형은 3유형으로 4.68명에 달하며, 그 다음으로

1유형 광역 도시형(2.90명), 2유형 일반 도시형(2.47명), 4유형 소규모 제한 도시형(2.38명) 등의 순임.

〈표 4〉 시군구 읍면동 유형별 직무량 총괄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평균	5.14	100.00	7.53	100.00	2.39	146.50
1유형: 광역 도시형	6.00	117.88	8.90	119.52	2.90	148.40
2유형: 일반 도시형	4.72	92.77	7.19	96.54	2.47	152.30
3유형: 대규모 제한 도시형	8.99	176.56	13.66	183.39	4.68	152.03
4유형: 소규모 제한 도시형	4.98	97.94	7.37	98.93	2.38	147.84
5유형: 도·농형	4.43	87.05	6.16	82.75	1.73	139.13
6유형: 대규모 농촌형	3.72	72.99	5.17	69.34	1.45	139.05
7유형: 소규모 농촌형	3.62	71.10	5.19	69.62	1.57	143.33

□ 복지수요 대비 시군구 본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정원

○ 사회복지직, 행정직 등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시군구 본청 정원을 복지대상자 규모를 고려하여 지자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유형에 따라 본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정원 1인당 복지대상자 규모에 큰 편차가 존재함.

－ 각 지자체 유형 내에서 존재하는 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임.

〈표 5〉 기존 복지대상자 대비 시군구 본청 정원 현황

(단위: 명)

유형	인구규모 평균	기존 복지대상자 평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정원 1인당 복지대상자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전체	226,042	49,851	670	254.60	1,685	196
1유형: 광역 도시형	789,924	148,749	954	197.89	1,412 (남양주시)	686 (안산시)
2유형: 일반 도시형	220,026	47,294	752	285.52	1,274 (양주시)	218 (과천시)
3유형: 대규모 제한 도시형	394,297	71,523	706	287.50	1,685 (동대문구)	336 (중구)
4유형: 소규모 제한 도시형	279,761	63,043	799	244.71	1,380 (인천남동구)	260 (대구수성구)
5유형: 도·농형	220,175	54,862	707	153.13	1,137 (제주시)	453 (문경시)
6유형: 대규모 농촌형	75,834	23,635	599	126.31	905 (달성군)	356 (철원군)
7유형: 소규모 농촌형	32,715	11,901	395	110.44	671 (보성군)	196 (울릉군)

주. 기존 복지대상자는 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급여, 기타복지(보편적 복지 등) 대상자임(중복 제외).

□ 복지수요 대비 시군구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정원

○ 급여 특성을 반영한 복지대상자 규모를 고려하여 시군구 읍면동 정원을 지자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형에 따라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정원 1인당 복지대상자 규모에 큰 차이가 있음.

– 각 지자체 유형 내에서 존재하는 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임.

〈표 6〉 급여특성 반영 복지대상자 대비 시군구 읍면동 정원 현황

(단위: 명)

유형	평균 인구규모	평균 급여특성 반영 복지대상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정원 1인당 복지대상자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전체	14,819	3,265	591	235.02	1,511	186
1유형: 광역 도시형	23,834	5,033	833	158.94	1,028 (김해시)	547 (창원시)
2유형: 일반 도시형	18,336	4,128	670	207.19	1,210 (광주시)	300 (태백시)
3유형: 대규모 제한 도시형	23,249	4,601	517	145.13	776 (도봉구)	243 (종로구)
4유형: 소규모 제한 도시형	18,156	4,282	819	205.98	1,271 (울산북구)	367 (대전중구)
5유형: 도·농형	10,564	2,754	571	151.50	1,013 (아산시)	318 (김제시)
6유형: 대규모 농촌형	6,672	2,402	501	211.57	1,511 (기장군)	330 (금산군)
7유형: 소규모 농촌형	3,757	1,544	366	80.59	720 (증평군)	186 (울릉군)

주1. 개별 읍면동 단위의 평균값이 아니라 시군구 단위에서의 평균값임. 읍면동의 경우 개별 읍면동 단위가 아닌 해당 시군구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정원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주2. 복지급여 유형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이 업무처리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 읍면동 직무량 분석 자료를 토대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급여, 보편적 복지 등 기타복지의 직무량 가중치를 설정하여, 복지급여 특성을 반영한 복지대상자 규모를 산출함.

□ 시군구 전달체계 정상화 적정·증원 소요인력 추계

○ 시군구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 유형별 평균 복지대상자 규모와 적정 기준 직무량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복지수요와 연계한 적정 소요인력 기준을 설정함.

○ 이 기준을 적용한 결과, 전국 기준 시군구 본청의 적정 인력규모는 준 24,343명, 읍면동은 25,929명으로 시군구 전체 50,272명이 산출됨.

○ 그 다음으로 적정 소요인력 대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정원을 고려하여 증원 소요인력을 산출한 결과, 본청은 전국 기준으로 9,021명(정원 15,530명 대비 58%)이 증원이 필요하고,

읍면동의 경우 6,779명(정원 19,731명 대비 34.4%)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어, 시군구 전체 증원 소요인력은 총 15,800명(정원 35,261명 대비 44.8%)이 산출됨.

- 본청 정원이 복지수요 연계 적정 소요인력 기준을 충족해 증원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시군구는 19개소로 전체 229개 시군구 가운데 8.3%에 불과함.
- 읍면동 정원에서 복지수요 대비 적정 인력 규모를 이미 충원하고 있는 시군구는 53개소로 전체 시군구 가운데 23.4%에 그침.

〈표 7〉 시군구 유형별 적정 소요인력 및 증원 소요인력 규모 추계

(단위: 명)

구분	전체			본청			읍면동		
	정원 (평균)	적정 소요인력 (평균)	증원 소요인력 (평균)	정원 (평균)	적정 소요인력 (평균)	증원 소요인력 (평균)	정원 (평균)	적정 소요인력 (평균)	증원 소요인력 (평균)
전체	35,261 (154.0)	50,272 (219.5)	15,800 (69.0)	15,530 (67.8)	24,343 (106.3)	9,021 (39.4)	19,731 (5.6)	25,929 (7.4)	6,779 (1.9)
1유형: 광역 도시형	5,049 (360.6)	6,810 (486.4)	1,783 (127.4)	2,269 (162.1)	2,934 (209.6)	671 (47.9)	2,780 (5.9)	3,876 (8.3)	1,112 (2.4)
2유형: 일반 도시형	3,457 (133.0)	4,800 (184.6)	1,514 (58.2)	1,551 (59.7)	2,506 (96.4)	1,002 (38.5)	1,906 (6.1)	2,294 (7.3)	512 (1.6)
3유형: 대규모 제한 도시형	6,406 (256.2)	9,472 (378.9)	3,185 (127.4)	2,620 (104.8)	3,807 (152.3)	1,257 (50.3)	3,786 (8.9)	5,665 (13.4)	1,928 (4.5)
4유형: 소규모 제한 도시형	7,077 (160.8)	10,955 (249.0)	4,034 (91.7)	3,365 (76.5)	5,782 (131.4)	2,489 (56.6)	3,712 (5.5)	5,173 (7.6)	1,545 (2.3)
5유형: 도·농형	6,807 (179.1)	8,904 (234.3)	2,187 (57.6)	2,865 (75.4)	3,935 (103.6)	1,083 (28.5)	3,942 (5.0)	4,969 (6.3)	1,104 (1.4)
6유형: 대규모 농촌형	3,757 (91.6)	5,141 (125.4)	1,597 (39.0)	1,611 (39.3)	2,938 (71.7)	1,327 (32.4)	2,146 (4.6)	2,203 (4.7)	270 (0.6)
7유형: 소규모 농촌형	2,708 (66.0)	4,190 (102.2)	1,500 (36.6)	1,249 (30.5)	2,441 (59.5)	1,192 (29.1)	1,459 (4.1)	1,749 (4.9)	308 (0.9)

□ 시군구 본청 기능별·영역별 인력 배분 및 배치

- 인력 배분·배치 기준은 지자체 복지행정에서의 업무 충실성 및 복지수요 대응력 강화를 도모한 것으로, 직무분석에서 도출된 실제 기준 대비 적정 기준 인력 규모의 차이와 비율에 근거하여 설정하였고, 이 기준에 따라 시군구 본청의 기능별로 전국 단위 증원 소요인력 9,021명을 배분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8〉 시군구 본청 증원 소요인력 기능별 배분·배치 기준 및 인력 규모

(단위: 명, %)

구분	배치 기준		배분 기준		증원 소요인력 배분	
	실제 대비 적정 인력 비율	증원 요구도 순위	실제 대비 적정 인력 차이	배분 비중	인력 배분	지자체 평균 ¹⁾
전체	—	—	37.06	100	9,021	39.4
자원 관리	176.76	1	1.09	2.94	265	1.2
사업 기획 및 홍보	169.84	2	3.01	8.12	733	3.2
대상자 관리	167.51	3	5.07	13.68	1,234	5.4
시설 관리	167.46	4	4.54	12.25	1,105	4.8
사업 관리	163.07	5	3.57	9.63	869	3.8
상담	161.02	6	7.64	20.62	1,860	8.1
단체 및 법인 관리	160.77	7	2.51	6.77	611	2.7
복지급여·서비스신청·접수	160.67	8	3.78	10.20	920	4.0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154.56	9	3.29	8.88	801	3.5
일반행정업무(복지이외)	153	10	2.56	6.91	623	2.7

□ 시군구 읍면동 기능별 인력 배분 및 배치

○ 실제 기준 대비 적정 기준 인력 규모의 차이와 비율에 관한 직무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시군구 읍면동 전국 단위의 증원 소요인력 6,779명을 기능별로 배분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9〉 읍면동 증원 소요인력 배분·배치 기준 및 인력 규모

(단위: %, 명)

구분	배치 기준		배분 기준		증원 소요인력 배분	
	실제 대비 적정 인력 비율	증원 요구도 순위	실제 대비 적정 인력 차이	배분 비중	인력 배분	읍면동 평균 ¹⁾
전체	—	—	2.38	100	6,779	1.9
상담	151.92	1	0.81	34.03	2,307	0.7
찾아가는 방문 상담	149.23	2	0.32	13.45	911	0.3
사례관리	148.72	3	0.19	7.98	541	0.2
대상자 사후관리	148.68	4	0.37	15.55	1,054	0.3
복지사각지대 발굴	144	5	0.11	4.62	313	0.1
민관협력	142.86	6	0.09	3.78	256	0.1
신청·접수	141.18	7	0.35	14.71	997	0.3
기타 행정 업무	129.17	8	0.14	5.88	399	0.1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의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증원 소요인력 추계

○ 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전국 확대를 위한 추가 확충 인력규모를 산출한 결과, 총 14,479명이 추계됨.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증원 소요인력의 산정 방법은 ① 서울시 읍면동의 적정 소요인력 기준(복지대상자 340명 당 공무원 1명)을 적용해 총 증원 인력 규모를 산출한 후,

- ②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단위업무와 관련된 인력규모를 합산하는 방식을 적용함.

□ 커뮤니티케어 통합돌봄창구 전담 증원인력 추계

- 커뮤니티케어 읍면동 통합돌봄창구 전담 증원인력 규모는 신규 복지대상자 대응 인력인 1,723명과 전달체계 기능 정상화를 위한 인력 5,024명을 포함해 총 6,747명임.
- 신규 복지대상자는 커뮤니티케어의 잠재적 복지수요에 해당하는 시설과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인 74만명에 기초수급권자 직무량 기준 업무량을(가중치 1.484)을 적용해 복지수요 1,098,160명 산출함.
- 이를 지역별 복지대상자 규모에 비례하여 할당한 후, 지자체 유형별 복지수요 연계 적정 인력 단위를 적용하고, 통합돌봄창구 주요 기능인 상담과 신청·접수, 대상자 사후관리, 사례관리, 민관협력 등과 관련된 증원 소요인력 1,723명을 산출함.
- 읍면동의 업무충실성과 대응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 없이 신규 사업을 원활히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읍면동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증원 소요인력으로 5,024명을 산출함.

3. 정책 제언

□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적정 인력 확충 필요

- 복지인력의 부족은 정책집행의 효과성과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저해하는 핵심적 요인임.
- 시군구 읍면동뿐 아니라 본청에서도 공공전달체계 내실화에 필수적인 고유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적정 인력 규모를 배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증원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큰 자원 관리 기능, 사업 기획 및 홍보, 대상자 관리 등에 우선적인 인력 배치가 요구됨.

□ 지자체별 복지 인력 배치 격차 완화 시급

- (정보공개) 지자체의 사회복지공무원 정원 및 배치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지자체 전체 공무원 현황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어 있으나 사회복지공무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임.
- (기준인건비 산정 방식 변경) 교부세에 포함된 기준인건비 산정 방식에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급여대상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기준인건비 산정을 위한 10대 지표(인구수, 면적, 주간인구수, 65세이상 인구수, 사

업체수, 자동차수, 장애인수, 법정민원 건수, 외국인수, 농경지 면적)에는 지자체 복지수요가 일부만 반영되는 한계가 있음.

□ 사회복지직 별도정원제 도입 검토

- 지자체별 인력 배치의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현행 공무원 총정원 관리방식이 아닌 사회복지직렬 분리해 정원을 관리해, 사회복지공무원의 합리적인 증원과 지자체 복지수요에 탄력적인 인력편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 사회복지 사무에 일반행정직을 배치하는 것은 잦은 순화보직으로 인해 업무 효율성과 연속성을 저해함.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국정과제로 2022년까지 복지공무원 1.2만명 배치가 확정된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정책과,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추진에 따른 신규 복지인력 수요가 발생함.
- 본 연구는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직무분석을 토대로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적정 소요인력 규모를 산정하고 효과적인 인력 배치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설정하여 추구함.
 -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지업무 수행의 충실성 강화 및 지역사회 미충족 복지수요 대응력 강화를 도모함.
 - 지자체의 환경적 특수성을 반영한 인력 배치 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자체 복지인력의 불균형 현상을 완화함.
 - 행안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정책과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정책 추진을 위한 증원 소요인력 규모를 산출함.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프레임워크

- 본 연구는 시군구 직무 분석, 적정·증원 소요인력 산정, 증원 인력 배치 방안 도출의 3단계로 구성됨.

[그림 1-1] 연구 수행 프레임워크

단계	과업	산출물
1	시군구 직무 분석	기능별 실제 기준과 적정 기준 간 직무량 비교 지자체 유형별 실제 기준과 적정 기준 간 직무량 비교
2	적정·증원 소요인력 산정	지자체 유형별 복지수요 대비 적정 인력 단위 도출 지자체 유형별 적정 인력 규모 추계 지자체 정원 대비 증원 인력 규모 산정
3	증원 소요인력 배치 방안 도출	기능별 인력 배분 기준 및 우선 배치 기준 설정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담 증원 소요인력 산출 읍면동 통합돌봄장구 전담 증원 소요인력 산출

2. 시군구 직무 분석

□ 표준 직무분류체계 구성

○ 업무량 분석의 기본단위가 되는 직무분류체계는 시군구 본청과 읍면동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기능과 단위업무로 표준화한 것임(강혜규 외, 2017).

- 시군구 본청 직무분류체계의 기능은 상담, 복지급여·서비스 신청 및 접수,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사업 기획 및 홍보, 사업 관리, 대상자 관리, 시설 관리, 자원 관리, 단체 및 법인 관리, 행사 참여, 업무관련 역량 개발, 일반 행정업무 등 12개 기능으로 구성됨.
- 시군구 본청의 정책 영역별 분류체계는 복지기획 및 정책, 복지시설, 통합조사, 통합관리, 기초생활보장, 자활, 희망복지지원, 노인, 장애인, 보육, 아동·드림스타트, 청소년, 여성·가족다문화 등 13개 영역으로 구성함.

〈표 1-1〉 시군구 본청 표준직무분류체계

기능	단위 업무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방 민원 및 전화·인터넷·서식민원)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 관련 초기 상담, 이의 신청 및 불만 관련 민원 응대, 서비스 안내 등 • (방문)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 관련 대상자 가구 방문, 민원 처리를 위한 타기관(경찰서, 보건소, 학교, 각종 시설 등) 방문
복지급여·서비스 신청 및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자 발굴, 선정, 추천, 복지급여 신청 접수, 서류 검토 및 확인, 서류 전달 및 회신, 자료제출 요청, 시스템 입력, 안내문 발송 등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 지급(자료생성내역 확인), 예산 관리 및 정산, 바우처 예약금 지급 정산
사업 기획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개발 및 기획, 사업의 평가, 사업 홍보 관련 업무
사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실적 및 성과 확인, 사업 운영 관련 문제 해결 및 타부서(기관)과의 협조, 사업관련 상부기관 자료 제공(보고), 사업관련 운영위원회 개최 및 관리
대상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변동사항 확인 및 관리(현금급여 수급), 대상자 (사후)관리(재가서비스), 대상자 (사후)관리(시설거주자), 대상자 (사후)관리(자금 융자)
시설 관리 (거주시설, 이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등록, 설치 지원, 기능보강 등, 시설 위탁 관리, 시설의 운영 관리(운영비 지원-정산, 예(결)산서 검토·공고), 운영 점검, 지도감독, 행정처분, 거주자 관리, 이용자 관리
자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기관과의 연계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원 발굴 및 관리, 후원 및 기부물품 등 관리
단체 및 법인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및 법인 운영 관리, 보조금 집행·정산 및 지도·점검 등
행사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주관 행사 추진, 관내 타기관 주최 행사 지원
업무관련 역량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관련 회의 참석, 업무관련 교육 참여, 업무수행을 위한 지침 및 매뉴얼 숙지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안내, 결재 및 기안, 보고, 자료 작성, 업무외 자체행사 참여, 선거관련 업무, 타업무 지원 등

- 읍면동 주민센터 직무분류체계는 상담, 신청·접수, 대상자 사후관리, 찾아가는 방문 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례관리, 민관협력, 기타 행정업무 등 8대 기능으로 구성됨.

〈표 1-2〉 시군구 읍면동 표준직무분류체계

기능	단위업무
상담	• 급여 신청자 초기상담 및 신청 안내(내방, 전화, 방문 민원 모두 포함)
신청·접수	• 급여신청 제출서류 검토 및 확인(신청서, 기타 구비서류 등), 신청접수 및 시스템 입력
대상자 사후관리	• 관할지역 대상자 변동(자격 등)내역 관리, 복지대상자 사후관리
찾아가는 방문 상담	• 찾아가는 방문상담 계획 수립, 담당 공무원의 직접 방문, 지사협, 통장 등 인적안전망을 통한 방문상담, 사각지대 취약정보를 통한 방문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	• 전수조사 계획 수립, 전수조사 수행, 전수조사 사후관리(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의뢰 등)
사례관리	• 초기상담, 사례회의,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종결 대상자 사후관리(모니터링)
민관협력	• 민관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 복지자원 관리, 민관협력 사업
기타 행정 업무	• 행사 지원, 업무 지원, 기타 행정 업무 지원

□ 시군구 본청 및 읍면동 직무분석

- 기능별 직무량은 본청과 읍면동의 표준 직무분류체계에 기초하여 실제 기준 직무량과 적정 기준 직무량을 인력 단위(manpower)로 산출함.
 - “지자체 복지인력 현황 분석 및 수급방안 연구”(강혜규 외, 2017)에서 전국 시군구 지자체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수집한 ‘지자체 복지 직무 실태 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함.
- 실제 기준 직무량(manpower): 법정 공휴일과 연간 평균 연가사용일을 제외하고, 1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제로 투입한 근로시간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임.
 - 조사에 응답한 복지인력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293시간임.
- 적정 기준 직무량(manpower): 실제 기준 직무량에 추가 투입 필요 시간을 합산한 후 연간 적정근무 가능시간으로 나눈 값임.
 - 추가 투입 필요 시간은 업무 지침·규정을 준수하고 복지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한 시간으로 정의됨.
 - 연간 공무원 1인당 적정근무 가능시간은 1,966시간임.

〈표 1-3〉 1인당 연간 적정근무 가능시간(2017년 기준)

법정 공휴일 (A)	사고 일수* (B)	표준근무 가능일수(C) [C=365-(A+B)]	표준근무 가능시간(D) [D=C*8h]	표준근무 가능시간(E) [E=D÷(1+여유율*)]	적정근무 가능시간(F) [F=E+적정OT*]
119	8.4	237.6	1900.8	1,728	1,966

주: 1) 사고일수: 공무원 연간 평균 연가사용일

2) 적정OT: 일일 1시간 초과근무 가정

3) 여유율: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시하는 작업자의 생리적 욕구 등으로 지연되는 시간의 비율(약 10%)

□ 시군구 7대 유형화

- 시군구 7대 유형화는 행정안전부 5대 유형에 인구규모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것으로,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구분하고, 군 또한 인구규모의 편차를 고려해 인구 규모의 반분위를 기준으로 다시 세분화한 것임.
- 광역 도시형(인구 50만 이상 시, 14개), 일반 도시형(인구 50만 미만 시, 27개), 대규모 제한 도시형(서울특별시 자치구, 25개), 소규모 제한 도시형(광역시 자치구, 44개), 도·농형(도·농 복합시, 36개), 대규모 농촌형(인구 4.6만 이상 군, 41개), 소규모 농촌형(인구 4.6만 미만 군, 41개)
- 행정구역상 시군구에 해당되지 않으나, 시군구로 분석에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역 유형 중 일반 도시형으로 분류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 및 서귀포시는 도·농형으로 분류함.
- 시군구 읍면동 또한 시군구 7대 유형에 속한 읍면동을 구분하여 분석함.

3. 적정·증원 소요인력 산정

□ 유형별 복지수요 연계 적정 인력 단위 도출

- 직무분석에서 도출된 유형별 적정 인력 규모 결과에 기초하여, 시군구 본청과 읍면동 유형별로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적정 복지수요 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적정 소요인력 규모 산정 기준으로 활용함.
- 복지수요는 기초수급권과 차상위급여, 기타복지(보편적 복지 등) 대상자 규모(중복 제외)로 측정함.
- 대면업무가 중심이 되는 읍면동의 경우, 복지급여의 특성에 따라 직무량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읍면동 직무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급여 특성을 반영한 복지대상자 규모를 재산출하여 적용함.

□ 유형별 적정 소요인력 규모 추계

- 복지수요를 반영한 적정 소요인력 산정 기준에 따라 시군구 본청과 읍면동의 적정 소요인력 규모를 추계함.
- 즉, 적정 소요인력 규모는 복지업무 수행의 충실성 및 복지수요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것과 지자체의 환경적 여건이 차별적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임.

□ 지자체 증원 소요인력 규모 산정

- 적정 소요인력 규모가 추계되면 지자체별 본청 및 읍면동의 정원 비교를 통해 증원 소요인력 규모를 산출함.

4. 증원 소요인력 배치방안 도출

□ 기능별 증원 소요인력 배분·배치 기준 설정

- 업무 충실성과 복지수요 대응력을 강화를 반영한 실제 기준 대비 적정 기준 인력 규모의 차이에 근거하여 배분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증원 소요인력의 기능별 배분 규모를 산정함.
- 증원 소요인력의 배치 기준은 실제 기준 대비 적정 기준의 비율인 증원 요구도에 따라 설정된 것임.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및 커뮤니티케어 증원 소요인력 산출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과 관련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증원 소요인력 규모를 산출함.
- 커뮤니티케어의 경우, 읍면동 통합돌봄창구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증원 소요인력 규모를 산출함.

제3절 분석 자료

□ 직무 분석 원자료

- “지자체 복지인력 현황 분석 및 수급방안 연구”(강혜규 외, 2017)에서 전국 시군구 지자체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수집한 ‘지자체 복지 직무 실태 조사’를 원자료를 활용함.
 - － 이는 그간 본격적으로 파악된 적이 없는 지자체 복지 직무수행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전국 규모로 제공하고 있는 유일한 자료임.

□ 조사 대상 및 범위

- 전국 시군구 복지행정부서에 대한 조사는 업무성격이 상이한 전문영역을 고려하여 13개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표준 직무분류체계를 적용해 공통된 직무에 대해 응답이 가능하도록 설계함.

○ 전국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 설문 또한 표준 직무분류체계를 적용해 읍면동의 업무의 상이성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설계함.

□ 표본 현황

○ 전국 229개 시군구 본청(세종시 포함) 중 175개(76.42%)의 응답표본이 분석에 활용되어 대표성을 확보함.

－ 시군구 본청의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정원 15,530명 중 8,893명(57.26%)

○ 전국 3,505개 읍면동 중 2,416개 읍면동(68.93%)을 포함함.

－ 시군구 읍면동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정원 19,731명 중 12,095명(61.29%)

〈표 1-4〉 분석 자료 표본 현황

(단위: 개, %)

유형	본청			읍면동		
	전체	표본	비중	전체	표본	비중
전체	229	175	76.42	3,505	2,416	68.93
1유형: 광역 도시형	14	12	85.71	468	356	76.07
2유형: 일반 도시형	26	19	73.08	314	162	51.59
3유형: 대규모 제한 도시형	25	14	56.00	424	192	45.28
4유형: 소규모 제한 도시형	44	38	86.36	679	535	78.79
5유형: 도·농형	38	33	86.84	792	649	81.94
6유형: 대규모 농촌형	41	31	75.61	470	307	65.32
7유형: 소규모 농촌형	41	28	68.29	358	215	60.06

제 2 장

시군구 직무분석

제1절 시군구 본청 직무량 분석

제2절 시군구 읍면동 직무량 분석

2

시군구 직무분석 <

<

제1절 시군구 본청 직무량 분석

1. 총괄

가. 기능별 직무량

- 시군구 본청에서 업무의 충실성을 강화하고 미충족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 인력규모를 분석한 결과, 실제 현원인 평균 65.52명에 비해 40.84명이 더 필요한 평균 106.35명으로 파악됨.
 - 이는 현원의 1.6배에 해당해 시군구 본청의 인력 확충 필요성이 매우 큼을 시사함.
-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차이가 가장 큰 기능은 상담(7.64명)이며, 그 다음으로 대상자 관리(5.07명), 시설 관리(4.54명),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3.78명), 사업 관리(3.57명) 등의 순임.
 - 반면, 자원관리(1.09명), 행사 참여(1.67명), 업무관련 역량 개발(2.09명)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다만, 행사 참여는 적정 인력규모가 현원의 1.5배인데 반해 자원 관리의 1.76배 이상임.

<표 2-1> 시군구 본청 기능별 직무량 총괄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65.52	100.00	106.35	100.00	40.84	162.33
상담	12.52	19.10	20.16	18.95	7.64	161.02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6.23	9.51	10.01	9.41	3.78	160.67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6.03	9.20	9.32	8.76	3.29	154.56
사업 기획 및 홍보	4.31	6.58	7.32	6.88	3.01	169.84
사업 관리	5.66	8.63	9.23	8.68	3.57	163.07
대상자 관리	7.51	11.46	12.58	11.83	5.07	167.51
시설 관리	6.73	10.28	11.27	10.60	4.54	167.46
자원 관리	1.42	2.17	2.51	2.36	1.09	176.76
단체 및 법인 관리	4.13	6.31	6.64	6.25	2.51	160.77
행사 참여	3.28	5.01	4.95	4.65	1.67	150.91
업무관련 역량 개발	2.87	4.38	4.96	4.67	2.09	172.82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4.83	7.37	7.39	6.95	2.56	153.00

나. 유형별 직무량

○ 시군구 본청 인력규모를 7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자체 유형에 따라 인력규모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광역도시형 지자단체의 적정 인력규모는 209.13명으로 소규모 농촌형의 59.56명의 3배 이상임. 현원 대비 적정 인력규모 또한 1유형은 1.7배 이상인데 반해 7유형은 1.45배 수준으로 편차가 존재함.

－ 동일한 도시형 지자체에서도 광역 도시형(1유형)의 적정 인력규모는 현원에 비해 약 1.7배이지만 일반 도시형(2유형)은 1.56배로 차이를 보임.

－ 현원 대비 적정 인력규모의 차이는 적게는 18.49명(7유형)부터 많게는 86.76명(1유형)까지 분포하는데, 이는 시군구 본청 인력 확충에 있어 지역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차이가 가장 큰 기능은 1유형(86.76명)이며, 그 다음으로 3유형(60.49명)과 4유형(56.42명)의 순임.

－ 반면 농촌형 지자체인 7유형(18.49명)과 5유형(24.59명)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의 차이가 비교적 적은 수준임.

<표 2-2> 시군구 본청 유형별 직무량 총괄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평균 대비 비율	인력규모(B)	평균 대비 비율	차이(B-A)	비율(B/A*100)
평균	65.52	100.00	106.35	100.00	40.84	162.33
1유형: 광역 도시형	122.37	186.77	209.13	196.64	86.76	170.90
2유형: 일반 도시형	61.93	94.52	96.76	90.98	34.83	156.24
3유형: 대규모 제한 도시형	91.41	139.52	151.90	142.82	60.49	166.17
4유형: 소규모 제한 도시형	74.67	113.98	131.09	123.26	56.42	175.55
5유형: 도·농형	64.96	99.14	103.65	97.46	38.69	159.56
6유형: 대규모 농촌형	47.73	72.85	72.32	68.00	24.59	151.52
7유형: 소규모 농촌형	41.07	62.69	59.56	56.00	18.49	145.01

다. 영역별 직무량

- 시군구 본청 인력규모를 영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영역에 따른 인력규모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통합관리 영역의 적정 인력규모는 13.89명으로 청소년 영역의 3.86명의 3배 이상임.
 - 현원 대비 적정 인력규모의 차이는 적게는 1.09명(자활 영역)부터 많게는 5.44명(통합관리 영역)까지 분포하여 5배의 편차를 보여주는데, 이는 시군구 본청 인력 확충에 있어 영역별 특성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차이가 가장 큰 영역은 통합관리(5.44명)이며, 그 다음으로 통합조사(5.42명), 노인(5.01명) 영역의 순임.
 - 반면 자활(1.09명), 청소년(1.25명), 복지시설(2.13명) 영역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차이가 비교적 적은 수준임.
 - 비율을 기준으로 할 때 노인 영역의 적정 인력규모는 현원의 1.8배로 가장 크며, 자활 영역은 1.4배 미만으로 가장 적은 수준임.

<표 2-3> 시군구 본청 영역별 직무량 총괄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A)	비율	인력규모 (B)	비율	차이 (B-A)	비율 (B/A*100)
계	65.52	100.00	106.35	100.00	40.84	162.33
복지기획 및 정책	4.72	7.20	7.44	6.99	2.72	157.61
복지시설	4.45	6.80	6.58	6.19	2.13	147.89
통합조사	7.90	12.06	13.32	12.52	5.42	168.57
통합관리	8.45	12.90	13.89	13.06	5.44	164.34
기초생활보장	5.30	8.08	8.25	7.75	2.95	155.66
자활	2.77	4.22	3.86	3.63	1.09	139.38
희망복지지원	4.26	6.51	7.31	6.87	3.05	171.48
노인	6.25	9.54	11.26	10.59	5.01	180.17
장애인	4.82	7.35	8.65	8.14	3.84	179.68
보육	5.13	7.83	8.29	7.80	3.16	161.71
아동·드림스타트	4.10	6.26	6.28	5.90	2.17	153.01
청소년	2.61	3.99	3.86	3.63	1.25	147.84
여성·가족·다문화	4.76	7.26	7.36	6.92	2.61	154.81

2. 시군구 본청 7대 유형별 직무량 분석

가. 1유형: 광역 도시형 기초자치단체

○ 인구 50만 이상 광역 도시형 지자체의 적정 인력규모를 분석한 결과, 현원은 122.37명, 적정 인력규모는 209.13명으로 그 차이는 86.76명임.

－ 1유형인 광역 도시형 지자체의 적정 인력규모는 현원 대비 1.7배 이상으로 나타나며, 이는 시군구 본청 평균인 1.62배보다 높은 수준임.

○ 1유형에서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차이가 가장 큰 기능은 상담(14.23명), 대상자 관리(13.71명), 시설 관리(11.33명),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8.37명),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6.22명)의 순임.

－ 반면, 자원관리(1.78명), 행사 참여(3.50명), 업무관련 역량 개발(4.84명), 사업 기획 및 홍보(4.85명)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다만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은 적정 인력규모가 현원의 1.54배에 불과한 반면, 업무관련 역량 개발은 1.9배에 달함.

－ 적정 인력규모는 자원 관리(3.99명)와 상담(35.86명)이 9배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기능별 인력배치 수요의 편차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표 2-4> 1유형 기능별 시군구 본청 직무량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A)	비율	인력규모 (B)	비율	차이 (B-A)	비율 (B/A*100)
계	122.37	100.00	209.13	100.00	86.76	170.90
상담	21.63	17.68	35.86	17.15	14.23	165.78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12.53	10.24	20.90	9.99	8.37	166.82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11.35	9.27	17.57	8.40	6.22	154.78
사업 기획 및 홍보	6.59	5.39	11.44	5.47	4.85	173.50
사업 관리	9.74	7.96	15.82	7.57	6.08	162.39
대상자 관리	15.88	12.98	29.58	14.15	13.71	186.32
시설 관리	15.07	12.32	26.40	12.62	11.33	175.17
자원 관리	2.21	1.81	3.99	1.91	1.78	180.33
단체 및 법인 관리	6.98	5.70	12.89	6.16	5.91	184.60
행사 참여	5.10	4.17	8.60	4.11	3.50	168.64
업무관련 역량 개발	5.44	4.44	10.28	4.91	4.84	189.04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9.85	8.05	15.82	7.56	5.97	160.56

나. 2유형: 일반 도시형 기초자치단체

- 인구 50만 미만 일반 도시형 지자체의 현원은 61.93명이며 적정 인력규모는 96.76명으로 나타나 34.83명의 차이를 보여줌.
 - 적정 인력규모는 현원의 1.56배로 나타나 광역 도시형의 1.7배보다 낮은 수준에 해당함.
-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차이가 가장 큰 기능은 시설 관리(5.16명), 상담(4.56명), 대상자 관리(4.22명), 사업 관리(3.78명)의 순임.
 - 반면, 자원 관리(0.71명), 행사 참여(1.21명), 업무관련 역량 개발(1.53명)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타 유형의 시군구 본청은 상담 기능이 현원 대비 적정 인력규모의 차이가 크지만, 2유형은 시설관리 기능에서 차이가 가장 큼.
 - 상담 기능은 현원 기준에서는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되지만 적정 인력규모는 현원의 약 1.4배에 불과한 반면, 시설 관리 기능은 상담 기능에 비해 현원은 적지만 적정 인력규모가 현원의 1.8배 이상으로 나타남.
 - 일반 도시형 지자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설 관리 기능에 대한 인력 수요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음.

<표 2-5> 2유형 기능별 시군구 본청 직무량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A)	비율	인력규모 (B)	비율	차이 (B-A)	비율 (B/A*100)
계	61.93	100.00	96.76	100.00	34.83	156.24
상담	11.69	18.87	16.24	16.79	4.56	139.01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5.62	9.08	7.90	8.16	2.28	140.55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5.27	8.51	8.17	8.44	2.90	155.03
사업 기획 및 홍보	4.67	7.54	7.44	7.69	2.77	159.33
사업 관리	6.05	9.77	9.83	10.16	3.78	162.52
대상자 관리	6.56	10.60	10.78	11.14	4.22	164.25
시설 관리	6.33	10.22	11.49	11.88	5.16	181.58
자원 관리	1.51	2.44	2.22	2.29	0.71	146.77
단체 및 법인 관리	4.41	7.13	7.86	8.13	3.45	178.17
행사 참여	2.79	4.51	4.01	4.14	1.21	143.51
업무관련 역량 개발	2.71	4.38	4.24	4.39	1.53	156.61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4.32	6.97	6.57	6.80	2.26	152.26

다. 3유형: 대규모 제한 도시형 기초자치단체

- 서울시 자치구인 대규모 제한 도시형 지자체의 현원은 91.41명, 적정 인력규모는 151.9명으로 그 차이는 60.49명이며, 이는 1유형에 이어 가장 큰 적정 인력규모에 해당함.
-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의 차이가 큰 기능은 상담(10.61명),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8.23명), 대상자 관리(6.75명), 사업 관리(5.89명)의 순임.
 - 자원 관리(1.62명), 단체 및 법인 관리(2.77명), 행사 참여(2.94명) 등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차이가 적게 나타남.
 - 다만 비율을 기준으로 할 때 행사 참여나 단체 및 법인 관리는 현원 대비 적정 인력규모가 약 1.6배 정도인 반면, 자원 관리 기능은 2배 이상임.
 - 특히 3유형의 자원 관리 기능(2.03배)은 시군구 본청 전체에서 적정 인력규모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3유형의 경우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기능에 대한 수요가 높는데, 이는 다른 유형에서 나타나는 기능별 인력수요와 차별화되는 부분임.
 - 현원 대비 적정 인력규모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른 유형의 지자체들은 상담 기능 다음으로 대상자 관리와 시설 관리의 수요가 높은 반면, 3유형에서는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기능에 대한 수요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표 2-6> 3유형 기능별 시군구 본청 직무량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A)	비율	인력규모 (B)	비율	차이 (B-A)	비율 (B/A*100)
계	91.41	100.00	151.90	100.00	60.49	166.17
상담	16.66	18.23	27.27	17.95	10.61	163.66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10.28	11.25	18.51	12.19	8.23	179.99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8.97	9.81	13.52	8.90	4.56	150.84
사업 기획 및 홍보	7.59	8.31	13.11	8.63	5.51	172.59
사업 관리	9.09	9.95	14.99	9.87	5.89	164.78
대상자 관리	8.49	9.28	15.23	10.03	6.75	179.49
시설 관리	8.62	9.43	13.60	8.95	4.98	157.82
자원 관리	1.57	1.72	3.20	2.11	1.62	203.20
단체 및 법인 관리	4.65	5.09	7.42	4.88	2.77	159.48
행사 참여	5.28	5.78	8.22	5.41	2.94	155.56
업무관련 역량 개발	3.98	4.35	7.35	4.84	3.37	184.75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6.22	6.81	9.49	6.25	3.27	152.48

라. 4유형: 소규모 제한 도시형 기초자치단체

- 광역시 자치구에 해당하는 소규모 제한 도시형 지자체의 현원은 74.67명, 적정 인력규모는 131.09명이며 그 차이는 56.42명으로 나타남.
- 적정 인력규모는 현원 대비 1.75배로 7대 유형 지자체 중 적정 인력규모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임.
- 상대적으로 4유형에서 미충족 욕구에 대응하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요구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차이가 가장 큰 기능은 상담(12.93명), 대상자 관리(7.01명), 시설 관리(6.11명),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5.15명),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4.71명) 등으로 나타남.
- 다른 유형과 유사하게 자원 관리(1.60명), 행사 참여(1.99명), 단체 및 법인 관리(2.44명), 업무관리 역량 개발(2.70명)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다만 자원 관리는 현원 대비 적정 인력규모가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표 2-7> 4유형 기능별 시군구 본청 직무량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A)	비율	인력규모 (B)	비율	차이 (B-A)	비율 (B/A*100)
계	74.67	100.00	131.09	100.00	56.42	175.55
상담	15.86	21.24	28.78	21.96	12.93	181.51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7.11	9.52	11.82	9.02	4.71	166.32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7.42	9.94	12.57	9.59	5.15	169.45
사업 기획 및 홍보	4.72	6.32	8.20	6.26	3.49	173.88
사업 관리	5.76	7.71	10.64	8.11	4.88	184.75
대상자 관리	8.85	11.85	15.86	12.10	7.01	179.15
시설 관리	7.66	10.26	13.77	10.50	6.11	179.77
자원 관리	1.59	2.13	3.19	2.43	1.60	200.31
단체 및 법인 관리	3.96	5.31	6.40	4.89	2.44	161.63
행사 참여	3.35	4.48	5.34	4.08	1.99	159.55
업무관련 역량 개발	3.24	4.33	5.93	4.53	2.70	183.38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5.16	6.91	8.58	6.54	3.41	166.14

마. 5유형: 도·농형 기초자치단체

○ 5유형인 도·농형 지자체의 현원은 64.96명, 적정 인력규모는 103.65로서 그 차이는 38.69명임.

－ 적정 인력규모는 현원의 1.6배 미만으로, 전체 시군구 본청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임.

○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차이가 가장 큰 기능은 상담(7.46명), 대상자 관리(4.93명), 시설 관리(3.90명),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3.56명) 등으로 나타남.

－ 반면, 자원 관리(0.82명), 행사 참여(1.58명), 업무관련 역량 개발(1.94명)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현원 대비 적정 인력규모의 차이는 자원 관리(2.27명)와 상담(20.15명)이 9배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기능별 인력배치 수요의 편차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5유형의 경우 사업 기획 및 홍보 기능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비율을 기준으로 할 때 사업 기획 및 홍보 기능의 현원 대비 적정 인력규모는 약 1.9배에 달해 다른 유형에 비해 인력 수요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음.

<표 2-8> 5유형 기능별 시군구 본청 직무량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A)	비율	인력규모 (B)	비율	차이 (B-A)	비율 (B/A*100)
계	64.96	100.00	103.65	100.00	38.69	159.56
상담	12.70	19.55	20.15	19.44	7.46	158.72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5.60	8.61	9.16	8.83	3.56	163.63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5.52	8.50	8.60	8.30	3.08	155.85
사업 기획 및 홍보	3.87	5.96	7.34	7.08	3.47	189.58
사업 관리	5.11	7.86	8.22	7.93	3.11	160.96
대상자 관리	7.86	12.10	12.79	12.34	4.93	162.72
시설 관리	6.90	10.63	10.80	10.42	3.90	156.53
자원 관리	1.46	2.24	2.27	2.19	0.82	156.14
단체 및 법인 관리	4.58	7.05	7.02	6.77	2.44	153.23
행사 참여	3.55	5.46	5.13	4.95	1.58	144.65
업무관련 역량 개발	3.01	4.63	4.95	4.78	1.94	164.61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4.81	7.40	7.20	6.95	2.39	149.75

바. 6유형: 대규모 농촌형 기초자치단체

- 인구 4.6만 이상 군에 해당되는 대규모 농촌형 지자체의 현원은 47.73명, 적정 인력규모는 72.32로서 그 차이는 24.59명임.
- 6유형의 현원 대비 적정 인력규모는 1.5배 수준으로, 7유형의 소규모 농촌형 기초자치단체와 더불어 현원 대비 적정 인력규모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임.
- 적정 인력규모 또한 현원 대비 약 1.4~1.6배 정도로 나타나 비교적 기능별 인력배치 수요의 편차가 크지 않음.
-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차이가 가장 큰 기능은 상담(4.95명), 대상자 관리(2.93명), 시설 관리(2.75명),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2.17명)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자원 관리(0.70명), 행사 참여(0.96명), 업무관련 역량 개발(1.13명)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이는 적정 인력규모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1명 내외의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의미함.

<표 2-9> 6유형 기능별 시군구 본청 직무량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A)	비율	인력규모 (B)	비율	차이 (B-A)	비율 (B/A*100)
계	47.73	100.00	72.32	100.00	24.59	151.53
상담	9.14	19.15	14.09	19.48	4.95	154.18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4.27	8.94	6.44	8.91	2.17	150.9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3.85	8.07	5.61	7.76	1.76	145.63
사업 기획 및 홍보	3.03	6.36	4.76	6.58	1.73	156.84
사업 관리	4.39	9.21	6.57	9.08	2.17	149.47
대상자 관리	5.51	11.54	8.44	11.67	2.93	153.23
시설 관리	4.85	10.16	7.60	10.51	2.75	156.69
자원 관리	1.13	2.37	1.84	2.54	0.70	162.32
단체 및 법인 관리	3.52	7.37	5.34	7.38	1.82	151.76
행사 참여	2.43	5.08	3.39	4.69	0.96	139.79
업무관련 역량 개발	1.97	4.13	3.10	4.29	1.13	157.41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3.64	7.62	5.14	7.11	1.51	141.46

사. 7유형: 소규모 농촌형 기초자치단체

- 인구 4.7만 미만 소규모 농촌형 지자체의 현원은 41.07명, 적정 인력규모는 59.56명로서 그 차이는 18.49명임.
- － 현원 대비 적정 인력규모의 차이가 1.45배로 가장 적은 수준임.
- － 6유형과 유사하게 적정 인력규모가 현원 대비 약 1.4~1.6배 정도로 기능별 인력배치 수요의 편차가 크지 않은 편임.
-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차이가 가장 큰 기능은 상담(2.73명), 시설 관리(2.26명), 대상자 관리(1.85명), 사업 관리(1.62명)의 순으로 나타남.
- － 다른 유형들과 마찬가지로, 자원 관리(0.85명), 행사 참여(0.98명), 업무관련 역량 개발(1.20명)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다른 유형에 비해 상담 기능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임.
- － 적정 인력규모에서 상담 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은 16.37%로 7개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원 관리(3.25%)에 비해 약 5배 수준에 불과함.
- － 7유형의 경우 다른 유형의 지자체에 비해 적정 인력규모가 기능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표 2-10> 7유형 기능별 시군구 본청 직무량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A)	비율	인력규모 (B)	비율	차이 (B-A)	비율 (B/A*100)
계	41.07	100.00	59.56	100.00	18.49	145.01
상담	7.02	17.10	9.75	16.37	2.73	138.80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3.59	8.74	4.88	8.20	1.29	135.97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4.06	9.88	5.55	9.31	1.49	136.66
사업 기획 및 홍보	2.55	6.21	3.89	6.53	1.34	152.43
사업 관리	3.57	8.70	5.19	8.72	1.62	145.27
대상자 관리	4.90	11.93	6.75	11.33	1.85	137.73
시설 관리	3.73	9.07	5.98	10.04	2.26	160.54
자원 관리	1.09	2.66	1.94	3.25	0.85	177.42
단체 및 법인 관리	3.04	7.41	4.48	7.52	1.44	147.22
행사 참여	2.29	5.58	3.27	5.49	0.98	142.60
업무관련 역량 개발	1.79	4.35	2.98	5.01	1.20	167.03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3.44	8.37	4.91	8.24	1.47	142.74

3. 영역별 직무량 분석

가. 복지기획 및 정책

- 복지기획 및 정책 영역의 적정 인력규모를 분석한 결과, 현원은 4.72명, 적정 인력규모는 7.44명으로 그 차이는 2.72명임.
 - － 적정 인력규모는 현원 대비 1.57배 수준에 해당함.
- 복지기획 및 정책 영역에서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차이가 가장 큰 기능은 사업 기획 및 홍보(0.53명), 사업 관리(0.43명), 단체 및 법인 관리(0.34명)의 순임.
 - － 반면,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0.05명), 대상자 관리(0.06명), 자원관리(0.07명)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 적정 인력규모는 사업 기획 및 홍보(1.4명)와 복지급여서비스 지급·행정(0.16명) 및 자원 관리(0.16명)이 9배 정도의 편차를 보임.
- 복지기획 및 정책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시설 관리와 일반 행정업무 기능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대상자 관리나 상담 기능에 대한 수요는 낮게 나타남.
 - － 시설 관리 기능은 적정 인력규모가 현원의 1.8배 이상으로 0.32명의 차이를 보이지만, 대상자 관리의 1.4배로 그 차이가 0.06명에 불과함.
 - － 전체 적정 인력규모에서 일반 행정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11.63%로 다른 영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인 반면, 상담 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은 5.41%로 다른 영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임.

<표 2-11> 복지기획 및 정책 영역 직무량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A)	비율	인력규모 (B)	비율	차이 (B-A)	비율 (B/A*100)
계	4.72	100.00	7.44	100.00	2.72	157.61
상담	0.28	5.95	0.40	5.41	0.12	143.18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11	2.27	0.16	2.15	0.05	149.08
복지급여·서비스 지급·행정	0.25	5.35	0.39	5.20	0.13	153.14
사업 기획 및 홍보	0.87	18.46	1.40	18.88	0.53	161.22
사업 관리	0.77	16.42	1.21	16.22	0.43	155.71
대상자 관리	0.14	2.91	0.19	2.60	0.06	140.80
시설 관리	0.39	8.28	0.71	9.53	0.32	181.42
자원 관리	0.10	2.03	0.16	2.16	0.07	168.15
단체 및 법인 관리	0.55	11.62	0.89	11.95	0.34	162.15
행사 참여	0.37	7.93	0.57	7.72	0.20	153.46
업무관련 역량 개발	0.28	5.98	0.49	6.56	0.21	172.98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60	12.82	0.86	11.63	0.26	142.99

나. 복지시설

- 복지시설 영역의 적정 인력규모는 6.58명으로, 현원인 4.45명과 비교했을 때 2.13명의 차이를 보여줌.
 - － 복지시설 영역의 적정 인력규모는 현원 대비 1.48배 수준으로 자활 영역 및 청소년 영역과 더불어 가장 낮은 수준임.
-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차이가 가장 큰 기능은 시설 관리(0.66명), 단체 및 법인 관리(0.24명), 상담(0.22명)의 순임.
 - － 반면, 자원 관리(0.05명),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0.06명), 행사 참여(0.07명)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 특히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기능의 현원 대비 적정 인력규모는 1.26배 수준으로, 모든 영역을 통틀어 가장 낮은 수준임.
- 복지시설 영역에서는 시설 관리에 대한 수요는 높은 반면 자원 관리에 대한 수요는 낮게 나타남.
 - － 시설관리(1.96명)와 자원 관리(0.1명) 기능의 적정 인력규모는 약 20배에 달해 세부 기능별 인력수요의 편차가 크게 비교적 큰 것을 알 수 있음.

<표 2-12> 복지시설 영역 직무량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A)	비율	인력규모 (B)	비율	차이 (B-A)	비율 (B/A*100)
계	4.45	100.00	6.58	100.00	2.13	147.89
상담	0.55	12.41	0.78	11.80	0.22	140.68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21	4.77	0.27	4.08	0.06	126.34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27	6.09	0.39	5.97	0.12	145.08
사업 기획 및 홍보	0.28	6.27	0.41	6.25	0.13	147.49
사업 관리	0.33	7.36	0.50	7.64	0.17	153.34
대상자 관리	0.22	4.87	0.34	5.22	0.13	158.57
시설 관리	1.30	29.21	1.96	29.80	0.66	150.88
자원 관리	0.06	1.34	0.10	1.59	0.05	176.54
단체 및 법인 관리	0.41	9.19	0.65	9.90	0.24	159.44
행사 참여	0.25	5.72	0.33	4.99	0.07	129.06
업무관련 역량 개발	0.19	4.26	0.31	4.64	0.12	160.77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38	8.51	0.53	8.12	0.16	140.98

다. 통합조사

- 통합조사 영역의 현원은 7.9명, 적정 인력규모는 13.32명으로 나타나 5.42명의 차이를 보여줌.
 - 적정 인력규모는 현원 대비 1.68배 수준으로 나타남.
 - 상담 기능의 적정 인력규모는 4.72명으로 자원 관리(0.32명)의 약 15배에 해당함.
 - 상담(35.43%)과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29.53%)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 전체 적정 인력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5%로, 세부 기능 간 인력수요 편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차이가 가장 큰 기능은 상담(1.95명),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1.46명), 대상자 관리(0.9명)의 순임.
 - 반면 자원 관리(0.03명), 단체 및 법인 관리(0.04명), 시설 관리(0.05명)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상대적으로 통합조사 영역에서 미충족 욕구에 대응하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요구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단체 및 법인 관리 기능은 현원 대비 적정 인력규모가 14배 이상이며, 시설 관리 및 자원 관리 또한 각각 5.5배, 2.4배 이상으로 나타나지만, 일반 행정업무 기능은 현원 대비 적정 인력규모가 1.44배에 지나지 않음.
 - 통합조사 영역은 적절한 인력배치를 통해 인력수요의 미충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표 2-13> 통합조사 영역 직무량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A)	비율	인력규모 (B)	비율	차이 (B-A)	비율 (B/A*100)
계	7.90	100.00	13.32	100.00	5.42	168.57
상담	2.77	35.01	4.72	35.43	1.95	170.62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2.47	31.26	3.93	29.53	1.46	159.20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29	3.62	0.55	4.09	0.26	190.47
사업 기획 및 홍보	0.09	1.09	0.16	1.17	0.07	181.95
사업 관리	0.15	1.85	0.27	2.01	0.12	183.52
대상자 관리	1.20	15.21	2.10	15.74	0.90	174.47
시설 관리	0.01	0.15	0.07	0.50	0.05	558.88
자원 관리	0.02	0.22	0.04	0.32	0.03	245.82
단체 및 법인 관리	0.00	0.04	0.05	0.35	0.04	1429.39
행사 참여	0.19	2.35	0.30	2.22	0.11	159.40
업무관련 역량 개발	0.32	4.08	0.57	4.24	0.24	175.44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41	5.13	0.58	4.39	0.18	144.29

라. 통합관리

- 통합관리 영역의 적정 인력규모는 13.89명이며 현원은 8.45명으로, 둘 간의 차이는 5.44명임.
- 적정 인력규모는 현원 대비 1.64배 정도로 시군구 본청 전체의 1.62배와 유사한 수준임.
-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차이가 가장 큰 기능은 대상자 관리(1.87명), 상담(1.69명),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0.65명)의 순임.
- 반면 단체 및 법인 관리(0.01명 미만), 자원 관리(0.01명), 사업 기획 및 홍보(0.03명) 및 시설 관리(0.03명)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다만 단체 및 법인 관리 기능은 현원 대비 적정 인력규모가 2.4배 이상으로 나타남.
- 통합관리 영역에서는 대상자 관리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반면, 단체 및 법인 관리에 대한 수요는 미미함.
- 적정 인력규모를 살펴보면, 대상자 관리(4.76명)가 단체 및 법인 관리(0.01명)의 47배 이상으로 기능별 인력배치 수요의 편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남.
- 적정 인력규모에서 대상자 관리 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은 34% 이상으로 모든 영역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임.
- 통합조사 영역과 마찬가지로 기능별 인력수요 편차가 큰 편이라 판단할 수 있음.

<표 2-14> 통합관리 영역 직무량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A)	비율	인력규모 (B)	비율	차이 (B-A)	비율 (B/A*100)
계	8.45	100.00	13.89	100.00	5.44	164.34
상담	2.48	29.31	4.16	29.99	1.69	168.15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1.07	12.71	1.72	12.39	0.65	160.17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71	8.41	1.25	9.00	0.54	175.86
사업 기획 및 홍보	0.08	0.90	0.11	0.78	0.03	142.15
사업 관리	0.19	2.28	0.30	2.14	0.10	154.43
대상자 관리	2.90	34.28	4.76	34.31	1.87	164.48
시설 관리	0.03	0.33	0.06	0.43	0.03	209.69
자원 관리	0.02	0.21	0.03	0.23	0.01	182.96
단체 및 법인 관리	0.00	0.03	0.01	0.04	0.00	243.25
행사 참여	0.18	2.14	0.24	1.72	0.06	131.78
업무관련 역량 개발	0.35	4.18	0.61	4.37	0.25	171.63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44	5.21	0.64	4.60	0.20	145.10

마.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영역에서는 실제 현원인 5.3명에 비해 적정 인력규모가 8.25명으로 나타나 2.95명이 평균적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는 1.55배 수준으로 시군구 본청 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차이가 가장 큰 기능은 상담(0.57명) 및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0.57명),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0.4명), 대상자 관리(0.38명)의 순임.
 - 반면 단체 및 법인 관리(0.03명), 자원 관리(0.05명), 행사 참여(0.07명)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기초생활보장 영역에서는 복지급여·서비스 관련 기능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상대적으로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11.65%)와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22.22%) 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임.
 - 다만 비율을 기준으로 할 때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기능은 적정 인력규모가 현원의 1.72배인 반면,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기능은 적정 인력규모가 현원의 1.44배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15> 기초생활보장 영역 직무량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A)	비율	인력규모 (B)	비율	차이 (B-A)	비율 (B/A*100)
계	5.30	100.00	8.25	100.00	2.95	155.66
상담	1.10	20.70	1.67	20.20	0.57	151.89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56	10.53	0.96	11.65	0.40	172.24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1.26	23.88	1.83	22.22	0.57	144.85
사업 기획 및 홍보	0.31	5.83	0.47	5.70	0.16	152.20
사업 관리	0.49	9.24	0.77	9.31	0.28	156.89
대상자 관리	0.62	11.71	1.00	12.11	0.38	161.00
시설 관리	0.09	1.63	0.17	2.02	0.08	193.84
자원 관리	0.09	1.66	0.14	1.69	0.05	158.04
단체 및 법인 관리	0.06	1.09	0.09	1.05	0.03	150.45
행사 참여	0.14	2.65	0.21	2.49	0.07	146.64
업무관련 역량 개발	0.22	4.13	0.38	4.67	0.17	175.78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37	6.94	0.57	6.87	0.20	153.99

바. 자활

○ 자활 영역의 적정 인력규모는 3.86명으로 현원인 2.77명과 비교했을 때 1.09명의 차이를 보여줌.

- 청소년 영역과 더불어 적정 인력규모가 4명 미만으로 가장 적은 수준임.
- 시군구 본청 업무에서 차지하는 자활 관련 업무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차이가 가장 큰 기능은 상담(0.18명)이며, 그 다음으로 대상자 관리(0.14명), 사업 관리(0.12명) 및 시설 관리(0.12명)의 순임.

- 반면 자원 관리(0.03명) 및 행사 참여(0.03명), 사업 기획 및 홍보(0.06명) 및 업무관련 역량 개발(0.06명)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다만 자원 관리 기능은 다른 기능에 비해 실제 대비 적정인력의 비율(1.66배)이 높은 편임.

○ 자활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충족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적정 인력규모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은 1명 정도이며,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의 비율 또한 1.4배 미만으로 다른 영역보다 낮은 수준에 해당함.

<표 2-16> 자활 영역 직무량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A)	비율	인력규모 (B)	비율	차이 (B-A)	비율 (B/A*100)
계	2.77	100.00	3.86	100.00	1.09	139.38
상담	0.52	18.91	0.71	18.29	0.18	134.85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14	5.16	0.22	5.71	0.08	154.23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34	12.19	0.44	11.41	0.10	130.46
사업 기획 및 홍보	0.15	5.55	0.22	5.64	0.06	141.80
사업 관리	0.34	12.29	0.46	11.81	0.12	133.92
대상자 관리	0.33	12.07	0.48	12.40	0.14	143.10
시설 관리	0.30	10.97	0.42	10.90	0.12	138.47
자원 관리	0.04	1.48	0.07	1.77	0.03	166.59
단체 및 법인 관리	0.21	7.52	0.30	7.70	0.09	142.64
행사 참여	0.08	2.90	0.11	2.92	0.03	140.26
업무관련 역량 개발	0.11	3.91	0.17	4.30	0.06	153.30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20	7.05	0.28	7.16	0.08	141.45

사. 희망복지지원

- 희망복지지원 영역의 현원은 4.26명이며 적정 인력규모는 7.31명으로, 둘 간의 차이는 3.05명임.
- － 적정 인력규모는 현원 대비 1.7배 이상으로 노인 영역 및 장애인 영역과 더불어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함.
- － 희망복지지원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미충족 욕구에 대응하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요구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차이가 가장 큰 기능은 상담(0.72명)이고, 그 다음으로 사업 관리(0.39명), 자원 관리(0.38명)의 순임.
- － 반면, 시설 관리(0.03명), 단체 및 법인 관리(0.08명),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0.13명)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희망복지지원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자원 관리 기능에 대한 인력수요가 높는데, 이는 다른 영역에서 나타나는 기능별 인력수요와 차별화되는 부분임.
- － 자원 관리 기능의 적정 인력규모(0.8명)는 전체(7.31명)의 11%에 해당하여, 다른 영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임.
- － 자원 관리 기능의 현원 대비 적정 인력규모 또한 1.89배로 높게 나타나므로, 희망복지지원 영역에서는 향후 인력배치 시 자원 관리 기능에 중점적으로 충원할 필요가 있음.

<표 2-17> 희망복지지원 영역 직무량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A)	비율	인력규모 (B)	비율	차이 (B-A)	비율 (B/A*100)
계	4.26	100.00	7.31	100.00	3.05	171.48
상담	1.04	24.34	1.75	24.01	0.72	169.14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28	6.61	0.50	6.85	0.22	177.78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23	5.51	0.36	4.99	0.13	155.37
사업 기획 및 홍보	0.46	10.76	0.79	10.76	0.33	171.40
사업 관리	0.47	10.93	0.86	11.72	0.39	183.95
대상자 관리	0.28	6.65	0.55	7.48	0.26	192.92
시설 관리	0.08	1.92	0.11	1.55	0.03	138.66
자원 관리	0.42	9.92	0.80	10.93	0.38	188.95
단체 및 법인 관리	0.22	5.06	0.29	3.99	0.08	135.15
행사 참여	0.23	5.38	0.37	5.01	0.14	159.67
업무관련 역량 개발	0.23	5.51	0.42	5.70	0.18	177.21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32	7.41	0.51	7.01	0.20	162.26

아. 노인

○ 노인 영역의 적정 인력규모는 11.26명으로 현원인 6.25명과 비교했을 때 5.01명의 차이를 보여줌.

- 적정 인력규모는 현원 대비 1.8배 이상으로 모든 영역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세부 기능별로 살펴보았을 때도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에서 현원 대비 적정 인력규모의 비율이 1.62배 이상으로 나타나, 시군구 본청 전체(1.62배)의 수준을 상회함.
- 이는 노인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미충족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의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시설 관리(0.88명)이며, 그 다음으로 상담(0.6명), 사업 기획 및 홍보(0.57명)의 순임.

- 반면 자원 관리(0.11명),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0.22명), 업무관련 역량 개발(0.23명)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의 차이가 비교적 적은 수준임.

○ 노인 영역은 상대적으로 기능별 인력배치 수요의 편차가 크지 않은 편임.

- 적정 인력규모는 시설 관리(1.91명)가 자원 관리(0.24명)의 8배 이하로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며, 기능별 인력수요가 비교적 고른 편이라 판단할 수 있음.

<표 2-18> 노인 영역 직무량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A)	비율	인력규모 (B)	비율	차이 (B-A)	비율 (B/A*100)
계	6.25	100.00	11.26	100.00	5.01	180.17
상담	0.91	14.58	1.51	13.44	0.60	166.05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28	4.51	0.50	4.43	0.22	176.77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65	10.39	1.01	8.98	0.36	155.74
사업 기획 및 홍보	0.40	6.45	0.98	8.68	0.57	242.43
사업 관리	0.69	11.06	1.24	10.99	0.55	178.96
대상자 관리	0.50	8.08	0.97	8.60	0.46	191.92
시설 관리	1.03	16.54	1.91	16.96	0.88	184.76
자원 관리	0.13	2.08	0.24	2.16	0.11	187.16
단체 및 법인 관리	0.54	8.71	0.99	8.79	0.45	181.79
행사 참여	0.40	6.38	0.65	5.76	0.25	162.77
업무관련 역량 개발	0.23	3.73	0.46	4.12	0.23	199.08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47	7.48	0.80	7.08	0.33	170.46

자. 장애인

- 장애인 영역의 현원은 4.82명, 적정 인력규모는 8.65명이며 그 차이는 3.84명으로 나타남.
 - 현원 대비 적정 인력규모는 1.8배 수준으로, 노인 영역과 더불어 가장 높은 수준임.
 - 노인 영역과 유사하게 일반 행정업무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 기능의 현원 대비 적정 인력 규모 비율은 1.67배 이상으로 시군구 본청 전체의 1.62배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임.
-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차이가 가장 큰 기능은 시설 관리(0.67명), 상담(0.57명), 단체 및 법인 관리(0.42명)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자원 관리(0.09명), 업무관련 역량 개발(0.18명),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0.19명)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다만 자원 관리 및 업무관련 역량 개발 기능의 적정 인력규모는 현원의 1.9배 이상으로 높은 편임.
- 노인 영역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기능별 인력배치 수요의 편차가 크지 않은 편임.
 - 적정 인력규모는 시설 관리(1.51명)가 자원 관리(0.18명)의 8.5배 수준으로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어 기능별 인력수요가 비교적 고른 편이라 판단할 수 있음.

<표 2-19> 장애인 영역 직무량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A)	비율	인력규모 (B)	비율	차이 (B-A)	비율 (B/A*100)
계	4.82	100.00	8.65	100.00	3.84	179.68
상담	0.74	15.42	1.31	15.18	0.57	176.82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24	5.06	0.44	5.04	0.19	178.86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55	11.31	0.95	11.03	0.41	175.17
사업 기획 및 홍보	0.26	5.42	0.52	5.96	0.25	197.51
사업 관리	0.41	8.60	0.75	8.69	0.34	181.60
대상자 관리	0.33	6.88	0.64	7.37	0.31	192.33
시설 관리	0.85	17.59	1.51	17.49	0.67	178.64
자원 관리	0.09	1.97	0.18	2.08	0.09	190.14
단체 및 법인 관리	0.50	10.36	0.92	10.67	0.42	185.02
행사 참여	0.28	5.83	0.47	5.45	0.19	167.91
업무관련 역량 개발	0.19	4.04	0.37	4.28	0.18	190.42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36	7.50	0.59	6.76	0.22	161.94

차. 보육

- 보육 영역의 적정 인력규모는 8.29명으로 현원인 5.13명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는 3.16명임.
- 적정 인력규모는 현원의 1.61배 수준으로 시군구 본청 전체의 1.62배와 유사한 수준임.
-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차이가 가장 큰 기능은 시설 관리(0.92명)이며, 그 다음으로 상담(0.35명), 단체 및 법인 관리(0.28명)의 순임.
- 이는 시설 관리 기능의 적정 인력규모를 충족하기 위해 1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이는 다른 영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임.
- 반면, 자원 관리(0.05명), 행사 참여(0.11명), 사업 기획 및 홍보(0.14명)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다만 자원 관리 기능은 실제 대비 적정인력의 비율(1.84배)이 높은 편임.
- 보육 영역에서는 시설 관리 기능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시설 관리 기능의 적정 인력규모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85%로 복지시설 영역과 더불어 가장 높은 수준이며, 현원 대비 적정 인력규모의 비율 또한 1.8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향후 보육 영역에서는 시설 관리 기능에 대한 인력배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표 2-20> 보육 영역 직무량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A)	비율	인력규모 (B)	비율	차이 (B-A)	비율 (B/A*100)
계	5.13	100.00	8.29	100.00	3.16	161.71
상담	0.80	15.54	1.15	13.89	0.35	144.48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31	5.99	0.51	6.14	0.20	165.57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64	12.39	0.96	11.53	0.32	150.50
사업 기획 및 홍보	0.24	4.65	0.37	4.52	0.14	156.89
사업 관리	0.37	7.22	0.63	7.55	0.26	169.02
대상자 관리	0.22	4.37	0.39	4.64	0.16	171.73
시설 관리	1.14	22.26	2.06	24.85	0.92	180.51
자원 관리	0.06	1.17	0.11	1.33	0.05	184.30
단체 및 법인 관리	0.55	10.69	0.83	10.01	0.28	151.42
행사 참여	0.23	4.41	0.34	4.11	0.11	150.68
업무관련 역량 개발	0.21	4.07	0.36	4.28	0.15	170.29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37	7.23	0.59	7.15	0.22	160.03

카. 아동·드림스타트

- 아동·드림스타트 영역의 인력규모를 분석한 결과, 현원은 4.1명, 적정 인력규모는 6.28명으로 둘 간의 차이는 2.17명임
 - 적정 인력규모의 현원 대비 비율은 1.53배로 청소년 영역 및 여성·가족·다문화 영역과 더불어 가장 낮은 수준임.
-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차이가 가장 큰 영역은 상담(0.42명)이며, 그 다음으로 대상자 관리(0.25명) 및 시설 관리(0.25명)의 순임.
 - 반면 행사 참여(0.1명), 업무관련 역량 개발(0.11명),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0.12명)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아동·드림스타트 영역은 기능별 인력수요의 편차가 가장 작게 나타남.
 - 적정 인력규모는 상담(1.22명)과 업무관련 역량 개발(0.28명)의 차이는 약 4배 정도로 그 차이가 매우 적은 편임.
 - 현원 대비 적정 인력규모의 비율 또한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기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5배~1.6배 수준으로, 아동·드림스타트 영역에서는 기능별 인력수요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음.

<표 2-21> 아동·드림스타트 영역 직무량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A)	비율	인력규모 (B)	비율	차이 (B-A)	비율 (B/A*100)
계	4.10	100.00	6.28	100.00	2.17	153.01
상담	0.80	19.38	1.22	19.39	0.42	153.06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29	6.98	0.43	6.86	0.14	150.28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32	7.86	0.44	6.97	0.12	135.66
사업 기획 및 홍보	0.32	7.78	0.50	7.90	0.18	155.44
사업 관리	0.38	9.28	0.58	9.17	0.19	151.19
대상자 관리	0.43	10.43	0.68	10.83	0.25	158.84
시설 관리	0.46	11.28	0.71	11.37	0.25	154.14
자원 관리	0.22	5.45	0.36	5.68	0.13	159.68
단체 및 법인 관리	0.25	6.01	0.38	6.13	0.14	156.19
행사 참여	0.21	5.01	0.30	4.82	0.10	147.17
업무관련 역량 개발	0.18	4.28	0.28	4.49	0.11	160.77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26	6.26	0.40	6.39	0.14	156.19

타. 청소년

- 청소년 영역의 적정 인력규모는 실제 현원인 2.61명에 비해 1.25명이 더 필요한 3.86명으로 파악됨.
 - 현원 대비 적정 인력규모는 1.47배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전체 영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미충족된 인력수요가 적은 편임.
 - 모든 세부 기능에서 적정 인력규모는 현원의 1.6배 이하로 나타나는데, 이는 시군구 본청 전체의 1.62배보다 낮은 수준임.
-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의 차이가 가장 큰 기능은 사업 관리(0.22명) 및 시설 관리(0.22명)이며, 그 다음으로 단체 및 법인 관리(0.13명), 행사 참여(0.12명)의 순임.
 - 반면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0.03명) 및 대상자 관리(0.03명),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0.04명)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모든 영역에서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차이가 0.2명 내외로 그 차이가 크지 않으며, 기능별 인력수요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청소년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단체 및 법인 관리와 행사 참여 기능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단체 및 법인 관리와 행사 참여 기능의 적정 인력규모가 전체 적정 인력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1.55%와 10.7%로 다른 영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임.

<표 2-22> 청소년 영역 직무량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2.61	100.00	3.86	100.00	1.25	147.84
상담	0.16	5.95	0.22	5.81	0.07	144.44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08	2.96	0.11	2.84	0.03	141.87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12	4.49	0.16	4.06	0.04	133.68
사업 기획 및 홍보	0.29	11.00	0.44	11.36	0.15	152.63
사업 관리	0.40	15.13	0.61	15.92	0.22	155.59
대상자 관리	0.07	2.79	0.10	2.61	0.03	138.29
시설 관리	0.47	18.01	0.69	17.97	0.22	147.54
자원 관리	0.05	2.10	0.08	2.12	0.03	149.66
단체 및 법인 관리	0.32	12.13	0.45	11.55	0.13	140.84
행사 참여	0.30	11.41	0.41	10.70	0.12	138.74
업무관련 역량 개발	0.12	4.74	0.20	5.13	0.07	160.22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24	9.31	0.38	9.92	0.14	157.47

파. 여성·가족·다문화

- 여성·가족·다문화 영역의 현원은 4.76명, 적정 인력규모는 7.36명으로 그 차이는 2.61명임.
 -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비율이 1.54배로 아동·드림스타트 및 청소년 영역과 더불어 가장 낮은 수준임.
- 실제 인력 대비 적정 인력규모 차이가 가장 큰 기능은 사업 관리(0.4명), 사업 기획 및 홍보(0.39명), 시설 관리(0.31명)의 순임.
 - 반면, 자원 관리(0.07명),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0.08명), 대상자 관리(0.13명)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여성·가족·다문화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사업 관련 기능에 대한 인력 수요가 높게 나타남.
 - 사업 관리와 사업 기획 및 홍보 기능의 미충족 수요는 각각 0.4명과 0.39명으로 다른 기능에 비해 큰 편이며, 현원 대비 적정 인력규모 비율 또한 1.6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여성·가족·다문화 영역에서는 향후 사업 관련 기능에 인력이 우선적으로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표 2-23> 여성·가족·다문화 영역 직무량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4.76	100.00	7.36	100.00	2.61	154.81
상담	0.38	7.99	0.55	7.42	0.17	143.73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18	3.88	0.27	3.62	0.08	144.25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40	8.44	0.59	8.01	0.19	146.80
사업 기획 및 홍보	0.57	11.96	0.96	13.05	0.39	168.97
사업 관리	0.67	14.02	1.07	14.55	0.40	160.67
대상자 관리	0.26	5.43	0.39	5.28	0.13	150.46
시설 관리	0.57	12.08	0.88	12.01	0.31	153.96
자원 관리	0.12	2.52	0.19	2.60	0.07	159.86
단체 및 법인 관리	0.53	11.18	0.80	10.86	0.27	150.40
행사 참여	0.43	8.99	0.65	8.81	0.22	151.84
업무관련 역량 개발	0.22	4.69	0.36	4.92	0.14	162.32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42	8.83	0.65	8.88	0.23	155.69

제2절 시군구 읍면동 직무량 분석

1. 총괄

가. 영역별 직무량

- 읍면동 단위에서 업무의 충실성을 강화하고 미충족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 인력규모를 분석한 결과, 실제 현원인 평균 5.14명에 비해 2.39명이 더 필요한 평균 7.53명으로 파악됨.
 - － 이는 현원 대비 1.46배에 달하는 것으로 읍면동의 인력 확충 필요성이 높음.
-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차이가 큰 기능은 상담(0.81명), 대상자 사후관리(0.37명), 신청접수(0.35명), 찾아가는 방문 상담(0.32명) 등의 순이며, 민관협력(0.09)과 복지사각지대 발굴(0.11명)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기능은 상담(151.92%), 찾아가는 방문 상담(149.23%), 사례관리(148.72%), 대상자 사후관리(148.68%) 등임.
 - － 향후 인력배치 시 상담, 찾아가는 방문 상담, 사례관리 등에 먼저 충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표 2-24> 시군구 읍면동 영역별 직무량 총괄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A)	비율	인력규모 (B)	비율	차이 (B-A)	비율 (B/A*100)
계	5.14	100.00	7.53	100.00	2.39	146.50
상담	1.56	30.35	2.37	31.47	0.81	151.92
신청·접수	0.85	16.54	1.20	15.94	0.35	141.18
대상자 사후관리	0.76	14.79	1.13	15.01	0.37	148.68
찾아가는 방문 상담	0.65	12.65	0.97	12.88	0.32	149.23
복지사각지대 발굴	0.25	4.86	0.36	4.78	0.11	144.00
사례관리	0.39	7.59	0.58	7.70	0.19	148.72
민관협력	0.21	4.09	0.30	3.98	0.09	142.86
기타 행정 업무	0.48	9.34	0.62	8.23	0.14	129.17

나. 유형별 직무량

- 읍면동 인력규모를 7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자체 유형별로 인력규모의 편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실제 인력규모와 적정 인력규모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규모 제한 도시형(3유형)으로, 실제 인력규모가 8.99명이며 적정 인력규모는 13.66명임.
 - 이에 비해 실제 인력규모와 적정 인력규모가 가장 낮은 지역은 소규모 농촌형(7유형)로, 실제 인력규모가 3.62명이며 적정 인력규모는 5.19명임.
-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차이가 큰 유형은 3유형으로 4.68명에 달하며, 그 다음으로 1유형 광역 도시형(2.90명), 2유형 일반 도시형(2.47명), 4유형 소규모 제한 도시형(2.38명) 등의 순임.
 - 반면, 6유형 대규모 농촌형(1.45명), 7유형 소규모 농촌형(1.57명), 5유형 도·농형(1.73명)은 평균 대비 낮은 수준임.
-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비율의 경우 일반 도시형(2유형)과 규모 제한 도시형(3유형)으로 약 152%에 달함.
 - 이는 실제 인력 대비 1.52배의 인원이 필요함을 의미함.
 - 다른 유형들은 139%에서 148% 사이인 것을 감안할 때, 일반 도시형(2유형)과 규모 제한 도시형(3유형)에 추가로 필요한 인력의 비율이 높은 편임.

<표 2-25> 시군구 읍면동 유형별 직무량 총괄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A)	비율	인력규모 (B)	비율	차이 (B-A)	비율 (B/A*100)
평균	5.14	100.00	7.53	100.00	2.39	146.50
1유형: 광역 도시형	6.00	117.88	8.90	119.52	2.90	148.40
2유형: 일반 도시형	4.72	92.77	7.19	96.54	2.47	152.30
3유형: 대규모 제한 도시형	8.99	176.56	13.66	183.39	4.68	152.03
4유형: 소규모 제한 도시형	4.98	97.94	7.37	98.93	2.38	147.84
5유형: 도·농형	4.43	87.05	6.16	82.75	1.73	139.13
6유형: 대규모 농촌형	3.72	72.99	5.17	69.34	1.45	139.05
7유형: 소규모 농촌형	3.62	71.10	5.19	69.62	1.57	143.33

2. 지자체 유형별 직무량

가. 1유형: 광역 도시형 기초자치단체

- 인구 50만 이상 광역 도시형의 읍면동 인력규모를 분석한 결과, 현원은 6명, 적정 인력규모는 8.9명으로 둘 간의 차이는 2.90명임.
 - 1유형인 광역 도시형 읍면동의 적정 인력규모는 현원 대비 1.48배 이상으로 읍면동 평균인 1.46배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 1유형에서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차이가 가장 큰 기능은 상담(1.14명)이고, 그 다음으로 신청·접수(0.49명), 대상자 사후관리(0.38명), 찾아가는 방문 상담(0.29명)의 순임.
 - 반면, 민관협력(0.08명), 복지사각지대 발굴(0.15명), 기타 행정 업무(0.17명)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비율을 살펴보면, 비율이 가장 큰 기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으로 1.62배에 달하며, 그 다음으로 찾아가는 방문 상담(153.41%), 상담(153.17%) 순임.
 - 반면, 기타 행정 업무(131.28%), 민관협력(139.28%), 신청·접수(143.22%)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향후 인력배치 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방문 상담, 상담 등에 우선적으로 충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표 2-26> 1유형 기능별 읍면동 직무량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A)	비율	인력규모 (B)	비율	차이 (B-A)	비율 (B/A*100)
계	6.00	100	8.90	100	2.90	148.40
상담	2.14	35.62	3.27	36.76	1.14	153.17
신청·접수	1.13	18.89	1.62	18.23	0.49	143.22
대상자 사후관리	0.80	13.39	1.19	13.31	0.38	147.53
찾아가는 방문 상담	0.54	9.06	0.83	9.37	0.29	153.41
복지사각지대 발굴	0.25	4.16	0.40	4.54	0.15	162.04
사례관리	0.38	6.35	0.58	6.51	0.20	152.15
민관협력	0.21	3.57	0.30	3.35	0.08	139.28
기타 행정 업무	0.54	8.97	0.71	7.93	0.17	131.28

나. 2유형: 일반 도시형 기초자치단체

- 인구 50만 미만 일반도시형 읍면동의 인력규모를 분석한 결과, 현원은 4.72명, 적정 인력규모는 7.19명으로 둘 간의 차이는 2.47명임.
 - 2유형인 일반 도시형 읍면동의 적정 인력규모는 현원 대비 1.52배 이상으로 나타나며, 이는 읍면동 평균인 1.46배보다 높은 수준임.
- 2유형에서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차이가 가장 큰 기능은 1유형과 마찬가지로 상담(0.83명)이고, 그 다음으로 대상자 사후관리(0.39명), 신청·접수(0.36명), 찾아가는 방문 상담(0.29명)의 순임.
 - 반면, 민관협력(0.11명), 복지사각지대 발굴(0.11명), 기타 행정 업무(0.13명)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2유형인 일반 도시형 읍면동의 경우 1유형과 마찬가지로 상담 기능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비율을 살펴보면, 사례관리(160.28%), 대상자 사후관리(157.24%), 찾아가는 방문 상담(155.66%) 순으로 높음.
 - 반면, 기타 행정 업무(133.79%), 신청·접수(145.66%), 복지사각지대 발굴(150.16%)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향후 인력배치 시 사례관리, 대상자 사후관리, 찾아가는 방문 상담 등에 우선적으로 충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표 2-27> 2유형 기능별 읍면동 직무량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A)	비율	인력규모 (B)	비율	차이 (B-A)	비율 (B/A*100)
계	4.72	100	7.19	100	2.47	152.30
상담	1.52	32.20	2.36	32.75	0.83	154.90
신청·접수	0.80	16.86	1.16	16.13	0.36	145.66
대상자 사후관리	0.68	14.46	1.07	14.93	0.39	157.24
찾아가는 방문 상담	0.52	11.07	0.81	11.31	0.29	155.66
복지사각지대 발굴	0.21	4.55	0.32	4.49	0.11	150.16
사례관리	0.40	8.48	0.64	8.93	0.24	160.28
민관협력	0.21	4.52	0.33	4.56	0.11	153.86
기타 행정 업무	0.37	7.85	0.50	6.90	0.13	133.79

다. 3유형: 대규모 제한 도시형 기초자치단체

- 서울시 자치구인 대규모 제한 도시형 읍면동의 인력규모를 분석한 결과, 현원은 8.99명, 적정 인력규모는 13.66명으로 둘 간의 차이는 4.68명임.
- 3유형인 대규모 제한 도시형 읍면동의 적정 인력규모는 현원 대비 1.52배 이상으로 나타나며, 이는 읍면동 평균인 1.46배보다 높은 수준임.
- 3유형에서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차이가 가장 큰 기능은 상담(1.67명)이고, 그 다음으로 대상자 사후관리(0.77명), 신청·접수(0.67명), 찾아가는 방문 상담(0.62명)의 순임.
- 반면, 민관협력(0.16명), 복지사각지대 발굴(0.19명), 기타 행정 업무(0.24명)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비율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기능은 상담(159.14%)이고, 그 다음으로 찾아가는 방문 상담(154.71%), 대상자 사후관리(153.85%) 순임.
- 반면, 기타 행정 업무(140.87%), 민관협력(144.23%), 복지사각지대 발굴(144.90%)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향후 인력배치 시 상담, 찾아가는 방문 상담, 대상자 사후관리 등에 우선적으로 충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표 2-28> 3유형 기능별 읍면동 직무량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A)	비율	인력규모 (B)	비율	차이 (B-A)	비율 (B/A*100)
계	8.99	100	13.66	100	4.68	152.03
상담	2.82	31.39	4.49	32.86	1.67	159.14
신청·접수	1.49	16.57	2.16	15.82	0.67	145.15
대상자 사후관리	1.43	15.95	2.21	16.15	0.77	153.85
찾아가는 방문 상담	1.14	12.65	1.76	12.87	0.62	154.71
복지사각지대 발굴	0.41	4.60	0.60	4.39	0.19	144.90
사례관리	0.75	8.31	1.10	8.08	0.36	147.75
민관협력	0.36	4.03	0.52	3.82	0.16	144.23
기타 행정 업무	0.58	6.49	0.82	6.02	0.24	140.87

라. 4유형: 소규모 제한 도시형 기초자치단체

- 광역시 자치구인 소규모 제한 도시형 읍면동의 인력규모를 분석한 결과, 현원은 4.98명, 적정 인력규모는 7.37명으로 둘 간의 차이는 2.38명임.
- 4유형에서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차이가 가장 큰 기능은 상담(0.80명)이고, 그 다음으로 대상자 사후관리(0.40명), 신청·접수(0.35명), 찾아가는 방문 상담(0.34명)의 순임.
 - － 반면, 민관협력(0.09명)과 복지사각지대 발굴(0.09명)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 4유형도 다른 유형들과 마찬가지로 상담 기능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고, 민관협력 기능에 대한 수요가 가장 낮음.
-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147.84%를 기준으로 이보다 비율이 높은 기능은 사례관리(153.71%)이고, 그 다음으로 상담(151.38%), 대상자 사후관리(150.77%), 찾아가는 방문 상담(150.63%) 순임.
 - － 반면, 기타 행정 업무(134.31%), 신청·접수(141.92%), 민관협력(142.76%)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 향후 인력배치 시 사례관리, 상담, 대상자 사후관리 등에 우선적으로 충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표 2-29> 4유형 기능별 읍면동 직무량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A)	비율	인력규모 (B)	비율	차이 (B-A)	비율 (B/A*100)
계	4.98	100	7.37	100	2.38	147.84
상담	1.56	31.28	2.36	32.03	0.80	151.38
신청·접수	0.83	16.59	1.17	15.92	0.35	141.92
대상자 사후관리	0.79	15.84	1.19	16.15	0.40	150.77
찾아가는 방문 상담	0.67	13.52	1.01	13.77	0.34	150.63
복지사각지대 발굴	0.20	3.99	0.29	3.95	0.09	146.27
사례관리	0.33	6.62	0.51	6.88	0.18	153.71
민관협력	0.21	4.18	0.30	4.04	0.09	142.76
기타 행정 업무	0.40	7.97	0.53	7.24	0.14	134.31

마. 5유형: 도·농형 기초자치단체

- 도·농형 읍면동의 인력규모를 분석한 결과, 현원은 4.43명, 적정 인력규모는 6.16명으로 둘 간의 차이는 1.73명임.
- 5유형인 도·농형 읍면동의 적정 인력규모는 현원 대비 1.39배로 나타나며, 이는 읍면동 평균인 1.46배보다 다소 낮은 수준임.
- 5유형에서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차이가 가장 큰 기능은 상담(0.59명)이고, 그 다음으로 대상자 사후관리(0.28명), 신청·접수(0.26명), 찾아가는 방문 상담(0.22명)의 순임.
- 반면, 민관협력(0.07명)과 복지사각지대 발굴(0.09명)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5유형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차이가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다른 유형과 유사하게 상담 기능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고, 민관협력 기능에 대한 수요가 가장 낮은 패턴을 보임.
-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비율을 살펴보면, 평균은 139.13%로 유형 전체 평균인 146.50%에 비해 낮은 수준임.
- 각 기능별로 살펴보면 5유형 평균보다 높은 기능은 상담(144.64%)과 대상자 사후관리(144.52%)이며 나머지 기능들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향후 인력배치 시 상담과 대상자 사후관리 등에 우선적으로 충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표 2-30> 5유형 기능별 읍면동 직무량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A)	비율	인력규모 (B)	비율	차이 (B-A)	비율 (B/A*100)
계	4.43	100	6.16	100	1.73	139.13
상담	1.31	29.60	1.90	30.77	0.59	144.64
신청·접수	0.68	15.39	0.94	15.20	0.26	137.47
대상자 사후관리	0.62	14.02	0.90	14.56	0.28	144.52
찾아가는 방문 상담	0.58	13.19	0.80	13.02	0.22	137.39
복지사각지대 발굴	0.23	5.26	0.32	5.16	0.09	136.49
사례관리	0.31	7.02	0.42	6.81	0.11	135.01
민관협력	0.20	4.41	0.26	4.30	0.07	135.61
기타 행정 업무	0.49	11.12	0.63	10.17	0.13	127.31

바. 6유형: 대규모 농촌형 기초자치단체

- 인구 4.7만명 이상 대규모 농촌형 읍면동의 인력규모를 분석한 결과, 현원은 3.72명, 적정 인력규모는 5.17명으로 둘 간의 차이는 1.45명임.
- － 6유형인 대규모 농촌형 읍면동의 적정 인력규모는 5유형과 비슷한 수준인 현원 대비 1.39배로 나타나며, 이는 읍면동 평균인 1.46배보다 낮은 수준임.
-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차이가 가장 큰 기능은 상담(0.37명)이고, 그 다음으로 찾아가는 방문 상담(0.25명), 대상자 사후관리(0.21명), 신청·접수(0.19명) 순임.
- － 반면, 민관협력(0.06명)과 복지사각지대 발굴(0.11명)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다만, 6유형에서는 찾아가는 방문 상담 기능에 대한 수요가 대상자 사후관리 기능에 대한 수요에 비해 높은데, 이는 다른 유형에서 나타나는 기능별 수요와 차별화된 부분임.
-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 139.05%를 기준으로 이보다 비율이 높은 기능은 찾아가는 방문 상담(145.33%)이고, 그 다음으로 상담(142.56%), 대상자 사후관리(141.59%) 순임.
- － 반면, 기타 행정 업무(127.04%), 민관협력(134.24%), 신청·접수(134.97%)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 향후 인력배치 시 찾아가는 방문 상담, 상담, 대상자 사후관리 등에 우선적으로 충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표 2-31> 6유형 기능별 읍면동 직무량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A)	비율	인력규모 (B)	비율	차이 (B-A)	비율 (B/A*100)
계	3.72	100	5.17	100	1.45	139.05
상담	0.87	23.34	1.24	23.93	0.37	142.56
신청·접수	0.55	14.75	0.74	14.31	0.19	134.97
대상자 사후관리	0.51	13.67	0.72	13.92	0.21	141.59
찾아가는 방문 상담	0.56	15.09	0.82	15.78	0.25	145.33
복지사각지대 발굴	0.26	7.04	0.37	7.12	0.11	140.64
사례관리	0.34	9.19	0.48	9.25	0.14	139.99
민관협력	0.17	4.46	0.22	4.31	0.06	134.24
기타 행정 업무	0.46	12.45	0.59	11.38	0.13	127.04

사. 7유형: 소규모 농촌형 기초자치단체

- 인구 4.7만명 미만 소규모 농촌형 읍면동의 인력규모를 분석한 결과, 현원은 3.62명, 적정 인력규모는 5.19명으로 둘 간의 차이는 1.57명임.
- 7유형인 소규모 농촌형 읍면동의 적정 인력규모는 현원 대비 1.43배로 나타나며, 이는 읍면동 평균인 1.46배보다 낮은 수준임.
-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차이가 가장 큰 기능은 상담(0.44명)이고, 그 다음으로 찾아가는 방문 상담(0.28명), 대상자 사후관리(0.23명), 사례관리(0.19명), 신청·접수(0.18명) 순임.
- 반면,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민관협력(0.06명)과 복지사각지대 발굴(0.07명)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7유형은 6유형과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방문 상담 기능 수요가 대상자 사후관리 기능 수요에 비해 높아, 다른 유형과 비교할 때 기능별 수요의 차별성을 드러냄.
-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비율을 살펴보면, 평균보다 높은 기능은 상담(158.17%)이고, 그 다음으로 사례관리(153.42%), 찾아가는 방문 상담(152.62%) 순임.
- 반면, 기타 행정 업무(123.13%), 복지사각지대 발굴(132.77%), 신청·접수(132.83%)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향후 인력배치 시 상담, 사례관리, 찾아가는 방문 상담 등에 우선적으로 충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표 2-32> 7유형 기능별 읍면동 직무량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A)	비율	인력규모 (B)	비율	차이 (B-A)	비율 (B/A*100)
계	3.62	100	5.19	100	1.57	143.33
상담	0.76	20.91	1.20	23.07	0.44	158.17
신청·접수	0.56	15.50	0.75	14.37	0.18	132.83
대상자 사후관리	0.55	15.17	0.77	14.92	0.23	141.01
찾아가는 방문 상담	0.53	14.75	0.81	15.70	0.28	152.62
복지사각지대 발굴	0.23	6.31	0.30	5.85	0.07	132.77
사례관리	0.35	9.66	0.54	10.34	0.19	153.42
민관협력	0.15	4.15	0.21	4.10	0.06	141.72
기타 행정 업무	0.49	13.56	0.60	11.65	0.11	123.13

3. 기능별 직무량

가. 상담

- 상담 기능의 적정 인력규모를 분석한 결과, 실제 현원인 평균 1.56명에 비해 0.82명이 더 필요한 평균 2.38명으로 파악됨.
 - 적정 인력규모는 현원 대비 1.52배 수준에 해당함.
- 상담 기능에서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의 차이가 가장 큰 업무는 생계급여(0.14명)이며, 그 다음으로 의료급여(0.13명), 주거급여(0.12명), 노인(0.12명) 등의 순임.
 - 반면, 지자체 자체사업(0.03명), 한부모가족(0.04명), 범정부 바우처사업(0.05명)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비율의 평균은 152.18%인데 반해, 주거급여(159.74%), 생계급여(159.43%), 의료급여(159.25%) 업무는 평균보다 높음
 - 반면, 아동(141.11%), 범정부 바우처사업(145.39%), 노인(146.72%) 등은 다른 단위업무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임.

<표 2-33> 상담 단위업무 직무량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A)	비율	인력규모 (B)	비율	차이 (B-A)	비율 (B/A*100)
계	1.56	100.00	2.38	100.00	0.82	152.18
생계급여	0.24	15.30	0.38	16.03	0.14	159.43
의료급여	0.21	13.61	0.34	14.25	0.13	159.25
주거급여	0.21	13.19	0.33	13.85	0.12	159.74
한부모가족	0.08	5.13	0.12	5.17	0.04	153.58
노인	0.26	16.47	0.38	15.88	0.12	146.72
장애인	0.17	10.73	0.25	10.72	0.09	151.97
아동	0.22	13.76	0.30	12.76	0.09	141.11
범정부 바우처사업	0.12	7.37	0.17	7.04	0.05	145.39
지자체 자체사업	0.07	4.43	0.10	4.31	0.03	147.86

나. 신청·접수

- 신청·접수 기능에서 실제 및 적정 인력규모를 분석한 결과, 실제 현원인 평균 0.85명에 비해 0.35명이 더 필요한 평균 1.20명으로 파악됨.
 - 이는 현원 대비 1.41배에 달하는 규모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신청·접수 기능에서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의 차이가 가장 큰 업무는 아동(0.07명)이며, 그 다음으로 노인(0.05명), 생계급여(0.05명), 의료급여(0.05명) 등의 순임.
 - 반면, 지자체 자체사업(0.01명)과 한부모가족(0.01명) 업무는 다른 단위업무에 비해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임.
-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비율의 평균은 141.16%인데 반해, 주거급여(144.39%), 의료급여(143.59%), 생계급여(143.49%) 업무는 평균보다 높은 수치임.
 - 반면 지자체 자체사업(129.58%), 범정부 바우처사업(138.16%), 장애인(140.12%) 등은 다른 단위업무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임.
 - 향후 인력배치 시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에 우선적으로 충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표 2-34> 신청·접수 단위업무 직무량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A)	비율	인력규모 (B)	비율	차이 (B-A)	비율 (B/A*100)
계	0.85	100.00	1.20	100.00	0.35	141.16
생계급여	0.11	13.30	0.16	13.52	0.05	143.49
의료급여	0.11	12.75	0.16	12.97	0.05	143.59
주거급여	0.10	11.78	0.14	12.05	0.04	144.39
한부모가족	0.03	4.10	0.05	4.14	0.01	142.63
노인	0.12	14.41	0.17	14.48	0.05	141.85
장애인	0.09	10.55	0.13	10.47	0.04	140.12
아동	0.16	19.33	0.23	19.20	0.07	140.15
범정부 바우처사업	0.07	8.63	0.10	8.45	0.03	138.16
지자체 자체사업	0.04	5.14	0.06	4.72	0.01	129.58

다. 대상자 사후관리

- 대상자 사후관리 기능에서 실제 및 적정 인력규모를 분석한 결과, 실제 현원인 평균 0.76명 대비 적정 인력규모 평균 1.13명으로 평균 0.37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이는 현원 대비 약 1.48배에 달하는 규모임.
- 단위업무 중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의 차이가 가장 큰 업무는 생계급여(0.07명), 의료급여(0.06명), 주거급여(0.06명) 등의 순임.
 - 반면, 지자체 자체사업(0.01명), 한부모가족(0.02명), 아동(0.03명), 한부모가족(0.03명) 업무는 다른 단위업무에 비해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임.
-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비율의 평균은 148.83%인데 반해, 의료급여(154.08%), 생계급여(153.51%), 주거급여(150.60%), 한부모가족(150.49%) 업무는 평균보다 높은 수치임.
 - 반면 범정부 바우처사업(139.02%), 노인(142.63%), 장애인(143.96%) 등은 다른 단위 업무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임.
 - 향후 인력배치 시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한부모가족 등에 우선적으로 충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표 2-35> 대상자 사후관리 단위업무 직무량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0.76	100.00	1.13	100.00	0.37	148.83
생계급여	0.13	16.93	0.20	17.47	0.07	153.51
의료급여	0.12	15.70	0.18	16.25	0.06	154.08
주거급여	0.12	16.15	0.19	16.34	0.06	150.60
한부모가족	0.05	7.09	0.08	7.17	0.03	150.49
노인	0.10	13.55	0.15	12.98	0.04	142.63
장애인	0.09	11.59	0.13	11.21	0.04	143.96
아동	0.07	9.00	0.10	8.97	0.03	148.29
범정부 바우처사업	0.05	6.12	0.06	5.72	0.02	139.02
지자체 자체사업	0.03	3.86	0.04	3.88	0.01	149.69

라. 찾아가는 방문 상담

- 찾아가는 방문 상담 기능에서 실제 및 적정 인력규모를 분석한 결과, 실제 현원인 평균 0.65명 대비 적정 인력규모 평균 0.97명으로 평균 0.32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이는 현원 대비 약 1.49배에 달하는 규모로 대상자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인력 확충의 요구는 전체 평균(약 1.46배)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임.
- 단위업무 중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의 차이가 가장 큰 업무는 담당 공무원의 직접 방문(0.14명)과 찾아가는 방문상담 계획 수립(0.08명) 업무임.
 - 반면, 지사협 통장 등 인적안전망을 통한 방문 상담(0.05명)과 사각지대 취약정보를 통한 방문상담(0.05명) 업무는 다른 단위업무에 비해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임.
-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비율의 평균은 149.10%인데 반해, 지사협 통장 등 인적안전망을 통한 방문 상담(150.26%)과 찾아가는 방문상담 계획 수립(149.51%) 업무는 평균보다 높은 수치임.
 - 반면 사각지대 취약정보를 통한 방문상담(148.41%)과 담당 공무원의 직접 방문(148.72%) 업무는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표 2-36> 찾아가는 방문 상담 단위업무 직무량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0.65	100.00	0.97	100.00	0.32	149.10
찾아가는 방문상담 계획 수립	0.16	24.85	0.24	24.92	0.08	149.51
담당 공무원의 직접 방문	0.28	42.96	0.41	42.85	0.14	148.72
지사협, 통장 등 인적안전망을 통한 방문상담	0.10	15.08	0.15	15.20	0.05	150.26
사각지대 취약정보를 통한 방문상담	0.11	17.10	0.16	17.02	0.05	148.41

마. 복지사각지대 발굴

-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능에서 실제 및 적정 인력규모를 분석한 결과, 실제 현원인 평균 0.25명에서 적정 인력규모는 평균 0.11명이 더 필요한 평균 0.36명으로 파악됨.
 - 이는 현원 대비 약 1.44배에 달하는 규모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에 대한 인력 확충의 요구는 전체 평균(약 1.46배)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임.
- 단위업무 중 실제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업무는 전수조사 사후관리(0.09명)이나, 다른 단위업무인 전수조사 수행(0.08명)과 전수조사 계획 수립(0.07명)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 단위업무 중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의 차이도 실제 인력규모와 마찬가지로 전수조사 사후관리(0.04명), 전수조사 수행(0.04명), 전수조사 계획 수립(0.03명)으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다만,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비율의 평균에서 약간의 편차를 보이고 있음.
 -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의 평균이 144.45%인 반면 전수조사 사후관리(146.39%)와 전수조사 수행(145.58%) 업무는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표 2-37> 복지사각지대 발굴 단위업무 직무량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A)	비율	인력규모 (B)	비율	차이 (B-A)	비율 (B/A*100)
계	0.25	100.00	0.36	100.00	0.11	144.45
전수조사 계획 수립	0.07	29.49	0.10	28.73	0.03	140.74
전수조사 수행	0.08	33.56	0.12	33.82	0.04	145.58
전수조사 사후관리	0.09	36.95	0.14	37.45	0.04	146.39

사. 사례관리

- 사례관리 기능에서 실제 및 적정 인력규모를 분석한 결과, 실제 현원인 평균 0.39명에서 적정 인력규모는 평균 0.19명이 더 필요한 평균 0.58명으로 파악됨.
 - 이는 현원 대비 약 1.48배에 달하는 규모로 사례관리 업무에 대한 인력 확충의 요구는 전체 평균(약 1.46배)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임.
- 단위업무 중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의 차이가 가장 큰 업무는 서비스 제공 및 점검(0.07명)임
 - 반면, 단위업무 중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의 차이가 가장 작은 업무는 사례회의(0.02명)임
-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비율의 평균은 147.84%인데 반해, 초기상담(154.23%) 업무는 평균보다 높은 수치임.
 - 반면 사례회의(142.51%)와 종결 대상자 사후관리(145.15%) 업무는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향후 인력배치 시 초기상담 기능에 우선적으로 충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표 2-38> 사례관리 단위업무 직무량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A)	비율	인력규모 (B)	비율	차이 (B-A)	비율 (B/A*100)
계	0.39	100.00	0.58	100.00	0.19	147.84
초기상담	0.09	23.42	0.14	24.44	0.05	154.23
사례회의	0.05	13.46	0.08	12.98	0.02	142.51
서비스 제공 및 점검	0.15	37.79	0.22	37.73	0.07	147.57
종결 대상자 사후관리	0.10	25.32	0.14	24.86	0.04	145.15

아. 민관협력

- 민관협력 기능에서 단위업무에 따라 현재 투입되고 있는 인력 수준과 향후 필요한 인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제 및 적정 인력규모를 분석한 결과, 실제 현원인 평균 0.21명에서 적정 인력규모는 평균 0.09명이 더 필요한 평균 0.30명으로 파악됨.
 - 이는 현원 대비 약 1.41배에 달하는 규모로 민관협력 업무에 대한 인력 확충의 요구는 전체 평균(약 1.46배)에 비해 낮은 수준임.
- 단위업무 중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의 차이가 가장 큰 업무는 민관협력사업(0.04명)과 인적 네트워크(0.03명)임.
 - 반면, 단위업무 중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의 차이가 가장 작은 업무는 복지자원관리(0.01명)와 민관 네트워크(0.02명)이나, 전반적으로 차이가 크지 않음.
-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비율의 평균인 141.15%에 비해 복지자원관리(150.17%) 업무는 높은 수치임.
 - 반면 민관협력사업(139.82%)과 인적 네트워크(140.82%) 업무는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향후 인력배치 시 초기상담 기능에 우선적으로 충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표 2-39> 민관협력 단위업무 직무량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A)	비율	인력규모 (B)	비율	차이 (B-A)	비율 (B/A*100)
계	0.21	100.00	0.30	100.00	0.09	141.15
민관 네트워크	0.04	18.14	0.05	18.22	0.02	141.79
인적 네트워크	0.07	31.23	0.09	31.16	0.03	140.82
복지자원관리	0.01	6.42	0.02	6.83	0.01	150.17
민관협력사업	0.09	44.21	0.13	43.79	0.04	139.82

자. 기타 행정 업무

- 기타 행정 기능에서 단위업무에 따라 현재 투입되고 있는 인력 수준과 향후 필요한 인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제 및 적정 인력규모를 분석한 결과, 실제 현원인 평균 0.48명에서 적정 인력규모는 평균 0.15명이 더 필요한 평균 0.63명으로 파악됨.
 - 이는 현원 대비 약 1.31배에 달하는 규모로 기타 행정 업무에 대한 인력 확충의 요구는 다른 업무들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임.
- 단위업무 중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의 차이가 가장 큰 업무는 행사지원(0.06명)과 업무지원(0.06명)임.
 - 반면, 단위업무 중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의 차이가 가장 작은 업무는 기타 행정업무 지원(0.03명)임.
-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비율의 평균인 131.03%에 비해, 업무지원(135.21%) 업무는 높은 수치임.
 - 반면 행사지원(127.27%) 업무는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향후 인력배치 시 업무지원을 먼저 안배할 필요가 있음.

<표 2-40> 기타 행정 업무 단위업무 직무량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A)	비율	인력규모 (B)	비율	차이 (B-A)	비율 (B/A*100)
계	0.48	100.00	0.63	100.00	0.15	131.03
행사지원	0.20	42.62	0.26	41.40	0.06	127.27
업무지원	0.17	35.06	0.23	36.18	0.06	135.21
기타 행정 업무 지원	0.11	22.32	0.14	22.42	0.03	131.65

제 3 장

복지수요 및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현황 분석

제1절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정원 현황

제2절 복지수요 대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현황

3

복지수요 및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 현황 분석 <

제1절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현황

1.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정원

○ 2017년 현재 229개 시군구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정원은 총 35,261명이며, 이 가운데 시군구 본청 정원은 15,530명(44%)이고, 시군구 읍면동 정원은 19,731명(56%)임.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229개 시군구에 평균 154명이 배치되어 있고, 이 중 본청은 67.8명, 읍면동은 86.2명이 배치되어 있음.

○ 지자체 유형별로 보면, 시군구 읍면동 보다 본청에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인력을 배치한 지자체 유형은 소규모 제한 도시형(4유형, 47.5%), 소규모 농촌형(7유형, 46.1%), 광역 도시형·일반 도시형 지자체(1유형·2유형, 각각 44.9%)인 반면, 대규모 제한 도시형(3유형, 40.9%)와 도·농형(5유형, 42.1%), 대규모 농촌형(6유형, 42.9%)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시군구 읍면동 배치 인력 비중이 가장 큰 지자체 유형은 대규모 제한 도시형(3유형, 59.1%)이며, 그 다음으로 도·농형(5유형, 57.9%), 대규모 농촌형(6유형, 57.1%) 등이며, 소규모 제한 도시형(4유형, 52.5%)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냄.

〈표 3-1〉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정원 현황

(단위: 명, %)

유형	전체		시군구 본청		시군구 읍면동	
	계	평균(비중)	계	평균(비중)	계	평균(비중)
전체	35,261	154.0(100)	15,530	67.8(44.0)	19,731	86.2(56.0)
1유형: 광역 도시형	5,049	360.6(100)	2,269	162.1(44.9)	2,780	198.6(55.1)
2유형: 일반 도시형	3,457	133.0(100)	1,551	59.7(44.9)	1,906	73.3(55.1)
3유형: 대규모 제한 도시형	6,406	256.2(100)	2,620	104.8(40.9)	3,786	151.4(59.1)
4유형: 소규모 제한 도시형	7,077	160.8(100)	3,365	76.5(47.5)	3,712	84.4(52.5)
5유형: 도·농형	6,807	179.1(100)	2,865	75.4(42.1)	3,942	103.7(57.9)
6유형: 대규모 농촌형	3,757	91.6(100)	1,611	39.3(42.9)	2,146	52.3(57.1)
7유형: 소규모 농촌형	2,708	66.0(100)	1,249	30.5(46.1)	1,459	35.6(53.9)

주: 1) 2017년 12월 현재 기준임. 세종시, 제주시, 서귀포시를 포함한 수치임.

2. 사회복지직 및 행정직 등 직렬별 배치

가. 시군구 본청

- 시군구 본청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직렬별 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군구 본청 평균 67.8명 가운데 사회복지직은 평균 38.9명으로 60%가 배치되어 있고, 행정직 등은 평균 28.9명으로 40%가 배치되어 있음.
- 지자체 유형별로 사회복지직 배치 수준을 보면, 대규모 농촌형(6유형, 67.8%)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소규모 농촌형(7유형, 66.7%), 광역 도시형(1유형, 58.6%), 도·농형(6유형, 67.8%) 등의 순이며, 대규모 제한 도시형(3유형, 50%)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임.
- 지자체 유형 내에서 사회복지직 배치 비중의 상당한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으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직 비중이 가장 큰 지자체와 가장 낮은 지자체의 격차가 약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 － 대규모 제한 도시형(3유형)에서 사회복지직 비중이 가장 큰 노원구(100%)와 가장 작은 양천구(27.4%)의 차이는 약 4배에 달함.
 - － 소규모 제한 도시형(4유형)에서 부산사상구(100%)와 인천계양구(37.5%), 대규모 농촌형(6유형)에서 완도군(100%)과 영동군(29.5%), 소규모 농촌형(7유형)에서 신안군(100%)과 단양군(28.9%)의 격차 또한 약 3배에 이르고 있음.

〈표 3-2〉 시군구 본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직렬별 배치 현황

(단위: 명, %)

유형	전체 (비중)	사회복지직		행정직 등		사회복지직 비중	
		평균 (비중)	표준편차	평균 (비중)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전체	67.8 (100)	38.9 (60)	22.67	28.9 (40)	22.05	—	—
1유형: 광역 도시형	162.1 (100)	93.7 (58.6)	28.15	68.4 (41.4)	30.87	84.7 (안양시)	45.1 (고양시)
2유형: 일반 도시형	59.7 (100)	33.3 (56.5)	12.21	26.3 (43.5)	11.71	92.6 (논산시)	36.6 (광명시)
3유형: 대규모 제한 도시형	104.8 (100)	51.3 (50)	18.59	53.5 (50)	21.55	100 (노원구)	27.4 (양천구)
4유형: 소규모 제한 도시형	76.5 (100)	45.6 (58.2)	18.87	30.9 (41.8)	9.69	100 (부산사상구)	37.5 (인천계양구)
5유형: 도·농형	75.4 (100)	40.6 (55.8)	11.82	34.8 (44.2)	17.85	84.1 (당진시)	38.1 (진주시)
6유형: 대규모 농촌형	39.3 (100)	26.2 (67.8)	6.49	13.0 (32.2)	6.91	100 (완도군)	29.5 (영동군)
7유형: 소규모 농촌형	30.5 (100)	20.0 (66.7)	5.83	10.4 (33.3)	6.43	100 (신안군)	28.9 (단양군)

주: 1) 2017년 12월 현재 기준임.

나. 시군구 읍면동

- 시군구 단위로 읍면동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직렬별 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배치인력 86.2명 가운데 사회복지직은 평균 58.1명으로 67.4%가 배치되어 있고, 행정직 등은 평균 28.1명으로 32.6%가 배치되어 있음.
- 이는 사회복지직 인력 비중이 평균 60%인 시군구 본청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임.
- 지자체 유형별로 사회복지직 배치 수준을 보면, 대규모 제한 도시형(3유형, 75.7%)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소규모 제한 도시형(4유형, 72.8%), 대규모 농촌형(6유형, 66.8%), 소규모 농촌형(7유형, 65%) 등의 순이며, 도·농형(5유형, 61.7%)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임.
- 시군구 본청의 직렬별 배치 결과와 유사하게, 시군구 유형 내에서 사회복지직 배치 비중의 상당한 편차가 존재해 사회복지직 비중이 가장 큰 지자체와 가장 낮은 지자체의 격차가 약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일반 도시형(2유형)에서 사회복지직 비중이 가장 큰 속초시(92.3%)와 가장 작은 오산시(28.8%), 소규모 농촌형(7유형)에서 연천군·신안군·성주군(100%)과 울릉군(33.3%)의 격차는 약 3배에 달함.
- 광역도시형(1유형)에서 안양시(91.2%)와 창원시(42%), 대규모 제한 도시형(3유형)에서 노원구(100%)과 송파구(48.6%), 도·농형(5유형)에서 군산시(84.9%)과 구미시(44.1%), 대규모 농촌형(6유형)에서 완도군·해남군(100%)과 음성군(43.8%)의 격차 또한 약 3배 수준임.

〈표 3-3〉 시군구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직렬별 배치 현황

(단위: 개, %)

유형	전체 (비중)	사회복지직		행정직 등		사회복지직 비중	
		평균 (비중)	표준편차	평균 (비중)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전체	86.2 (100)	58.1 (67.4)	39.1	28.1 (32.6)	26.2	—	—
1유형: 광역 도시형	198.6 (100)	122.2 (64.9)	25.9	76.4 (35.1)	57.0	91.2 (안양시)	42.0 (창원시)
2유형: 일반 도시형	73.3 (100)	46.3 (64.2)	21.6	27.0 (35.8)	16.2	92.3 (속초시)	28.8 (오산시)
3유형: 대규모 제한 도시형	151.4 (100)	115.0 (75.7)	37.4	36.4 (24.3)	20.9	100 (노원구)	48.6 (송파구)
4유형: 소규모 제한 도시형	84.4 (100)	61.8 (72.8)	29.5	22.6 (27.2)	17.0	100 (부산사상구)	41.8 (대전중구)
5유형: 도·농형	103.7 (100)	63.1 (61.7)	28.0	40.6 (38.3)	22.1	84.9 (군산시)	44.1 (구미시)
6유형: 대규모 농촌형	52.3 (100)	35.0 (66.8)	12.4	17.4 (33.2)	9.8	100 (완도·해남군)	43.8 (음성군)
7유형: 소규모 농촌형	35.6 (100)	23.5 (65.0)	10.9	12.1 (35.0)	7.3	100 (연천·신안·성주군)	33.3 (울릉군)

주: 1) 2017년 12월 현재 기준임.

3. 시군구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정원 및 직렬별 배치 현황

가. 1유형 지자체: 광역 도시형 기초자치단체

- 1유형 지자체에서 시군구 전체 인력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직 비중이 가장 큰 지자체는 안양시(88.6%)이며, 그 다음으로 김해시(75.5%), 안산시(68.8%), 포항시(66.2%) 등의 순임.
- 반면, 수원시(46.8%)와 창원시(51.6%), 천안시(53.2%), 고양시(53.4%) 등은 사회복지직 배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임.

〈표 3-4〉 1유형 지자체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정원 및 직렬별 배치 현황

(단위: 명)

구분	전체			본청			읍면동		
	계	사회복지직	행정직 등	계	사회복지직	행정직 등	계	사회복지직	행정직 등
경기고양시	436	233	203	235	106	129	201	127	74
경기남양주시	260	159	101	101	46	55	159	113	46
경기부천시	380	219	161	121	64	57	259	155	104
경기성남시	406	237	169	224	105	119	182	132	50
경기수원시	521	244	277	238	123	115	283	121	162
경기안산시	336	231	105	188	130	58	148	101	47
경기안양시	306	271	35	124	105	19	182	166	16
경기용인시	349	214	135	183	106	77	166	108	58
경기화성시	287	157	130	128	65	63	159	92	67
경남김해시	229	173	56	115	75	40	114	98	16
경남창원시	624	322	302	217	151	66	407	171	236
경북포항시	305	202	103	124	85	39	181	117	64
전북전주시	311	202	109	143	74	69	168	128	40
충남천안시	299	159	140	128	77	51	171	82	89

나. 2유형 지자체: 일반 도시형 기초자치단체

- 2유형 지자체에서 시군구 전체 인력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직 비중이 가장 큰 지자체는 하남시(88.6%)이며, 그 다음으로 계룡시(82.1%), 양산시(81.5%), 목포시(79.8%), 속초시(75.9%) 등의 순임.
- 반면, 오산시(42.4%), 김포시(43.6%), 태백시(44.9%), 포천시(46%) 등은 사회복지직 배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임.

〈표 3-5〉 2유형 지자체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정원 및 직렬별 배치 현황

(단위: 명)

구분	전체			본청			읍면동		
	계	사회복지직	행정직 등	계	사회복지직	행정직 등	계	사회복지직	행정직 등
강원동해시	107	64	43	49	26	23	58	38	20
강원속초시	83	63	20	44	27	17	39	36	3
강원태백시	89	40	49	42	19	23	47	21	26
경기과천시	61	31	30	36	16	20	25	15	10
경기광명시	156	86	70	71	26	45	85	60	25
경기광주시	131	89	42	72	41	31	59	48	11
경기구리시	115	58	57	61	32	29	54	26	28
경기군포시	137	68	69	68	34	34	69	34	35
경기김포시	156	68	88	65	25	40	91	43	48
경기동두천시	131	90	41	53	25	28	78	65	13
경기시흥시	182	106	76	83	47	36	99	59	40
경기안성시	117	75	42	52	30	22	65	45	20
경기양주시	111	69	42	39	33	6	72	36	36
경기여주시	125	59	66	54	29	25	71	30	41
경기도산시	132	56	76	66	37	29	66	19	47
경기의왕시	79	43	36	47	18	29	32	25	7
경기의정부시	230	129	101	83	35	48	147	94	53
경기이천시	144	82	62	60	31	29	84	51	33
경기파주시	204	107	97	86	44	42	118	63	55
경기포천시	137	63	74	67	28	39	70	35	35
경기하남시	114	101	13	46	40	6	68	61	7
경남양산시	178	145	33	85	65	20	93	80	13
세종시	145	83	62	54	26	28	91	57	34
전남목포시	173	138	35	75	49	26	98	89	9
충남계룡시	39	32	7	25	20	5	14	12	2
충남논산시	181	126	55	68	63	5	113	63	50

다. 3유형 지자체: 대규모 제한도시형 기초자치단체

- 3유형 지자체에서 시군구 전체 인력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직 비중이 가장 큰 지자체는 노원구(100%), 동대문구(86.5%), 강남구(83.7%), 금천구(75.6%) 등의 순임.
- 반면, 서대문구(46.5%), 송파구(47.7%), 종로구(51.3%), 성동구(51.3%) 등은 사회복지직 배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임.

〈표 3-6〉 3유형 지자체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정원 및 직렬별 배치 현황

(단위: 명)

구분	전체			본청			읍면동		
	계	사회복지직	행정직 등	계	사회복지직	행정직 등	계	사회복지직	행정직 등
서울강남구	208	174	34	104	87	17	104	87	17
서울강동구	290	186	104	123	59	64	167	127	40
서울강북구	299	203	96	124	48	76	175	155	20
서울강서구	383	281	102	157	87	70	226	194	32
서울관악구	317	224	93	103	47	56	214	177	37
서울광진구	273	162	111	102	52	50	171	110	61
서울구로구	260	165	95	106	41	65	154	124	30
서울금천구	201	152	49	101	58	43	100	94	6
서울노원구	273	273	0	101	101	0	172	172	0
서울도봉구	203	137	66	102	46	56	101	91	10
서울동대문구	215	186	29	42	38	4	173	148	25
서울 동작구	249	164	85	107	46	61	142	118	24
서울마포구	267	178	89	106	52	54	161	126	35
서울서대문구	303	141	162	112	32	80	191	109	82
서울서초구	180	99	81	98	39	59	82	60	22
서울성동구	224	115	109	87	38	49	137	77	60
서울성북구	329	191	138	138	72	66	191	119	72
서울송파구	262	125	137	116	54	62	146	71	75
서울양천구	262	142	120	95	26	69	167	116	51
서울영등포구	301	181	120	119	48	71	182	133	49
서울용산구	244	144	100	110	49	61	134	95	39
서울은평구	335	221	114	146	59	87	189	162	27
서울종로구	191	98	93	75	23	52	116	75	41
서울중구	135	71	64	72	29	43	63	42	21
서울중랑구	202	144	58	74	51	23	128	93	35

라. 4유형 지자체: 소규모 제한 도시형 기초자치단체

- 4유형 지자체에서 시군구 전체 인력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직 비중이 가장 큰 지자체는 부산 사상구(100%), 광주서구(84.2%), 인천부평구(83.5%), 대구수성구(81%) 등의 순임.
- 반면, 대전중구(47%)와 인천동구(47.8%), 대구중구(49.1%), 광주동구(49.2%) 등은 사회복지직 배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임.

〈표 3-7〉 4유형 지자체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정원 및 직렬별 배치 현황

(단위: 명)

구분	전체			본청			읍면동		
	계	사회 복지직	행정직 등	계	사회 복지직	행정직 등	계	사회 복지직	행정직 등
광주광산구	212	147	65	98	60	38	114	87	27
광주남구	151	91	60	74	41	33	77	50	27
광주동구	124	61	63	67	30	37	57	31	26
광주북구	275	203	72	130	88	42	145	115	30
광주서구	196	165	31	81	61	20	115	104	11
대구남구	134	90	44	68	39	29	66	51	15
대구달서구	289	214	75	122	82	40	167	132	35
대구동구	218	152	66	116	64	52	102	88	14
대구북구	214	160	54	81	50	31	133	110	23
대구서구	163	100	63	78	45	33	85	55	30
대구수성구	221	179	42	104	69	35	117	110	7
대구중구	112	55	57	50	21	29	62	34	28
대전대덕구	144	90	54	67	47	20	77	43	34
대전동구	230	125	105	85	57	28	145	68	77
대전서구	238	130	108	88	45	43	150	85	65
대전유성구	123	90	33	64	34	30	59	56	3
대전중구	215	101	114	81	45	36	134	56	78
부산강서구	65	39	26	39	23	16	26	16	10
부산금정구	133	104	29	65	40	25	68	64	4
부산남구	155	94	61	71	40	31	84	54	30
부산동구	110	71	39	60	34	26	50	37	13
부산동래구	132	82	50	63	28	35	69	54	15
부산부산진구	195	136	59	65	28	37	130	108	22
부산북구	195	144	51	86	60	26	109	84	25
부산사상구	128	128	0	63	63	0	65	65	0
부산사하구	200	139	61	98	69	29	102	70	32
부산서구	128	77	51	69	35	34	59	42	17
부산수영구	101	63	38	56	22	34	45	41	4
부산연제구	129	80	49	67	35	32	62	45	17
부산영도구	122	79	43	62	37	25	60	42	18
부산중구	71	36	35	38	18	20	33	18	15
부산해운대구	189	142	47	93	54	39	96	88	8
울산남구	121	71	50	58	34	24	63	37	26
울산동구	79	43	36	44	17	27	35	26	9
울산북구	80	45	35	48	26	22	32	19	13
울산중구	104	69	35	56	32	24	48	37	11
인천계양구	162	83	79	88	33	55	74	50	24
인천남구	220	160	60	102	74	28	118	86	32
인천남동구	219	129	90	83	35	48	136	94	42
인천동구	115	55	60	76	32	44	39	23	16
인천부평구	224	187	37	114	89	25	110	98	12

구분	전체			본청			읍면동		
	계	사회 복지직	행정직 등	계	사회 복지직	행정직 등	계	사회 복지직	행정직 등
인천서구	187	133	54	95	72	23	92	61	31
인천연수구	151	120	31	91	66	25	60	54	6
인천중구	103	62	41	61	33	28	42	29	13

마. 5유형 지자체: 도·농형 기초자치단체

- 5유형 지자체에서 시군구 전체 인력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직 비중이 가장 큰 지자체는 순천시(76.4%)이며, 그 다음으로 삼척시(74.4%), 정읍시(70.8%), 나주시(70.6%), 여수시(70.1%), 광양시(70%) 등의 순임.
- 반면, 구미시(44.2%)와 제천시(44.4%), 충주시(45.5%), 서산시(45.6%), 김천시(46.2%), 진주시(47.8%), 상주시(49.3%) 등은 사회복지직 배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임.

〈표 3-8〉 5유형 지자체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정원 및 직렬별 배치 현황

(단위: 명)

구분	전체			본청			읍면동		
	계	사회 복지직	행정직 등	계	사회 복지직	행정직 등	계	사회 복지직	행정직 등
강원강릉시	161	95	66	79	41	38	82	54	28
강원삼척시	78	58	20	39	29	10	39	29	10
강원원주시	233	129	104	91	38	53	142	91	51
강원춘천시	252	139	113	102	59	43	150	80	70
경기평택시	251	134	117	133	61	72	118	73	45
경남거제시	145	84	61	59	34	25	86	50	36
경남밀양시	142	74	68	55	30	25	87	44	43
경남사천시	124	67	57	57	26	31	67	41	26
경남진주시	268	128	140	134	51	83	134	77	57
경남통영시	124	80	44	63	36	27	61	44	17
경북경산시	211	119	92	79	47	32	132	72	60
경북경주시	203	117	86	68	45	23	135	72	63
경북구미시	251	111	140	99	44	55	152	67	85
경북김천시	186	86	100	69	33	36	117	53	64
경북문경시	125	71	54	55	37	18	70	34	36
경북상주시	140	69	71	57	22	35	83	47	36
경북안동시	188	103	85	71	39	32	117	64	53
경북영주시	124	70	54	49	29	20	75	41	34
경북영천시	122	80	42	45	36	9	77	44	33

구분	전체			본청			읍면동		
	계	사회복지직	행정직 등	계	사회복지직	행정직 등	계	사회복지직	행정직 등
전남광양시	100	70	30	58	38	20	42	32	10
전남나주시	136	96	40	51	29	22	85	67	18
전남순천시	178	136	42	89	62	27	89	74	15
전남여수시	214	150	64	94	50	44	120	100	20
전북군산시	228	153	75	109	52	57	119	101	18
전북김제시	178	106	72	57	41	16	121	65	56
전북남원시	129	87	42	51	32	19	78	55	23
전북익산시	258	176	82	104	62	42	154	114	40
전북정읍시	168	119	49	66	35	31	102	84	18
제주서귀포시	129	72	57	69	34	35	60	38	22
제주제주시	306	163	143	94	45	49	212	118	94
충남공주시	130	70	60	59	32	27	71	38	33
충남당진시	99	68	31	44	37	7	55	31	24
충남보령시	120	78	42	53	28	25	67	50	17
충남서산시	180	82	98	83	37	46	97	45	52
충남아산시	152	98	54	76	49	27	76	49	27
충북제천시	160	71	89	64	28	36	96	43	53
충북청주시	412	240	172	160	77	83	252	163	89
충북충주시	202	92	110	80	38	42	122	54	68

바. 6유형 지자체: 대규모 농촌형 기초자치단체

○ 6유형 지자체에서 시군구 전체 인력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직 비중이 가장 큰 지자체는 완도군(100%)이며, 그 다음으로 서천군(95.7%), 해남군(93.2%), 영암군(82.1%), 하동군(81.7%), 창성군(81.5%), 의성군(80.7%) 등의 순임.

○ 반면, 영동군(37.8%)과 음성군(47.4%), 옥천군(50%) 등은 사회복지직 배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임.

〈표 3-9〉 6유형 지자체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정원 및 직렬별 배치 현황

(단위: 명)

구분	전체			본청			읍면동		
	계	사회복지직	행정직 등	계	사회복지직	행정직 등	계	사회복지직	행정직 등
강원철원군	65	42	23	36	24	12	29	18	11
강원홍천군	89	57	32	35	24	11	54	33	21
강원횡성군	67	40	27	37	20	17	30	20	10
경기가평군	79	49	30	41	28	13	38	21	17
경기양평군	98	52	46	38	22	16	60	30	30

구분	전체			본청			읍면동		
	계	사회 복지직	행정직 등	계	사회 복지직	행정직 등	계	사회 복지직	행정직 등
경남거창군	86	51	35	30	21	9	56	30	26
경남고성군	81	52	29	37	23	14	44	29	15
경남창녕군	98	52	46	40	22	18	58	30	28
경남하동군	82	67	15	32	29	3	50	38	12
경남합안군	77	52	25	36	22	14	41	30	11
경남합천군	90	50	40	36	23	13	54	27	27
경북예천군	80	55	25	32	27	5	48	28	20
경북울진군	93	62	31	39	32	7	54	30	24
경북의성군	88	71	17	40	34	6	48	37	11
경북칠곡군	95	65	30	60	36	24	35	29	6
대구달성군	130	100	30	66	38	28	64	62	2
부산기장군	87	66	21	57	41	16	30	25	5
울산울주군	119	75	44	63	37	26	56	38	18
인천강화군	73	44	29	34	21	13	39	23	16
전남고흥군	120	84	36	37	23	14	83	61	22
전남담양군	62	45	17	26	19	7	36	26	10
전남무안군	90	57	33	35	23	12	55	34	21
전남영광군	95	67	28	37	27	10	58	40	18
전남영암군	95	78	17	48	32	16	47	46	1
전남완도군	93	93	0	34	34	0	59	59	0
전남장성군	65	53	12	22	18	4	43	35	8
전남해남군	103	96	7	39	32	7	64	64	0
전남화순군	89	67	22	37	29	8	52	38	14
전북고창군	85	53	32	32	20	12	53	33	20
전북부안군	83	44	39	35	17	18	48	27	21
전북원주군	118	74	44	50	36	14	68	38	30
충남금산군	94	56	38	32	27	5	62	29	33
충남부여군	113	64	49	37	21	16	76	43	33
충남서천군	94	90	4	33	31	2	61	59	2
충남예산군	118	89	29	40	32	8	78	57	21
충남태안군	95	69	26	42	29	13	53	40	13
충남홍성군	114	63	51	41	26	15	73	37	36
충북영동군	98	37	61	44	13	31	54	24	30
충북옥천군	82	41	41	31	17	14	51	24	27
충북음성군	97	46	51	49	25	24	48	21	27
충북진천군	77	41	36	41	21	20	36	20	16

사. 7유형 지자체: 대규모 농촌형 기초자치단체

- 7유형 지자체에서 시군구 전체 인력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직 비중이 가장 큰 지자체는 신안군(100%)이며, 그 다음으로 화천군(96.3%), 연천군(95.2%), 성주군(89.5%), 곡성군

(82.4%), 남해군(81.9%)등의 순임.

○ 반면, 보은군(36.7%), 단양군(38%), 양양군(39.1%), 양구군(46.3%), 괴산군(47%), 정선군(49.3%) 등은 사회복지직 배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임.

〈표 3-10〉 7유형 지자체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정원 및 직렬별 배치 현황

(단위: 명)

구분	전체			본청			읍면동		
	계	사회복지직	행정직 등	계	사회복지직	행정직 등	계	사회복지직	행정직 등
강원고성군	64	42	22	32	20	12	32	22	10
강원양구군	54	25	29	31	17	14	23	8	15
강원양양군	64	25	39	35	14	21	29	11	18
강원영월군	64	41	23	32	22	10	32	19	13
강원인제군	61	40	21	38	23	15	23	17	6
강원정선군	75	37	38	33	14	19	42	23	19
강원평창군	64	49	15	34	27	7	30	22	8
강원화천군	54	52	2	30	30	0	24	22	2
경기연천군	83	79	4	29	25	4	54	54	0
경남남해군	94	77	17	45	36	9	49	41	8
경남산청군	76	43	33	30	18	12	46	25	21
경남의령군	62	39	23	26	17	9	36	22	14
경남함양군	73	43	30	34	19	15	39	24	15
경북고령군	57	37	20	29	16	13	28	21	7
경북군위군	56	34	22	30	19	11	26	15	11
경북봉화군	68	40	28	29	22	7	39	18	21
경북성주군	76	68	8	30	22	8	46	46	0
경북영덕군	75	44	31	29	22	7	46	22	24
경북영양군	44	35	9	27	19	8	17	16	1
경북울릉군	28	15	13	13	10	3	15	5	10
경북청도군	73	42	31	34	24	10	39	18	21
경북청송군	47	36	11	20	19	1	27	17	10
인천옹진군	46	29	17	21	12	9	25	17	8
전남강진군	68	53	15	26	17	9	42	36	6
전남곡성군	68	56	12	29	27	2	39	29	10
전남구례군	63	37	26	30	13	17	33	24	9
전남보성군	81	55	26	28	21	7	53	34	19
전남신안군	90	90	0	34	34	0	56	56	0
전남장흥군	88	70	18	34	31	3	54	39	15
전남진도군	55	42	13	23	16	7	32	26	6
전남함평군	68	52	16	31	24	7	37	28	9
전북무주군	55	43	12	28	20	8	27	23	4
전북순창군	60	38	22	22	13	9	38	25	13
전북임실군	67	43	24	33	21	12	34	22	12
전북장수군	57	29	28	26	14	12	31	15	16

구분	전체			본청			읍면동		
	계	사회 복지직	행정직 등	계	사회 복지직	행정직 등	계	사회 복지직	행정직 등
전북진안군	62	35	27	25	16	9	37	19	18
충남청양군	70	40	30	33	21	12	37	19	18
충북괴산군	83	39	44	37	19	18	46	20	26
충북단양군	71	27	44	38	11	27	33	16	17
충북보은군	98	36	62	49	18	31	49	18	31
충북증평군	46	27	19	32	19	13	14	8	6

제2절 복지수요 대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현황

1. 시군구 복지수요 현황

- 2017년 12월 현재 기초수급과 차상위급여, 보편적 복지 등 기타복지 대상자를 기준으로 시군구 복지수요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복지대상자 규모 평균은 49,851명(중복 제외)이며, 이는 인구 평균의 22.1%에 해당됨.
 - 중복 급여를 포함한 복지대상자 규모(58,618명)를 기준으로 기초수급자는 11.1%(6,511명)이며, 차상위급여 4.1%(2,429명), 기타복지 84.7%(49,678명)임
- 지자체 유형별로 인구 대비 복지대상자 규모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 유형 간에 복지수요의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소규모 농촌형(7유형, 36.4%)이 상대적으로 인구 대비 복지대상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대규모 농촌형(6유형, 31.2%), 도·농형(5유형, 24.9%) 등의 순이며, 광역 도시형(1유형, 18.8%)과 대규모 제한 도시형(3유형, 18.1%)은 상대적으로 복지대상자 규모 비중이 낮은 수준임.
 - 전체 복지대상자 가운데 기초수급자의 비중을 기준으로 지자체 유형 간 차이를 비교하면, 소규모 제한 도시형(4유형, 13.3%)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대규모 제한 도시형(3유형, 11.9%), 도·농형(5유형, 11%) 등의 순임.
 - 반면, 광역 도시형(1유형, 9.4%)과 대규모 농촌형(6유형, 9.5%), 일반 도시형(2유형, 9.7%), 소규모 농촌형(7유형, 9.9%)은 상대적으로 기초수급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3-11〉 시군구 인구 및 복지대상자 규모 현황

(단위: 명, %)

유형	인구 규모 평균 (복지대상자 비중)	복지대상자 규모 ¹⁾			
		전체 평균 ²⁾	기초수급자 평균 (비중)	차상위급여 평균 (비중)	기타복지 평균 (비중)
전체	226,042 (22.1)	49,851	6,511 (11.1)	2,429 (4.1)	49,678 (84.7)
1유형: 광역 도시형	789,924 (18.8)	148,749	1,6014 (9.4)	5,745 (3.4)	148,235 (87.2)
2유형: 일반 도시형	220,026 (21.5)	47,294	5,296 (9.7)	2,073 (3.8)	47,208 (86.5)
3유형: 대규모 제한 도시형	394,297 (18.1)	71,523	10,065 (11.9)	3,760 (4.4)	70,992 (83.7)
4유형: 소규모 제한 도시형	279,761 (22.5)	63,043	10,065 (13.3)	2,948 (3.9)	62,883 (82.9)
5유형: 도·농형	220,175 (24.9)	54,862	7,083 (11.0)	2,741 (4.2)	54,701 (84.8)
6유형: 대규모 농촌형	75,834 (31.2)	23,635	2,640 (9.5)	1,446 (5.2)	23,582 (85.2)
7유형: 소규모 농촌형	32,715 (36.4)	11,901	1,398 (9.9)	851 (6.0)	11,862 (84.1)

주: 1) 2017년 12월 현재 행복e음 관리대상자 수 기준임.

2) 복지대상자 전체 규모는 중복급여자를 제외한 것으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급여, 기타복지 대상자의 총합과 일치하지 않음.

2. 복지급여 특성 반영 복지대상자 규모

가. 복지급여별 직무량 가중치 설정

○ 복지급여 유형에 따라 업무처리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 읍면동 직무량 분석 자료를 토대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급여, 보편적 복지 등 기타복지의 직무량 가중치를 설정하여, 복지급여 특성을 반영한 복지대상자 규모를 산출함.

－ 복지급여별 직무량 가중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급여, 기타복지에 있어 상담과 신청·접수, 사후관리와 관련된 읍면동의 적정 기준 직무량이 적용된 것으로, 읍면동 복지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측정하는 데 유용함.

○ 복지급여별 직무량 가중치는 기타복지를 1이라고 할 때, 기초수급자 1.484, 차상위급여 1.457로 산출됨.

－ 읍면동의 기초수급 관련 상담, 신청·접수, 사후관리 적정 기준 직무량은 2.08명으로, 읍면동 기초수급자 1명(평균 425.4명)에 소요되는 직무량은 0.00489명임.

－ 차상위급여 관련 상담, 신청·접수, 사후관리 적정 기준 직무량은 0.76명으로, 읍면동 기초수급자 1명(평균 158.7명)에 소요되는 직무량은 0.0048명임.

－ 기타복지 관련 상담, 신청·접수, 사후관리 적정 기준 직무량은 1.67명으로, 읍면동 기초수급자 1명(평균 506.4명)에 소요되는 직무량은 0.003임.

〈표 3-12〉 급여 유형별 직무량 반영을 위한 가중치 산출

(단위: 명)

구분	읍면동 적정 기준 직무량1)				읍면동 복지대상자 평균(B)2)	복지대상자 1인당 직무량 (=C/B)	기타 복지대상 대비 업무량 가중치
	계(A)	상당	신청·접수	사후관리			
기초수급자	2.08	1.05	0.46	0.57	425.4	0.00489	1.484
차상위급여	0.76	0.38	0.18	0.21	158.7	0.00480	1.457
기타복지	1.67	0.85	0.51	0.31	506.4	0.00330	1

주: 1) 전국 읍면동의 적정 기준 업무량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직무량의 합계, 차상위급여대상은 한 부모가족과 장애인(장애인 연금 등)의 합계, 기타복지대상은 노인(기초연금 등), 아동(양육, 보육, 교육비 등), 범정부 바우처사업(문화, 에너지 바우처 등)의 합계임.

2) 읍면동 복지대상자 평균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급여대상, 기타복지대상자 규모 각각을 전국 읍면동 3,505개소로 나눈 값임.

나. 기존 복지대상자와 복지급여 특성 반영 복지대상자 규모의 비교

○ 복지급여 특성을 반영한 복지대상자 규모를 기존 복지대상자 규모와 비교 분석한 결과, 시군구의 급여 특성 반영 복지대상자 평균 규모는 기본 복지대상자 규모의 평균인 49,851명에서 107.4%가 증가한 53,443명으로 나타남.

○ 기존 복지대상자 대비 복지급여 특성 반영 복지대상자 규모복지대상자 규모의 증가치에는 지자체별로 최소 105% 내외에서 최대 110% 내외까지 상당한 편차가 있음이 확인됨.

〈표 3-13〉 기존 복지대상자와 복지급여 특성 반영 복지대상자 규모의 비교

(단위: 명, %)

유형	기존 복지대상자 평균	급여특성 반영 복지대상자 평균	기존 복지대상자 대비 급여특성 반영 복지대상자			
			차이	비율	증가비 최대 지자체	증가비 최소 지자체
전체	49,851	53,443	3,592	107.4	—	—
1유형: 광역 도시형	148,749	157,735	8,986	106.1	14,067/109.5 (전주시)	4,880/103 (용인시)
2유형: 일반 도시형	47,294	50,309	3,016	106.6	2,157/110.4 (속초시)	2,340/104.2 (세종시)
3유형: 대규모 제한 도시형	71,523	77,053	5,531	107.7	11,728/110.1 (노원구)	2,903/105.3 (서초구)
4유형: 소규모 제한 도시형	63,043	68,173	5,131	108.1	3,310/111.5 (부산동구)	1,608/104.1 (울산북구)
5유형: 도·농형	54,862	58,813	3,950	107.3	3,707/110.7 (김제시)	1,843/103.6 (거제시)
6유형: 대규모 농촌형	23,635	25,283	1,648	107.1	2,046/110.0 (완도군)	2,080/104.4 (울주군)
7유형: 소규모 농촌형	11,901	12,796	896	107.5	1,370/110.4 (진도군)	630/105.2 (청양군)

3. 복지대상자 대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정원 현황

가. 시군구 본청

- 사회복지직, 행정직 등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시군구 본청 정원을 기존 복지대상자 규모를 고려하여 지자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유형에 따라 본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정원 1인당 복지대상자 규모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 복지 공무원 1인이 담당해야 할 복지대상자는 광역 도시형(1유형, 954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소규모 제한 도시형(4유형, 799명), 일반 도시형(2유형, 752명), 도·농형(5유형, 707명), 대규모 제한 도시형(3유형, 706명) 등의 순임.
- 반면, 소규모 농촌형(7유형, 395명)과 대규모 농촌형(6유형, 599명)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주목할 대목은 각 지자체 유형 내에서 존재하는 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임.
- 유형 내에서 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규모는 최소 약 2배(1유형)에서 최대 약 5배(2유형, 4유형)까지 큰 격차를 나타냄.
- 이는 인구규모나 산업화 수준 등과 같은 지역의 환경적 특성이 유사하더라도 복지 공무원의 인력 배치에 지자체 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함.

〈표 3-14〉 기존 복지대상자 대비 시군구 본청 정원 현황

(단위: 명)

유형	평균 인구규모	평균 기존 복지대상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정원 1인당 복지대상자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전체	226,042	49,851	670	254.60	1,685	196
1유형: 광역 도시형	789,924	148,749	954	197.89	1,412 (남양주시)	686 (안산시)
2유형: 일반 도시형	220,026	47,294	752	285.52	1,274 (양주시)	218 (과천시)
3유형: 대규모 제한 도시형	394,297	71,523	706	287.50	1,685 (동대문구)	336 (중구)
4유형: 소규모 제한 도시형	279,761	63,043	799	244.71	1,380 (인천남동구)	260 (대구수성구)
5유형: 도·농형	220,175	54,862	707	153.13	1,137 (제주시)	453 (문경시)
6유형: 대규모 농촌형	75,834	23,635	599	126.31	905 (달성군)	356 (철원군)
7유형: 소규모 농촌형	32,715	11,901	395	110.44	671 (보성군)	196 (울릉군)

나. 시군구 읍면동

- 급여 특성을 반영한 복지대상자 규모를 고려하여 시군구 읍면동 정원을 지자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형에 따라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정원 1인당 복지대상자 규모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 － 복지 공무원 1인이 담당해야 할 복지대상자는 광역 도시형(1유형, 833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소규모 제한 도시형(4유형, 819명), 일반 도시형(2유형, 670명), 도·농형(5유형, 571명) 등의 순임.
 - － 반면, 대규모 제한 도시형(3유형, 517명)과 대규모 농촌형(6유형, 501명), 소규모 농촌형(7유형, 366명)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읍면동에서도 각 지자체 유형 내에서 공무원 1인당 복지수요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 유형 내에서 공무원 1인당 복지수요는 최소 약 2배(1유형)에서 최대 약 4배 내외(2유형, 6유형, 7유형)의 분포를 나타냄.
 - － 이는 본청에서의 결과와 동일한 양상인데, 복지수요를 감안할 때 읍면동 복지 공무원의 인력 배치 규모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함.

〈표 3-15〉 급여특성 반영 복지대상자 대비 시군구 읍면동 정원 현황

(단위: 명)

유형	평균 인구규모	평균 급여특성 반영 복지대상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정원 1인당 복지대상자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전체	14,819	3,265	591	235.02	1,511	186
1유형: 광역 도시형	23,834	5,033	833	158.94	1,028 (김해시)	547 (창원시)
2유형: 일반 도시형	18,336	4,128	670	207.19	1,210 (광주시)	300 (태백시)
3유형: 대규모 제한 도시형	23,249	4,601	517	145.13	776 (도봉구)	243 (종로구)
4유형: 소규모 제한 도시형	18,156	4,282	819	205.98	1,271 (울산북구)	367 (대전중구)
5유형: 도·농형	10,564	2,754	571	151.50	1,013 (아산시)	318 (김제시)
6유형: 대규모 농촌형	6,672	2,402	501	211.57	1,511 (기장군)	330 (금산군)
7유형: 소규모 농촌형	3,757	1,544	366	80.59	720 (증평군)	186 (울릉군)

주1. 개별 읍면동 단위의 평균값이 아니라 시군구 단위에서의 평균값임. 읍면동의 경우 개별 읍면동 단위가 아닌 해당 시군구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정원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다. 시군구별 복지대상자 대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현황

1) 1유형 지자체: 광역 도시형 기초자치단체

- 1유형 지자체 본청의 복지 공무원 1인 당 기존 복지대상자 규모에 있어, 남양주시(1,412명)와 부천시(1,333명), 전주시(1,032명), 화성시(1,006명) 등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안산시(686명)와 성남시(730명), 고양시(777명) 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 1유형 지자체 읍면동의 경우, 복지급여 특성 반영 복지대상자를 기준으로 김해시(1,028명)와 용인시(1,025명) 등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창원시(547명)와 안양시(585명), 부천시(659명) 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표 3-16〉 1유형 지자체별 복지대상자 대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현황

(단위: 명)

구분	본청			읍면동		
	기존 복지대상자 평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정원	정원 1인당 복지대상자	급여특성 반영 복지대상자 평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정원	정원 1인당 복지대상자
경기고양시	182,668	235	777	193,682	201	964
경기남양주시	142,649	101	1,412	150,710	159	948
경기부천시	161,273	121	1,333	170,798	259	659
경기성남시	163,506	224	730	174,630	182	960
경기수원시	202,831	238	852	213,037	283	753
경기안산시	129,001	188	686	139,535	148	943
경기안양시	101,272	124	817	106,559	182	585
경기용인시	165,256	183	903	170,136	166	1,025
경기화성시	128,705	128	1,006	133,373	159	839
경남김해시	109,524	115	952	117,166	114	1,028
경남창원시	209,883	217	967	222,773	407	547
경북포항시	119,657	124	965	129,125	181	713
전북전주시	147,531	143	1,032	161,598	168	962
충남천안시	118,727	128	928	125,164	171	732

2) 2유형 지자체: 일반 도시형 기초자치단체

- 2유형 지자체 본청의 복지 공무원 1인 당 기존 복지대상자 규모에 있어, 양주시(1,274명)와 김포시(1,224명), 의정부시(1,171명), 과주시(1,105명), 세종시(1,036명) 등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과천시(217명)와 계룡시(302명), 태백시(309명) 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 2유형 지자체 읍면동의 경우, 복지급여 특성 반영 복지대상자를 기준으로 광주시(1,210명)

와 김포시(915명), 의왕시(904명) 등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태백시(300명)와 과천시(331명), 논산시(382명), 동두천시(386명) 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표 3-17〉 2유형 지자체별 복지대상자 대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현황

(단위: 명)

구분	본청			읍면동		
	기존 복지대상자 평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정원	정원 1인당 복지대상자	급여특성 반영 복지대상자 평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정원	정원 1인당 복지대상자
강원동해시	24,650	49	503	26,489	58	457
강원속초시	20,854	44	474	23,011	39	590
강원태백시	12,976	42	309	14,116	47	300
경기과천시	7,833	36	218	8,285	25	331
경기광명시	64,877	71	914	68,585	85	807
경기광주시	68,508	72	952	71,375	59	1,210
경기구리시	38,708	61	635	41,455	54	768
경기군포시	50,737	68	746	53,959	69	782
경기김포시	79,555	65	1,224	83,270	91	915
경기동두천시	27,612	53	521	30,118	78	386
경기시흥시	78,534	83	946	83,115	99	840
경기안성시	43,330	52	833	46,097	65	709
경기양주시	49,678	39	1,274	53,025	72	736
경기여주시	28,978	54	537	30,992	71	437
경기오산시	40,828	66	619	42,893	66	650
경기의왕시	27,530	47	586	28,935	32	904
경기의정부시	97,229	83	1,171	104,689	147	712
경기이천시	45,280	60	755	47,584	84	566
경기파주시	95,003	86	1105	101,073	118	857
경기포천시	37,865	67	565	40,819	70	583
경기하남시	45,703	46	994	47,966	68	705
경남양산시	76,835	85	904	81,708	93	879
세종시	55,949	54	1,036	58,289	91	641
전남목포시	62,993	75	840	69,138	98	705
충남계룡시	7,552	25	302	7927	14	566
충남논산시	40,036	68	589	43,127	113	382

3) 3유형 지자체: 대규모 제한도시형 기초자치단체

○ 3유형 지자체 본청의 복지 공무원 1인 당 기존 복지대상자 규모에 있어, 동대문구(1,685명)와 중랑구(1,212명), 노원구(1,151명) 등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중구(336명)와 용산구(338명), 종로구(350명) 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 3유형 지자체 읍면동의 경우, 복지급여 특성 반영 복지대상자를 기준으로 도봉구(776명)와

중랑구(766명), 노원구(744명), 서초구(701명), 강남구(700명) 등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종로구(243명)와 용산구(299명), 서대문구(339명), 광진구(361명), 영등포구(366명) 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표 3-18〉 3유형 지자체별 복지대상자 대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현황

(단위: 명)

구분	본청			읍면동		
	기존 복지대상자 평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정원	정원 1인당 복지대상자	급여특성 반영 복지대상자 평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정원	정원 1인당 복지대상자
서울강남구	67,594	104	650	72,803	104	700
서울강동구	77,071	123	627	82,352	167	493
서울강북구	79,281	124	639	86,990	175	497
서울강서구	120,207	157	766	130,563	226	578
서울관악구	89,889	103	873	96,675	214	452
서울광진구	57,265	102	561	61,705	171	361
서울구로구	79,472	106	750	84,176	154	547
서울금천구	49,791	101	493	54,552	100	546
서울노원구	116,272	101	1,151	128,000	172	744
서울도봉구	72,582	102	712	78,415	101	776
서울동대문구	70,779	42	1,685	76,754	173	444
서울동작구	67,622	107	632	72,126	142	508
서울마포구	64,215	106	606	68,372	161	425
서울서대문구	60,513	112	540	64,790	191	339
서울서초구	54,579	98	557	57,482	82	701
서울성동구	54,422	87	626	58,447	137	427
서울성북구	88,339	138	640	94,907	191	497
서울송파구	94,711	116	816	100,181	146	686
서울양천구	80,705	95	850	86,557	167	518
서울영등포구	62,529	119	525	66,568	182	366
서울용산구	37,176	110	338	40,070	134	299
서울은평구	102,895	146	705	111,318	189	589
서울종로구	26,276	75	350	28,236	116	243
서울중구	24,209	72	336	26,243	63	417
서울중랑구	89,675	74	1,212	98,055	128	766

4) 4유형 지자체: 소규모 제한 도시형 기초자치단체

- 4유형 지자체 본청의 복지 공무원 1인 당 기존 복지대상자 규모에 있어, 인천남동구(1,380명)와 부산진구(1,369명), 대구북구(1,322명), 인천서구(1,070명), 대전서구(1,061명), 대구달서구(1,054명), 인천부평구(1,027명) 등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인천동구(260명), 부산중구(328명), 광주동구(397명), 대구중구(419명), 인천중구(430명), 부산서구(472명),

부산동구(480명) 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 4유형 지자체 읍면동의 경우, 복지급여 특성 반영 복지대상자를 기준으로 울산북구(1,271명)와 인천서구(1,178명), 인천부평구(1,159명), 부산강서구(1,081명), 울산중구(1,075명), 대전유성구(1,074명), 인천연수구(1,039명), 대구동구(1,010명), 울산동구(1,000명) 등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대구중구(367명)와 부산중구(418명), 대전동구(476명), 대전중구(500명), 광주동구(515명), 인천동구(543명) 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표 3-19〉 4유형 지자체별 복지대상자 대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현황

(단위: 명)

구분	본청			읍면동		
	기존 복지대상자 평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정원	정원 1인당 복지대상자	급여특성 반영 복지대상자 평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정원	정원 1인당 복지대상자
광주광산구	87694	98	895	95224	114	835
광주남구	54992	74	743	59802	77	777
광주동구	26582	67	397	29363	57	515
광주북구	107616	130	828	118473	145	817
광주서구	66556	81	822	73087	115	636
대구남구	46336	68	681	51391	66	779
대구달서구	128606	122	1054	139719	167	837
대구동구	95266	116	821	103035	102	1010
대구북구	107086	81	1322	114794	133	863
대구서구	55651	78	713	60788	85	715
대구수성구	87857	104	845	95710	117	818
대구중구	20956	50	419	22783	62	367
대전대덕구	44706	67	667	48716	77	633
대전동구	62799	85	739	69000	145	476
대전서구	93370	88	1061	100235	150	668
대전유성구	60093	64	939	63343	59	1074
대전중구	61573	81	760	67032	134	500
부산강서구	26928	39	690	28115	26	1081
부산금정구	55059	65	847	59494	68	875
부산남구	65138	71	917	69875	84	832
부산동구	28775	60	480	32085	50	642
부산동래구	57036	63	905	60760	69	881
부산부산진구	88981	65	1369	96045	130	739
부산북구	70943	86	825	77987	109	715
부산사상구	55451	63	880	60606	65	932
부산사하구	80797	98	824	87916	102	862
부산서구	32561	69	472	35673	59	605
부산수영구	41107	56	734	44151	45	981
부산연제구	47212	67	705	50601	62	816
부산영도구	39615	62	639	43916	60	732

구분	본청			읍면동		
	기존 복지대상자 평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정원	정원 1인당 복지대상자	급여특성 반영 복지대상자 평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정원	정원 1인당 복지대상자
부산중구	12481	38	328	13795	33	418
부산해운대구	87405	93	940	94594	96	985
울산남구	56095	58	967	58901	63	935
울산동구	33578	44	763	34990	35	1000
울산북구	39074	48	814	40682	32	1271
울산중구	48873	56	873	51588	48	1075
인천계양구	64428	88	732	69466	74	939
인천남구	97485	102	956	104445	118	885
인천남동구	114545	83	1380	123956	136	911
인천동구	19725	76	260	21190	39	543
인천부평구	117082	114	1027	127520	110	1159
인천서구	101603	95	1070	108337	92	1178
인천연수구	57959	91	637	62338	60	1039
인천중구	26201	61	430	28108	42	669

5) 5유형 지자체: 도·농형 기초자치단체

- 5유형 지자체 본청의 복지 공무원 1인 당 기존 복지대상자 규모에 있어, 제주시(1,137명)와 청주시(1,069명), 경주시(981명), 아산시(960명), 당진시(923명) 등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문경시(453명), 서산시(507명), 삼척시(517명), 공주시(545명), 광양시(566명), 통영시(573명), 사천시(584명), 제천시(586명) 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 5유형 지자체 읍면동의 경우, 복지급여 특성 반영 복지대상자를 기준으로 아산시(1,013명), 평택시(863명), 광양시(831명), 서귀포시(807명) 등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김제시(318명), 문경시(382명), 김천시(387명) 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표 3-20〉 5유형 지자체별 복지대상자 대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현황

(단위: 명)

구분	본청			읍면동		
	기존 복지대상자 평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정원	정원 1인당 복지대상자	급여특성 반영 복지대상자 평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정원	정원 1인당 복지대상자
강원강릉시	54791	79	694	59317	82	723
강원삼척시	20170	39	517	21972	39	563
강원원주시	74103	91	814	79963	142	563
강원춘천시	64310	102	630	70167	150	468
경기평택시	96139	133	723	101809	118	863
경남거제시	51625	59	875	53468	86	622

구분	본청			읍면동		
	기존 복지대상자 평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정원	정원 1인당 복지대상자	급여특성 반영 복지대상자 평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정원	정원 1인당 복지대상자
경남밀양시	33941	55	617	36712	87	422
경남사천시	33308	57	584	35721	67	533
경남진주시	81362	134	607	87282	134	651
경남통영시	36121	63	573	38830	61	637
경북경산시	62187	79	787	66345	132	503
경북경주시	66729	68	981	70975	135	526
경북구미시	81459	99	823	85752	152	564
경북김천시	42144	69	611	45284	117	387
경북문경시	24919	55	453	26711	70	382
경북상주시	36685	57	644	38992	83	470
경북안동시	50942	71	717	54758	117	468
경북영주시	33945	49	693	36797	75	491
경북영천시	34216	45	760	37092	77	482
전남광양시	32844	58	566	34887	42	831
전남나주시	36269	51	711	38892	85	458
전남순천시	63023	89	708	67209	89	755
전남여수시	74661	94	794	80412	120	670
전북군산시	74614	109	685	81768	119	687
전북김제시	34795	57	610	38502	121	318
전북남원시	30766	51	603	33582	78	431
전북익산시	82154	104	790	90129	154	585
전북정읍시	41766	66	633	45837	102	449
제주서귀포시	45069	69	653	48417	60	807
제주제주시	106852	94	1137	114518	212	541
충남공주시	32140	59	545	34482	71	486
충남당진시	40612	44	923	42193	55	767
충남보령시	32146	53	607	34399	67	513
충남서산시	42078	83	507	44056	97	454
충남아산시	72979	76	960	76955	76	1013
충북제천시	37499	64	586	40648	96	423
충북청주시	171118	160	1069	182062	252	722
충북충주시	54289	80	679	57983	122	475

6) 6유형 지자체: 대규모 농촌형 기초자치단체

○ 6유형 지자체 본청의 복지 공무원 1인 당 기존 복지대상자 규모에 있어, 달성군(905명)과 고령군(811명), 해남군(753명) 등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철원군(356명)과 횡성군(371명), 영암군(395명), 영동군(401명) 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 6유형 지자체 읍면동의 경우, 복지급여 특성 반영 복지대상자를 기준으로 기장군(1,511명)

과 달성군(989명), 울주군(880명), 칠곡군(876명) 등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금산군(330명)과 영동군(348명), 울진군(350명), 예산군(351명) 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표 3-21〉 6유형 지자체별 복지대상자 대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현황

(단위: 명)

구분	본청			읍면동		
	기존 복지대상자 평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정원	정원 1인당 복지대상자	급여특성 반영 복지대상자 평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정원	정원 1인당 복지대상자
강원철원군	12798	36	356	13846	29	477
강원홍천군	19125	35	546	20225	54	375
강원횡성군	13742	37	371	14576	30	486
경기가평군	18379	41	448	19684	38	518
경기양평군	28470	38	749	30248	60	504
경남거창군	21895	30	730	23712	56	423
경남고성군	19019	37	514	20210	44	459
경남창녕군	22680	40	567	24135	58	416
경남하동군	18146	32	567	19454	50	389
경남합안군	19969	36	555	21285	41	519
경남합천군	20044	36	557	21305	54	395
경북예천군	19266	32	602	20507	48	427
경북울진군	17164	39	440	18880	54	350
경북의성군	23827	40	596	25390	48	529
경북칠곡군	28723	60	479	30647	35	876
대구달성군	59707	66	905	63303	64	989
부산기장군	42238	57	741	45327	30	1511
울산울주군	47187	63	749	49267	56	880
인천강화군	21268	34	626	22679	39	582
전남고흥군	30005	37	811	32338	83	390
전남담양군	16327	26	628	17522	36	487
전남무안군	25321	35	723	27067	55	492
전남영광군	20377	37	551	22176	58	382
전남영암군	18949	48	395	20264	47	431
전남완도군	20424	34	601	22470	59	381
전남장성군	16346	22	743	17688	43	411
전남해남군	29351	39	753	31520	64	492
전남화순군	20591	37	557	22208	52	427
전북고창군	23199	32	725	25214	53	476
전북부안군	21150	35	604	23048	48	480
전북완주군	30551	50	611	33008	68	485
충남금산군	19025	32	595	20443	62	330
충남부여군	26399	37	713	28492	76	375
충남서천군	22273	33	675	23842	61	391
충남예산군	25766	40	644	27356	78	351
충남태안군	20415	42	486	21596	53	407
충남홍성군	29818	41	727	31648	73	434

구분	본청			읍면동		
	기존 복지대상자 평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정원	정원 1인당 복지대상자	급여특성 반영 복지대상자 평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정원	정원 1인당 복지대상자
충북영동군	17659	44	401	18809	54	348
충북옥천군	17416	31	562	18701	51	367
충북음성군	26024	49	531	27496	48	573
충북진천군	17990	41	439	19011	36	528

7) 7유형 지자체: 대규모 농촌형 기초자치단체

- 7유형 지자체 본청의 복지 공무원 1인 당 기존 복지대상자 규모에 있어, 보성군(671명)과 진도군(571명), 강진군(564명), 영덕군(545명) 등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울릉군(196명)과 양구군(213명), 인제군(231명), 화천군(247명) 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 7유형 지자체 읍면동의 경우, 복지급여 특성 반영 복지대상자를 기준으로 증평군(720명)과 영양군(471명), 진도군(454명), 고령군(452명) 등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울릉군(186명)과 옹진군(250명), 보은군(281명), 연천군(282명), 정선군(289명) 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표 3-22〉 7유형 지자체별 복지대상자 대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현황

(단위: 명)

구분	본청			읍면동		
	기존 복지대상자 평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정원	정원 1인당 복지대상자	급여특성 반영 복지대상자 평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정원	정원 1인당 복지대상자
강원고성군	9200	32	288	9943	32	311
강원양구군	6606	31	213	7196	23	313
강원양양군	8928	35	255	9637	29	332
강원영월군	12548	32	392	13356	32	417
강원인제군	8785	38	231	9415	23	409
강원정선군	11274	33	342	12121	42	289
강원평창군	11872	34	349	12640	30	421
강원화천군	7397	30	247	7951	24	331
경기연천군	14053	29	485	15224	54	282
경남남해군	18768	45	417	20069	49	410
경남산청군	14262	30	475	15274	46	332
경남의령군	11580	26	445	12287	36	341
경남함양군	15409	34	453	16538	39	424
경북고령군	11784	29	406	12652	28	452
경북군위군	9685	30	323	10261	26	395
경북봉화군	13442	29	464	14388	39	369
경북성주군	15519	30	517	16519	46	359

구분	본청			읍면동		
	기존 복지대상자 평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정원	정원 1인당 복지대상자	급여특성 반영 복지대상자 평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정원	정원 1인당 복지대상자
경북영덕군	15816	29	545	17251	46	375
경북영양군	7412	27	275	8012	17	471
경북울릉군	2552	13	196	2785	15	186
경북청도군	16021	34	471	17229	39	442
경북청송군	10324	20	516	11030	27	409
인천옹진군	5906	21	281	6261	25	250
전남강진군	14660	26	564	15810	42	376
전남곡성군	12226	29	422	13157	39	337
전남구례군	10379	30	346	11202	33	339
전남보성군	18778	28	671	20365	53	384
전남신안군	17127	34	504	18421	56	329
전남장흥군	16140	34	475	17716	54	328
전남진도군	13144	23	571	14514	32	454
전남함평군	13922	31	449	14890	37	402
전북무주군	9835	28	351	10625	27	394
전북순창군	11565	22	526	12349	38	325
전북임실군	12285	33	372	13370	34	393
전북장수군	9446	26	363	10199	31	329
전북진안군	10666	25	427	11446	37	309
충남청양군	12135	33	368	12765	37	345
충북괴산군	13993	37	378	15030	46	327
충북단양군	10147	38	267	10900	33	330
충북보은군	12814	49	262	13763	49	281
충북증평군	9519	32	297	10084	14	720

제 4 장

적정·증원 소요인력 추계 및 배치 방안

제1절 시군구 전달체계 정상화 증원 소요인력 추계

제2절 증원 소요인력 배치 방안

제3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적정 소요인력 추계

제4절 커뮤니티케어 적정 소요인력 추계

4

적정·증원 소요인력 추계 및 배치 방안 <

제1절 시군구 전달체계 정상화 증원 소요인력 추계

1.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1인 당 적정 복지수요 기준 설정

- 시군구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 유형별 평균 복지대상자 규모와 적정 기준 직무량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복지수요와 연계한 적정 소요인력 기준을 설정함.
- 시군구 본청의 사회복지 공무원 1인이 담당하기에 적정한 복지수요는 1유형은 710명, 2유형 490명, 3유형 470명, 4유형 480명, 5유형 530명, 6유형 330명, 7유형 200명임.
- 시군구 읍면동의 경우, 복지급여 특성 반영 복지대상자를 기준으로 1유형 570명, 2유형 570명, 3유형 340명, 4유형 580명, 5유형 450명, 6유형 470명, 7유형 300명임.

<표 4-1> 시군구 유형별 복지 담당 공무원 1인 당 복지수요

(단위: 명)

구분	본청			읍면동		
	평균 복지수요	적정 평균 인력규모	인력 1인당 복지수요	평균 복지수요	적정 평균 인력규모	인력 1인당 복지수요
1유형: 광역 도시형	148,749	209.13	711.28	5,033	8.90	565.51
2유형: 일반 도시형	47,294	96.76	488.78	4,128	7.19	574.13
3유형: 대규모 제한 도시형	71,523	151.90	470.86	4,601	13.66	336.82
4유형: 소규모 제한 도시형	63,043	131.09	480.91	4,282	7.37	581.00
5유형: 도·농형	54,862	103.65	529.30	2,754	6.16	447.08
6유형: 대규모 농촌형	23,635	72.32	326.81	2,402	5.17	464.60
7유형: 소규모 농촌형	11,901	59.56	199.82	1,544	5.19	297.50

<표 4-2> 시군구 유형별 복지수요 연계 적정 소요인력 기준

(단위: 명)

구분	복지수요 고려 적정 소요인력 기준	
	본청	읍면동
1유형: 광역 도시형	복지수요 710명 당 1명	복지수요 570명 당 1명
2유형: 일반 도시형	복지수요 490명 당 1명	복지수요 570명 당 1명
3유형: 대규모 제한 도시형	복지수요 470명 당 1명	복지수요 340명 당 1명
4유형: 소규모 제한 도시형	복지수요 480명 당 1명	복지수요 580명 당 1명
5유형: 도·농형	복지수요 530명 당 1명	복지수요 450명 당 1명
6유형: 대규모 농촌형	복지수요 330명 당 1명	복지수요 470명 당 1명
7유형: 소규모 농촌형	복지수요 200명 당 1명	복지수요 300명 당 1명

2. 적정 소요인력 및 증원 소요인력 추계

- 앞서 산출된 적정 소요인력 기준을 적용한 결과, 전국 기준 시군구 본청의 적정 인력 규모는 24,343명, 읍면동은 25,929명으로 시군구 전체 50,272명이 산출됨.
- 그 다음으로 적정 소요인력 대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정원을 고려하여 증원 소요인력을 산출하였음.
 - 즉, 증원 소요인력은 적정 소요인력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정원을 차감한 것임.
- 시군구 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필요한 증원 소요인력 산출 결과, 본청은 전국 기준으로 9,021명(정원 15,530명 대비 58%)이 증원이 필요하고, 읍면동의 경우 6,779명(정원 19,731명 대비 34.4%)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어, 시군구 전체 증원 소요인력은 총 15,800명(정원 35,261명 대비 44.8%)이 산출됨.
 - 본청 정원이 복지수요 연계 적정 소요인력 기준을 충족해 증원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시군구는 19개소로 전체 229개 시군구 가운데 8.3%에 불과함.
 - 읍면동 정원에서 복지수요 대비 적정 인력 규모를 이미 충원하고 있는 시군구는 53개소로 전체 시군구 가운데 23.4%에 그침.

〈표 4-3〉 시군구 유형별 적정 소요인력 및 증원 소요인력 규모 추계

(단위: 명)

구분	전체			본청			읍면동		
	정원 (평균)	적정 소요인력 (평균)	증원 소요인력 (평균)	정원 (평균)	적정 소요인력 (평균)	증원 소요인력 (평균)	정원 (평균)	적정 소요인력 (평균)	증원 소요인력 (평균)
전체	35,261 (154.0)	50,272 (219.5)	15,800 (69.0)	15,530 (67.8)	24,343 (106.3)	9,021 (39.4)	19,731 (5.6)	25,929 (7.4)	6,779 (1.9)
1유형: 광역 도시형	5,049 (360.6)	6,810 (486.4)	1,783 (127.4)	2,269 (162.1)	2,934 (209.6)	671 (47.9)	2,780 (5.9)	3,876 (8.3)	1,112 (2.4)
2유형: 일반 도시형	3,457 (133.0)	4,800 (184.6)	1,514 (58.2)	1,551 (59.7)	2,506 (96.4)	1,002 (38.5)	1,906 (6.1)	2,294 (7.3)	512 (1.6)
3유형: 대규모 제한 도시형	6,406 (256.2)	9,472 (378.9)	3,185 (127.4)	2,620 (104.8)	3,807 (152.3)	1,257 (50.3)	3,786 (8.9)	5,665 (13.4)	1,928 (4.5)
4유형: 소규모 제한 도시형	7,077 (160.8)	10,955 (249.0)	4,034 (91.7)	3,365 (76.5)	5,782 (131.4)	2,489 (56.6)	3,712 (5.5)	5,173 (7.6)	1,545 (2.3)
5유형: 도·농형	6,807 (179.1)	8,904 (234.3)	2,187 (57.6)	2,865 (75.4)	3,935 (103.6)	1,083 (28.5)	3,942 (5.0)	4,969 (6.3)	1,104 (1.4)
6유형: 대규모 농촌형	3,757 (91.6)	5,141 (125.4)	1,597 (39.0)	1,611 (39.3)	2,938 (71.7)	1,327 (32.4)	2,146 (4.6)	2,203 (4.7)	270 (0.6)
7유형: 소규모 농촌형	2,708 (66.0)	4,190 (102.2)	1,500 (36.6)	1,249 (30.5)	2,441 (59.5)	1,192 (29.1)	1,459 (4.1)	1,749 (4.9)	308 (0.9)

3. 시군구별 적정 소요인력 및 증원 소요인력 추계

가. 1유형 지자체: 광역 도시형 기초자치단체

- 1유형 지자체 본청 정원에 적정 소요인력을 이미 충원한 지자체는 안산시가 유일하며, 읍면동 정원에서는 창원시가 유일함.

〈표 4-4〉 1유형 지자체별 적정 소요인력 및 증원 소요인력 규모 추계

(단위: 명)

구분	전체			본청			읍면동		
	정원	적정 소요인력	증원 소요인력	정원	적정 소요인력	증원 소요인력	정원	적정 소요인력	증원 소요인력
경기도양시	436	597	161	235	257	22	201	340	139
경기남양주시	260	465	205	101	201	100	159	264	105
경기부천시	380	527	147	121	227	106	259	300	41
경기성남시	406	536	130	224	230	6	182	306	124
경기수원시	521	660	139	238	286	48	283	374	91
경기안산시	336	427	97	188	182	0	148	245	97
경기안양시	306	330	24	124	143	19	182	187	5
경기용인시	349	531	182	183	233	50	166	298	132
경기화성시	287	415	128	128	181	53	159	234	75
경남김해시	229	360	131	115	154	39	114	206	92
경남창원시	624	687	79	217	296	79	407	391	0
경북포항시	305	396	91	124	169	45	181	227	46
전북진주시	311	492	181	143	208	65	168	284	116
충남천안시	299	387	88	128	167	39	171	220	49

나. 2유형 지자체: 일반 도시형 기초자치단체

- 2유형 지자체 본청 정원에 적정 소요인력을 이미 충원한 지자체는 속초시와 태백시, 과천시, 계룡시이며, 읍면동 정원의 경우 동해시와 태백시, 과천시, 동두천시, 여주시, 이천시, 계룡시, 논산시가 해당됨.

〈표 4-5〉 2유형 지자체별 적정 소요인력 및 증원 소요인력 규모 추계

(단위: 명)

구분	전체			본청			읍면동		
	정원	적정 소요인력	증원 소요인력	정원	적정 소요인력	증원 소요인력	정원	적정 소요인력	증원 소요인력
강원동해시	107	96	1	49	50	1	58	46	0

구분	전체			본청			읍면동		
	정원	적정 소요인력	증원 소요인력	정원	적정 소요인력	증원 소요인력	정원	적정 소요인력	증원 소요인력
강원속초시	83	83	1	44	43	0	39	40	1
강원태백시	89	51	0	42	26	0	47	25	0
경기과천시	61	31	0	36	16	0	25	15	0
경기광명시	156	252	96	71	132	61	85	120	35
경기광주시	131	265	134	72	140	68	59	125	66
경기구리시	115	152	37	61	79	18	54	73	19
경기군포시	137	199	62	68	104	36	69	95	26
경기김포시	156	308	152	65	162	97	91	146	55
경기동두천시	131	109	3	53	56	3	78	53	0
경기시흥시	182	306	124	83	160	77	99	146	47
경기안성시	117	169	52	52	88	36	65	81	16
경기양주시	111	194	83	39	101	62	72	93	21
경기여주시	125	113	5	54	59	5	71	54	0
경기오산시	132	158	26	66	83	17	66	75	9
경기의왕시	79	107	28	47	56	9	32	51	19
경기의정부시	230	382	152	83	198	115	147	184	37
경기이천시	144	175	32	60	92	32	84	83	0
경기파주시	204	371	167	86	194	108	118	177	59
경기포천시	137	149	12	67	77	10	70	72	2
경기하남시	114	177	63	46	93	47	68	84	16
경남양산시	178	300	122	85	157	72	93	143	50
세종시	145	216	71	54	114	60	91	102	11
전남목포시	173	250	77	75	129	54	98	121	23
충남계룡시	39	29	0	25	15	0	14	14	0
충남논산시	181	158	14	68	82	14	113	76	0

다. 3유형 지자체: 대규모 제한도시형 기초자치단체

○ 3유형 지자체 본청 정원에 적정 소요인력을 이미 충원한 지자체는 용산구와 종로구, 중구이며, 읍면동 정원의 경우 서대문구와 용산구, 종로구가 해당됨.

〈표 4-6〉 3유형 지자체별 적정 소요인력 및 증원 소요인력 규모 추계

(단위:명)

구분	전체			본청			읍면동		
	정원	적정 소요인력	증원 소요인력	정원	적정 소요인력	증원 소요인력	정원	적정 소요인력	증원 소요인력
서울강남구	208	358	150	104	144	40	104	214	110
서울강동구	290	406	116	123	164	41	167	242	75
서울강북구	299	425	126	124	169	45	175	256	81

구분	전체			본청			읍면동		
	정원	적정 소요인력	증원 소요인력	정원	적정 소요인력	증원 소요인력	정원	적정 소요인력	증원 소요인력
서울강서구	383	640	257	157	256	99	226	384	158
서울관악구	317	475	158	103	191	88	214	284	70
서울광진구	273	303	30	102	122	20	171	181	10
서울구로구	260	417	157	106	169	63	154	248	94
서울금천구	201	266	65	101	106	5	100	160	60
서울노원구	273	623	350	101	247	146	172	376	204
서울도봉구	203	385	182	102	154	52	101	231	130
서울동대문구	215	377	162	42	151	109	173	226	53
서울동작구	249	356	107	107	144	37	142	212	70
서울마포구	267	338	71	106	137	31	161	201	40
서울서대문구	303	320	17	112	129	17	191	191	0
서울서초구	180	285	105	98	116	18	82	169	87
서울성동구	224	288	64	87	116	29	137	172	35
서울성북구	329	467	138	138	188	50	191	279	88
서울송파구	262	497	235	116	202	86	146	295	149
서울양천구	262	427	165	95	172	77	167	255	88
서울영등포구	301	329	28	119	133	14	182	196	14
서울용산구	244	197	0	110	79	0	134	118	0
서울은평구	335	546	211	146	219	73	189	327	138
서울종로구	191	139	0	75	56	0	116	83	0
서울중구	135	129	14	72	52	0	63	77	14
서울중랑구	202	479	277	74	191	117	128	288	160

라. 4유형 지자체: 소규모 제한 도시형 기초자치단체

- 4유형 지자체 본청 정원에 적정 소요인력을 이미 충원한 지자체는 광주동구와 대구중구, 부산동구, 부산서구, 부산중구이며, 읍면동 정원의 경우 광주동구와 대구중구, 대전동구, 부산중구가 해당됨.

〈표 4-7〉 4유형 지자체별 적정 소요인력 및 증원 소요인력 규모 추계

(단위: 명)

구분	전체			본청			읍면동		
	정원	적정 소요인력	증원 소요인력	정원	적정 소요인력	증원 소요인력	정원	적정 소요인력	증원 소요인력
광주광산구	212	347	135	98	183	85	114	164	50
광주남구	151	218	67	74	115	41	77	103	26
광주동구	124	106	0	67	55	0	57	51	0
광주북구	275	428	153	130	224	94	145	204	59
광주서구	196	265	69	81	139	58	115	126	11

구분	전체			본청			읍면동		
	정원	적정 소요인력	증원 소요인력	정원	적정 소요인력	증원 소요인력	정원	적정 소요인력	증원 소요인력
대구남구	134	186	52	68	97	29	66	89	23
대구달서구	289	509	220	122	268	146	167	241	74
대구동구	218	376	158	116	198	82	102	178	76
대구북구	214	421	207	81	223	142	133	198	65
대구서구	163	221	58	78	116	38	85	105	20
대구수성구	221	348	127	104	183	79	117	165	48
대구중구	112	83	0	50	44	0	62	39	0
대전대덕구	144	177	33	67	93	26	77	84	7
대전동구	230	250	46	85	131	46	145	119	0
대전서구	238	368	130	88	195	107	150	173	23
대전유성구	123	234	111	64	125	61	59	109	50
대전중구	215	244	47	81	128	47	134	116	0
부산강서구	65	104	39	39	56	17	26	48	22
부산금정구	133	218	85	65	115	50	68	103	35
부산남구	155	256	101	71	136	65	84	120	36
부산동구	110	115	5	60	60	0	50	55	5
부산동래구	132	224	92	63	119	56	69	105	36
부산부산진구	195	351	156	65	185	120	130	166	36
부산북구	195	282	87	86	148	62	109	134	25
부산사상구	128	220	92	63	116	53	65	104	39
부산사하구	200	320	120	98	168	70	102	152	50
부산서구	128	130	3	69	68	0	59	62	3
부산수영구	101	162	61	56	86	30	45	76	31
부산연제구	129	185	56	67	98	31	62	87	25
부산영도구	122	159	37	62	83	21	60	76	16
부산중구	71	50	0	38	26	0	33	24	0
부산해운대구	189	345	156	93	182	89	96	163	67
울산남구	121	219	98	58	117	59	63	102	39
울산동구	79	130	51	44	70	26	35	60	25
울산북구	80	151	71	48	81	33	32	70	38
울산중구	104	191	87	56	102	46	48	89	41
인천계양구	162	254	92	88	134	46	74	120	46
인천남구	220	383	163	102	203	101	118	180	62
인천남동구	219	453	234	83	239	156	136	214	78
인천동구	115	78	0	76	41	0	39	37	0
인천부평구	224	464	240	114	244	130	110	220	110
인천서구	187	399	212	95	212	117	92	187	95
인천연수구	151	228	77	91	121	30	60	107	47
인천중구	103	103	6	61	55	0	42	48	6

마. 5유형 지자체: 도·농형 기초자치단체

- 5유형 지자체 본청 정원에 적정 소요인력을 이미 증원한 지자체는 삼척시와 문경시, 서산시이며, 읍면동 정원의 경우 밀양시와 김천시, 문경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제천시가 해당됨.

〈표 4-8〉 5유형 지자체별 적정 소요인력 및 증원 소요인력 규모 추계

(단위: 명)

구분	전체			본청			읍면동		
	정원	적정 소요인력	증원 소요인력	정원	적정 소요인력	증원 소요인력	정원	적정 소요인력	증원 소요인력
강원강릉시	161	235	74	79	103	24	82	132	50
강원삼척시	78	87	10	39	38	0	39	49	10
강원원주시	233	318	85	91	140	49	142	178	36
강원춘천시	252	277	25	102	121	19	150	156	6
경기평택시	251	407	156	133	181	48	118	226	108
경남거제시	145	216	71	59	97	38	86	119	33
경남밀양시	142	146	9	55	64	9	87	82	0
경남사천시	124	142	18	57	63	6	67	79	12
경남진주시	268	348	80	134	154	20	134	194	60
경남통영시	124	154	30	63	68	5	61	86	25
경북경산시	211	264	53	79	117	38	132	147	15
경북경주시	203	284	81	68	126	58	135	158	23
경북구미시	251	345	94	99	154	55	152	191	39
경북김천시	186	181	11	69	80	11	117	101	0
경북문경시	125	106	0	55	47	0	70	59	0
경북상주시	140	156	16	57	69	12	83	87	4
경북안동시	188	218	30	71	96	25	117	122	5
경북영주시	124	146	22	49	64	15	75	82	7
경북영천시	122	147	25	45	65	20	77	82	5
전남광양시	100	140	40	58	62	4	42	78	36
전남나주시	136	154	18	51	68	17	85	86	1
전남순천시	178	268	90	89	119	30	89	149	60
전남여수시	214	320	106	94	141	47	120	179	59
전북군산시	228	323	95	109	141	32	119	182	63
전북김제시	178	152	9	57	66	9	121	86	0
전북남원시	129	133	7	51	58	7	78	75	0
전북익산시	258	355	97	104	155	51	154	200	46
전북정읍시	168	181	13	66	79	13	102	102	0
제주서귀포시	129	193	64	69	85	16	60	108	48
제주제주시	306	456	151	94	202	108	211.5	254	43
충남공주시	130	138	8	59	61	2	71	77	6
충남당진시	99	171	72	44	77	33	55	94	39

구분	전체			본청			읍면동		
	정원	적정 소요인력	증원 소요인력	정원	적정 소요인력	증원 소요인력	정원	적정 소요인력	증원 소요인력
충남보령시	120	137	17	53	61	8	67	76	9
충남서산시	180	177	1	83	79	0	97	98	1
충남아산시	152	309	157	76	138	62	76	171	95
충북제천시	160	161	7	64	71	7	96	90	0
충북청주시	412	728	316	160	323	163	252	405	153
충북충주시	202	231	29	80	102	22	122	129	7

바. 6유형 지자체: 대규모 농촌형 기초자치단체

○ 6유형 지자체 본청 정원에 적정 소요인력을 이미 충원한 지자체는 없고, 읍면동 정원의 경우 철원군과 홍천군, 거창군, 고성군, 창녕군, 하동군, 함천군, 예천군, 울진군, 고흥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화순군,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영동군, 옥천군이 해당됨.

〈표 4-9〉 6유형 지자체별 적정 소요인력 및 증원 소요인력 규모 추계

(단위: 명)

구분	전체			본청			읍면동		
	정원	적정 소요인력	증원 소요인력	정원	적정 소요인력	증원 소요인력	정원	적정 소요인력	증원 소요인력
강원철원군	65	68	3	36	39	3	29	29	0
강원홍천군	89	101	23	35	58	23	54	43	0
강원횡성군	67	73	6	37	42	5	30	31	1
경기가평군	79	98	19	41	56	15	38	42	4
경기양평군	98	150	52	38	86	48	60	64	4
경남거창군	86	116	36	30	66	36	56	50	0
경남고성군	81	101	21	37	58	21	44	43	0
경남창녕군	98	120	29	40	69	29	58	51	0
경남하동군	82	96	23	32	55	23	50	41	0
경남함안군	77	106	29	36	61	25	41	45	4
경남합천군	90	106	25	36	61	25	54	45	0
경북예천군	80	102	26	32	58	26	48	44	0
경북울진군	93	92	13	39	52	13	54	40	0
경북의성군	88	126	38	40	72	32	48	54	6
경북칠곡군	95	152	57	60	87	27	35	65	30
대구달성군	130	316	186	66	181	115	64	135	71
부산기장군	87	224	137	57	128	71	30	96	66
울산울주군	119	248	129	63	143	80	56	105	49

구분	전체			본청			읍면동		
	정원	적정 소요인력	증원 소요인력	정원	적정 소요인력	증원 소요인력	정원	적정 소요인력	증원 소요인력
인천강화군	73	112	39	34	64	30	39	48	9
전남고흥군	120	160	54	37	91	54	83	69	0
전남담양군	62	86	24	26	49	23	36	37	1
전남무안군	90	135	45	35	77	42	55	58	3
전남영광군	95	109	25	37	62	25	58	47	0
전남영암군	95	100	9	48	57	9	47	43	0
전남완도군	93	110	28	34	62	28	59	48	0
전남장성군	65	88	28	22	50	28	43	38	0
전남해남군	103	156	53	39	89	50	64	67	3
전남화순군	89	109	25	37	62	25	52	47	0
전북고창군	85	124	39	32	70	38	53	54	1
전북부안군	83	113	30	35	64	29	48	49	1
전북완주군	118	163	45	50	93	43	68	70	2
충남금산군	94	101	26	32	58	26	62	43	0
충남부여군	113	141	43	37	80	43	76	61	0
충남서천군	94	118	34	33	67	34	61	51	0
충남예산군	118	136	38	40	78	38	78	58	0
충남태안군	95	108	20	42	62	20	53	46	0
충남홍성군	114	157	49	41	90	49	73	67	0
충북영동군	98	94	10	44	54	10	54	40	0
충북옥천군	82	93	22	31	53	22	51	40	0
충북음성군	97	138	41	49	79	30	48	59	11
충북진천군	77	95	18	41	55	14	36	40	4

사. 7유형 지자체: 대규모 농촌형 기초자치단체

- 7유형 지자체 본청 정원에 적정 소요인력을 이미 충원한 지자체는 울릉군이 유일하며, 읍면동 정원의 경우 정선군과 연천군, 울릉군, 옹진군, 보은군이 해당됨.

〈표 4-10〉 7유형 지자체별 적정 소요인력 및 증원 소요인력 규모 추계

(단위: 명)

구분	전체			본청			읍면동		
	정원	적정 소요인력	증원 소요인력	정원	적정 소요인력	증원 소요인력	정원	적정 소요인력	증원 소요인력
강원고성군	64	79	15	32	46	14	32	33	1
강원양구군	54	57	3	31	33	2	23	24	1
강원양양군	64	77	13	35	45	10	29	32	3
강원영월군	64	108	44	32	63	31	32	45	13
강원인제군	61	75	14	38	44	6	23	31	8

구분	전체			본청			읍면동		
	정원	적정 소요인력	증원 소요인력	정원	적정 소요인력	증원 소요인력	정원	적정 소요인력	증원 소요인력
강원정선군	75	96	23	33	56	23	42	40	0
강원평창군	64	101	37	34	59	25	30	42	12
강원화천군	54	64	10	30	37	7	24	27	3
경기연천군	83	121	41	29	70	41	54	51	0
경남남해군	94	161	67	45	94	49	49	67	18
경남산청군	76	122	46	30	71	41	46	51	5
경남의령군	62	99	37	26	58	32	36	41	5
경남함양군	73	132	59	34	77	43	39	55	16
경북고령군	57	101	44	29	59	30	28	42	14
경북군위군	56	82	26	30	48	18	26	34	8
경북봉화군	68	115	47	29	67	38	39	48	9
경북성주군	76	133	57	30	78	48	46	55	9
경북영덕군	75	137	62	29	79	50	46	58	12
경북영양군	44	64	20	27	37	10	17	27	10
경북울릉군	28	22	0	13	13	0	15	9	0
경북청도군	73	137	64	34	80	46	39	57	18
경북청송군	47	89	42	20	52	32	27	37	10
인천옹진군	46	51	9	21	30	9	25	21	0
전남강진군	68	126	58	26	73	47	42	53	11
전남곡성군	68	105	37	29	61	32	39	44	5
전남구례군	63	89	26	30	52	22	33	37	4
전남보성군	81	162	81	28	94	66	53	68	15
전남신안군	90	147	57	34	86	52	56	61	5
전남장흥군	88	140	52	34	81	47	54	59	5
전남진도군	55	114	59	23	66	43	32	48	16
전남함평군	68	120	52	31	70	39	37	50	13
전북무주군	55	84	29	28	49	21	27	35	8
전북순창군	60	99	39	22	58	36	38	41	3
전북임실군	67	106	39	33	61	28	34	45	11
전북장수군	57	81	24	26	47	21	31	34	3
전북진안군	62	91	29	25	53	28	37	38	1
충남청양군	70	104	34	33	61	28	37	43	6
충북괴산군	83	120	37	37	70	33	46	50	4
충북단양군	71	87	16	38	51	13	33	36	3
충북보은군	98	110	15	49	64	15	49	46	0
충북증평군	46	82	36	32	48	16	14	34	20

제2절 증원 소요인력 배치 방안

1. 시군구 본청 기능별·영역별 인력 배분 및 배치

- 앞서 산출된 전국 단위의 증원 소요인력 9,021명을 단기간에 모두 충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우선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배분 인력을 산정함으로써 단계적 증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력 배분·배치 기준은 지자체 복지행정에서의 업무 충실성 및 복지수요 대응력 강화를 도모한 것으로, 직무분석에서 도출된 실제 기준 대비 적정 기준 인력 규모의 차이와 비율에 근거하여 설정됨.
 - － 실제 기준 대비 적정 기준 인력 규모의 비율에 근거하여 증원 요구도 우선 순위를 산출함.
 - － 실제 기준 대비 적정 기준 인력 규모의 차이의 비중을 활용하여 증원 소요인력을 배분함.
- 이 기준에 따라 먼저 시군구 본청의 기능별로 전국 단위 증원 소요인력 9,021명을 배분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 증원 요구도가 가장 큰 자원 관리 기능은 265명, 그 다음으로 사업 기획 및 홍보 733명, 대상자 관리 1,234명, 시설 관리 1,105명, 상담 1,860명, 단체 및 법인 관리 611명, 복지급여·서비스신청·접수 920명,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801명, 일반행정업무 623명 등의 순임.

〈표 4-11〉 시군구 본청 증원 소요인력 기능별 배분·배치 기준 및 인력 규모

(단위: 명, %)

구분	배치 기준		배분 기준		증원 소요인력 배분	
	실제 대비 적정 인력 비율	증원 요구도 순위	실제 대비 적정 인력 차이	배분 비중	인력 배분	지자체 평균1)
전체	—	—	37.06	100	9,021	39.4
자원 관리	176.76	1	1.09	2.94	265	1.2
사업 기획 및 홍보	169.84	2	3.01	8.12	733	3.2
대상자 관리	167.51	3	5.07	13.68	1,234	5.4
시설 관리	167.46	4	4.54	12.25	1,105	4.8
사업 관리	163.07	5	3.57	9.63	869	3.8
상담	161.02	6	7.64	20.62	1,860	8.1
단체 및 법인 관리	160.77	7	2.51	6.77	611	2.7
복지급여·서비스신청·접수	160.67	8	3.78	10.20	920	4.0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154.56	9	3.29	8.88	801	3.5
일반행정업무(복지이외)	153	10	2.56	6.91	623	2.7
업무관련 역량 개발	—	—	—	—	—	—
행사 참여	—	—	—	—	—	—

○ 동일한 방식으로 시군구 본청의 영역별로 전국 단위의 증원 소요인력 9,021명을 배분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증원 요구도가 가장 큰 노인 영역은 1,107명, 그 다음으로 장애인 848명, 희망복지지원 674명, 통합조사 1,197명, 통합관리 1,202명, 보육 698명, 복지기획 및 정책 601명, 기초생활보장 652명, 여성·가족·다문화 577명, 아동·드림스타트 479명, 복지시설 470명, 청소년 276명, 자활 241명 등의 순임.

〈표 4-12〉 시군구 본청 증원 소요인력 영역별 배분·배치 기준 및 인력 규모

(단위: 명)

구분	배치 기준		배분 기준		증원 소요인력 배분	
	실제 대비 적정 인력 비율	증원 요구도 순위	실제 대비 적정 인력 차이	배분 비중	인력 배분	지자체 평균1)
전체	—	—	40.84	100	9,021	39.4
노인	180.17	1	5.01	12.3	1,107	4.8
장애인	179.68	2	3.84	9.4	848	3.7
희망복지지원	171.48	3	3.05	7.5	674	2.9
통합조사	168.57	4	5.42	13.3	1,197	5.2
통합관리	164.34	5	5.44	13.3	1,202	5.3
보육	161.71	6	3.16	7.7	698	3.1
복지기획 및 정책	157.61	7	2.72	6.7	601	2.6
기초생활보장	155.66	8	2.95	7.2	652	2.9
여성·가족·다문화	154.81	9	2.61	6.4	577	2.5
아동·드림스타트	153.01	10	2.17	5.3	479	2.1
복지시설	147.89	11	2.13	5.2	470	2.1
청소년	147.84	12	1.25	3.1	276	1.2
자활	139.38	13	1.09	2.7	241	1.1

2. 시군구 읍면동 기능별 인력 배분 및 배치

○ 읍면동 또한 실제 기준 대비 적정 기준 인력 규모의 차이와 비율에 관한 직무분석 결과에 기초해 배분·배치 기준을 설정함.

○ 이 기준에 의거해 시군구 읍면동 전국 단위의 증원 소요인력 6,779명을 기능별로 배분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증원 요구도가 가장 큰 상담 기능은 2,307명이며, 그 다음으로 찾아가는 방문 상담 911명, 사례관리 541명, 대상자 사후관리 1,054명, 복지사각지대 발굴 313명, 민관협력 256명, 신청·접수 997명, 기타 행정 업무 399명 등의 순임.

〈표 4-13〉 읍면동 증원 소요인력 배분·배치 기준 및 인력 규모

(단위: %, 명)

구분	배치 기준		배분 기준		증원 소요인력 배분	
	실제 대비 적정 인력 비율	증원 요구도 순위	실제 대비 적정 인력 차이	배분 비중	인력 배분	읍면동 평균1)
전체	—	—	2.38	100	6,779	1.9
상담	151.92	1	0.81	34.03	2,307	0.7
찾아가는 방문 상담	149.23	2	0.32	13.45	911	0.3
사례관리	148.72	3	0.19	7.98	541	0.2
대상자 사후관리	148.68	4	0.37	15.55	1,054	0.3
복지사각지대 발굴	144	5	0.11	4.62	313	0.1
민관협력	142.86	6	0.09	3.78	256	0.1
신청·접수	141.18	7	0.35	14.71	997	0.3
기타 행정 업무	129.17	8	0.14	5.88	399	0.1

제3절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증원 소요인력 추계

1. 산정 기준 설정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과 관련, 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전국 확대를 위한 추가 확충 인력규모를 산출함.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증원 소요인력의 산정 방법은 ① 서울시 읍면동의 적정 소요인력 기준(복지대상자 340명 당 공무원 1명)을 적용해 총 증원 인력 규모를 산출한 후, ②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단위업무와 관련된 인력규모를 합산하는 방식을 적용함.
 -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담인력 확충을 통해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의해 강화된 읍면동의 인력 수준까지 전국 읍면동의 인력 규모를 상향 평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단위업무는 “찾아가는 복지·보편적 복지”와 “원스톱 복지전문상담”, “동단위 사례관리”이며, 이는 읍면동 기능 가운데 상담, 신청·접수, 대상자 사후관리, 찾아가는 방문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례관리에 해당됨.

2. 증원 소요인력 산정

- 앞서 <표 4-1,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서울시(3유형)의 복지수요 연계 적정 인력규모 기준은 복지대상자 340명당 1명이며, 이를 전국 시군구 읍면동에 적용하여 산출된 증원 소요인력 규모는 총 16,386명임.
-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급여, 보편적 복지 등 기타복지의 상대적 직무량을 반영한 복지대상자 규모는 시군구 유형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며, 읍면동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정원 1인이 담당하는 복지대상자 규모 또한 큰 편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총 16,386명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업무에 해당하는 기능별 인력규모를 기준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증원 소요인력을 산출한 결과, 총 14,479명이 추계됨.
- 읍면동 기능 가운데 상담, 신청·접수, 대상자 사후관리, 찾아가는 방문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례관리와 관련된 인력 규모만을 합산한 것임.

<표 4-14> 서울시 읍면동의 복지수요 연계 적정 소요인력 기준 적용 시 증원 소요인력

(단위: 명)

유형	급여특성 반영 복지대상자 평균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정원 1인당 복지대상자 평균	서울시 읍면동 기준 적용 증원 소요인력 (복지대상자 340명 당 공무원 1명)
전체	3,265	591	16,386
1유형: 광역 도시형	5,033	833	3,714
2유형: 일반 도시형	4,128	670	1,947
3유형: 대규모 제한 도시형	4,601	517	1,928
4유형: 소규모 제한 도시형	4,282	819	5,110
5유형: 도·농형	2,754	571	2,639
6유형: 대규모 농촌형	2,402	501	906
7유형: 소규모 농촌형	1,544	366	142

<표 4-15>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증원 소요인력

(단위: 명, %)

구분	서울시 적정 기준 인력 규모		서울시 읍면동 기준 증원 소요인력 배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증원 소요인력
	인력규모(B)	비율		
전체	13.66	100	16,386	14,479
상담	4.49	32.86	5,386	5,386
신청·접수	2.16	15.82	2,591	2,591
대상자 사후관리	2.21	16.15	2,651	2,651
찾아가는 방문 상담	1.76	12.87	2,111	2,111
복지사각지대 발굴	0.60	4.39	720	720
사례관리	1.10	8.08	1,320	1,320
민관협력	0.52	3.82	624	—
기타 행정 업무	0.82	6.02	984	—

제4절 커뮤니티케어 증원 소요인력 추계

1. 산정 기준 설정

-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증원 소요인력은 읍면동 케어통합창구 전담을 위한 증원 소요인력을 중심으로 산출함.
 - 케어통합창구의 주요 기능(안)은 돌봄서비스 통합 안내와 서비스 신청 대행, 정착 지원, 사례관리 및 민관협력 활성화 등으로 요약됨.
 - 커뮤니티케어의 잠재적 수요자는 병원과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으로, 생활시설 22.7만명, 요양병원 44.2만명, 정신의료기관 6.9만명 등 총 74만명으로 추산됨.
- 커뮤니티케어 적정 소요인력 산정은 통합돌봄창구의 주요 기능과 관련된 전달체계 정상화 인력과 커뮤니티케어 잠재적 수요 대응 인력의 합을 구해 추계함.
 - 먼저 잠재적 수요 대응 인력의 산정은 ① 74만명의 잠재적 복지수요자를 시군구의 복지급여 특성 반영 복지대상자 규모에 비례하여 할당한 후, ② 시군구별 잠재적 복지수요자에 복지수요 연계 적정 인력 단위를 적용하여 적정 소요인력 규모를 산출하고, ③ 통합돌봄창구의 주요 기능과 관련된 상담과 신청·접수, 대상자 사후관리, 사례관리, 민관협력의 인력을 합산하여 산출함.
 - 읍면동 전달체계 정상화 관련 인력은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증원 소요인력 가운데, 신청·접수, 대상자 사후관리, 사례관리, 민관협력의 인력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이며, 이는 기존 복지대상자에 대한 읍면동의 업무충실성과 대응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 없이 신규 사업을 원활히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2. 적정 소요인력 추계

- 커뮤니티케어의 잠재적 복지수요에 해당하는 시설과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인 74만명에 기초수급권자 직무량 가중치인 1.484를 곱해 재산정한 결과 1,098,160명이 추계됨.
 - 이들은 복합적·장기적 복지욕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반적인 복지대상자에 비해 업무량 투입이 더 필요하다고 가정함.
- 커뮤니티케어 읍면동 통합돌봄창구 전담 증원인력 규모는 신규 복지 대상자 대응 인력인 1,723명과 전달체계 기능 정상화를 위한 인력 5,024명을 포함해 총 6,747명임
 - 복지급여 특성 복지대상자의 지역별 규모에 비례하여 할당한 후, 복지수요 연계 적정 인

력 단위를 적용하여 적정 소요인력을 산출한 결과는 총 2,324명이며, 이 가운데 통합돌봄창구 주요 기능인 상담과 신청·접수, 대상자 사후관리, 사례관리, 민관협력에 있어 해당하는 인력은 1,723명임.

- 상기 기능과 관련된 읍면동 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증원 소요인력은 총 5,024명임.

〈표 4-16〉 커뮤니티케어 복지수요 대응 증원 소요인력

(단위: 명)

구분	커뮤니티케어 잠재적 복지수요		복지수요 연계 적정 인력 단위	커뮤니티케어 잠재적 수요 대응 적정 소요인력
	계	읍면동 평균		
전체	1,098,160	313	-	2,324
1유형: 광역 도시형	198,151	423	복지수요 570명 당 1명	347
2유형: 일반 도시형	117,371	374	복지수요 570명 당 1명	205
3유형: 대규모 제한 도시형	172,851	408	복지수요 340명 당 1명	507
4유형: 소규모 제한 도시형	269,158	396	복지수요 580명 당 1명	466
5유형: 도·농형	200,537	253	복지수요 450명 당 1명	444
6유형: 대규모 농촌형	93,015	198	복지수요 470명 당 1명	199
7유형: 소규모 농촌형	47,077	131	복지수요 300명 당 1명	156

주: 1) 커뮤니티케어 잠재적 복지수요는 시설과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전국 기준 740,000명으로 추산됨. 이들에게는 보편적 복지대상자에 비해 업무량 투입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기초수급권자 직무량 가중치인 1.484를 곱해 복지수요를 계산정(1,098,160명)하고 소요인력 규모 산출에 적용함.

〈표 4-17〉 커뮤니티케어 통합돌봄창구 전담 증원 소요인력

(단위: 명, %)

구분	읍면동 적정 기준 인력 배분			통합돌봄창구 증원 소요인력		
	적정 인력	비율	배분 인력	통합돌봄창구 기능 관련 인력	읍면동 전달체계 정상화 인력	계
전체	7.53	100.00	2,324	1,723	5,024	6,747
상담	2.37	31.47	732	732	2133	2,865
신청·접수	1.20	15.94	371	371	1081	1,452
대상자 사후관리	1.13	15.01	349	349	1018	1,367
찾아가는 방문 상담	0.97	12.88	299	-	-	-
복지사각지대 발굴	0.36	4.78	111	-	-	-
사례관리	0.58	7.70	179	179	522	701
민관협력	0.30	3.98	92	92	270	362
기타 행정 업무	0.62	8.23	191	-	-	-

제 5 장 결론

제1절 분석 결과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제1절 분석 결과 요약

□ 시군구 본청 직무량 분석

- 업무의 충실성을 강화하고 미충족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시군구 본청의 적정 인력규모를 분석한 결과, 실제 현원인 평균 65.52명에 비해 40.84명이 더 필요한 평균 106.35명으로 파악됨.
- 시군구 본청 인력규모를 7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자체 유형에 따라 인력규모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차이가 가장 큰 기능은 1유형(86.76명)이며, 그 다음으로 3유형(60.49명)과 4유형(56.42명)의 순이며, 농촌형 지자체인 7유형(18.49명)과 5유형(24.59명)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의 차이가 비교적 적은 수준임.

□ 시군구 읍면동 직무량 분석

- 업무의 충실성을 강화하고 미충족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 인력규모는 실제 현원인 평균 5.14명에 비해 2.39명이 더 필요한 평균 7.53명임.
- 읍면동 인력규모를 7대 유형으로 구분한 결과, 지자체 유형별로 인력규모의 편차가 존재하는데,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 차이가 큰 유형은 3유형으로 4.68명에 달하며, 그 다음으로 1유형 광역 도시형(2.90명), 2유형 일반 도시형(2.47명), 4유형 소규모 제한 도시형(2.38명) 등의 순임.

□ 복지수요 대비 시군구 본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정원

- 사회복지직, 행정직 등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시군구 본청 정원을 복지대상자 규모를 고려하여 지자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유형에 따라 본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정원 1인당 복지대상자 규모에 큰 편차가 존재함.

□ 복지수요 대비 시군구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정원

- 급여 특성을 반영한 복지대상자 규모를 고려하여 시군구 읍면동 정원을 지자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형에 따라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정원 1인당 복지대상자 규모에 큰 차이가 있음.

□ 시군구 전달체계 정상화 적정·증원 소요인력 추계

- 시군구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 유형별 평균 복지대상자 규모와 적정 기준 직무량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복지수요와 연계한 적정 소요인력 기준을 설정함.
- 이 기준을 적용한 결과, 전국 기준 시군구 본청의 적정 인력규모는 준 24,343명, 읍면동은 25,929명으로 시군구 전체 50,272명이 산출됨.
- 그 다음으로 적정 소요인력 대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정원을 고려하여 증원 소요인력을 산출한 결과, 본청은 전국 기준으로 9,021명(정원 15,530명 대비 58%)이 증원이 필요하고, 읍면동의 경우 6,779명(정원 19,731명 대비 34.4%)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어, 시군구 전체 증원 소요인력은 총 15,800명(정원 35,261명 대비 44.8%)이 산출됨.

□ 시군구 본청 기능별 인력 배분 및 배치

- 시군구 본청의 기능별로 전국 단위 증원 소요인력 9,021명을 배분한 결과, 증원 요구도가 가장 큰 자원 관리 기능은 265명, 그 다음으로 사업 기획 및 홍보 733명, 대상자 관리 1,234명, 시설 관리 1,105명, 상담 1,860명, 단체 및 법인 관리 611명,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920명,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801명, 일반행정업무 623명 등의 순임.

□ 시군구 읍면동 기능별 인력 배분 및 배치

- 시군구 읍면동의 기능별로 전국 단위 증원 소요인력 6,779명을 배분한 결과, 증원 요구도가 가장 큰 상담 기능은 2,307명이며, 그 다음으로 찾아가는 방문 상담 911명, 사례관리 541명, 대상자 사후관리 1,054명, 복지사각지대 발굴 313명, 민관협력 256명, 신청·접수 997명, 기타 행정 업무 399명 등의 순임.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증원 소요인력 추계

- 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전국 확대를 위한 추가 확충 인력규모를 산출한 결과, 총 14,479명이 추계됨.

□ 커뮤니티케어 통합돌봄창구 전담 증원인력 추계

- 커뮤니티케어 읍면동 통합돌봄창구 전담 증원인력 규모는 신규 복지대상자 대응 인력인 1,723명과 전달체계 기능 정상화를 위한 인력 5,024명을 포함해 총 6,747명임.

제2절 정책 제언

□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적정 인력 확충 필요

- 복지인력의 부족은 정책집행의 효과성과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저해하는 핵심적 요인임.
- 시군구 읍면동뿐 아니라 본청에서도 공공전달체계 내실화에 필수적인 고유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적정 인력 규모를 배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증원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큰 자원 관리 기능, 사업 기획 및 홍보, 대상자 관리 등에 우선적인 인력 배치가 요구됨.

□ 지자체별 복지 인력 배치 격차 완화 시급

- (정보공개) 지자체의 사회복지공무원 정원 및 배치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지자체 전체 공무원 현황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어 있으나 사회복지공무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임.
- (기준인건비 산정 방식 변경) 교부세에 포함된 기준인건비 산정 방식에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급여대상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기준인건비 산정을 위한 10대 지표(인구수, 면적, 주간인구수, 65세이상 인구수, 사업체수, 자동차수, 장애인수, 법정민원 건수, 외국인수, 농경지 면적)에는 지자체 복지수요가 일부만 반영되는 한계가 있음.

□ 사회복지직 별도정원제 도입 검토

- 지자체별 인력 배치의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현행 공무원 총정원 관리방식이 아닌 사회복지직렬 분리해 정원을 관리해, 사회복지공무원의 합리적인 증원과 지자체 복지수요에 탄력적인 인력편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 사무에 일반행정직을 배치하는 것은 잦은 순화보직으로 인해 업무 효율성과 연속성을 저해함.

부록 1

: 시군구 본청 정책영역별·유형별 직무량 분석 <<

1. 지자체 유형별 직무량 분석: 복지기획 및 정책 영역

<부표 1-1> 복지기획 및 정책 영역 직무량 분석: 1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6.33	100.00	15.04	100.00	8.71	237.53
상담	0.41	6.55	0.56	3.72	0.14	134.80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10	1.63	0.18	1.18	0.07	171.16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35	5.54	0.88	5.85	0.53	250.95
사업 기획 및 홍보	0.97	15.33	2.07	13.78	1.10	213.51
사업 관리	1.05	16.57	2.11	14.04	1.06	201.26
대상자 관리	0.17	2.71	0.23	1.56	0.06	136.36
시설 관리	0.83	13.07	2.66	17.67	1.83	321.16
자원 관리	0.26	4.16	0.38	2.53	0.12	144.59
단체 및 법인 관리	0.52	8.26	2.10	13.97	1.58	401.72
행사 참여	0.51	8.09	1.25	8.30	0.74	243.69
업무관련 역량 개발	0.37	5.83	1.10	7.32	0.73	298.27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78	12.26	1.52	10.09	0.74	195.42

<부표 1-2> 복지기획 및 정책 영역 직무량 분석: 2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4.38	100.00	6.13	100.00	1.76	140.23
상담	0.21	4.76	0.27	4.39	0.06	129.45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04	1.03	0.06	0.96	0.01	130.75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14	3.21	0.17	2.73	0.03	119.03
사업 기획 및 홍보	0.92	20.93	1.36	22.10	0.44	148.08
사업 관리	0.93	21.26	1.41	22.98	0.48	151.57
대상자 관리	0.10	2.39	0.12	1.98	0.02	116.39
시설 관리	0.23	5.21	0.33	5.45	0.11	146.61
자원 관리	0.04	0.93	0.07	1.13	0.03	170.50
단체 및 법인 관리	0.60	13.64	0.82	13.41	0.23	137.80
행사 참여	0.37	8.43	0.45	7.40	0.09	123.16
업무관련 역량 개발	0.21	4.86	0.32	5.29	0.11	152.81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58	13.36	0.75	12.18	0.16	127.86

<부표 1-3> 복지기획 및 정책 영역 직무량 분석: 3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6.56	100.00	9.98	100.00	3.43	152.26
상담	0.25	3.76	0.33	3.28	0.08	132.89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01	0.20	0.02	0.15	0.00	114.81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23	3.47	0.37	3.70	0.14	161.93
사업 기획 및 홍보	1.81	27.58	2.91	29.17	1.10	161.07
사업 관리	1.47	22.41	2.25	22.52	0.78	153.04
대상자 관리	0.06	0.97	0.08	0.76	0.01	119.96
시설 관리	0.29	4.41	0.44	4.40	0.15	152.15
자원 관리	0.16	2.46	0.21	2.14	0.05	132.36
단체 및 법인 관리	0.87	13.22	1.33	13.37	0.47	153.94
행사 참여	0.42	6.44	0.60	6.05	0.18	143.03
업무관련 역량 개발	0.44	6.66	0.75	7.48	0.31	170.99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55	8.42	0.70	6.98	0.14	126.16

<부표 1-4> 복지기획 및 정책 영역 직무량 분석: 4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5.10	100.00	8.02	100.00	2.92	157.22
상담	0.32	6.20	0.42	5.18	0.10	131.47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14	2.83	0.21	2.65	0.07	147.10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31	6.18	0.42	5.29	0.11	134.68
사업 기획 및 홍보	0.88	17.33	1.54	19.18	0.65	174.00
사업 관리	0.75	14.69	1.18	14.76	0.43	157.91
대상자 관리	0.09	1.69	0.13	1.59	0.04	148.30
시설 관리	0.57	11.23	0.98	12.21	0.41	170.96
자원 관리	0.08	1.57	0.14	1.69	0.06	169.57
단체 및 법인 관리	0.68	13.24	1.04	13.03	0.37	154.75
행사 참여	0.40	7.90	0.61	7.55	0.20	150.25
업무관련 역량 개발	0.29	5.72	0.50	6.25	0.21	171.77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58	11.44	0.85	10.63	0.27	146.08

<부표 1-5> 복지기획 및 정책 영역 직무량 분석: 5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4.50	100.00	6.49	100.00	1.99	144.31
상담	0.27	6.07	0.38	5.83	0.11	138.48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10	2.25	0.15	2.36	0.05	151.22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24	5.27	0.30	4.64	0.06	127.08
사업 기획 및 홍보	0.92	20.34	1.37	21.13	0.46	149.87
사업 관리	0.75	16.74	1.07	16.50	0.32	142.20
대상자 관리	0.10	2.30	0.16	2.46	0.06	154.57
시설 관리	0.39	8.68	0.58	9.00	0.19	149.62
자원 관리	0.05	1.04	0.07	1.06	0.02	147.19
단체 및 법인 관리	0.55	12.16	0.82	12.61	0.27	149.55
행사 참여	0.36	8.02	0.48	7.41	0.12	133.36
업무관련 역량 개발	0.31	6.92	0.44	6.76	0.13	140.87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46	10.19	0.67	10.25	0.21	145.10

<부표 1-6> 복지기획 및 정책 영역 직무량 분석: 6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3.87	100.00	5.61	100.00	1.74	144.98
상담	0.25	6.56	0.36	6.46	0.11	142.82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16	4.04	0.23	4.10	0.07	147.02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32	8.26	0.46	8.23	0.14	144.39
사업 기획 및 홍보	0.46	11.82	0.68	12.19	0.23	149.54
사업 관리	0.43	11.09	0.64	11.38	0.21	148.75
대상자 관리	0.23	5.88	0.36	6.39	0.13	157.55
시설 관리	0.33	8.43	0.49	8.77	0.17	150.83
자원 관리	0.09	2.22	0.15	2.60	0.06	169.54
단체 및 법인 관리	0.44	11.30	0.58	10.39	0.15	133.25
행사 참여	0.32	8.25	0.50	8.87	0.18	155.99
업무관련 역량 개발	0.21	5.35	0.31	5.49	0.10	148.79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65	16.80	0.85	15.13	0.20	130.60

<부표 1-7> 복지기획 및 정책 영역 직무량 분석: 7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3.90	100.00	6.19	100.00	2.28	158.44
상담	0.30	7.65	0.53	8.50	0.23	175.99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12	3.09	0.18	2.98	0.06	152.81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18	4.72	0.33	5.35	0.15	179.60
사업 기획 및 홍보	0.60	15.24	0.89	14.43	0.30	150.02
사업 관리	0.55	14.12	0.85	13.73	0.30	154.16
대상자 관리	0.19	4.82	0.23	3.77	0.05	124.08
시설 관리	0.28	7.04	0.49	7.84	0.21	176.37
자원 관리	0.10	2.68	0.24	3.86	0.13	227.76
단체 및 법인 관리	0.31	7.87	0.45	7.26	0.14	146.30
행사 참여	0.34	8.63	0.53	8.56	0.19	157.26
업무관련 역량 개발	0.24	6.12	0.43	7.02	0.20	181.79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70	18.02	1.03	16.69	0.33	146.67

2. 지자체 유형별 직무량 분석: 복지시설 영역

<부표 1-8> 복지시설 영역 직무량 분석: 1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5.00	100.00	8.59	100.00	3.59	171.83
상담	0.71	14.15	1.21	14.11	0.50	171.37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04	0.81	0.05	0.63	0.01	132.85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16	3.29	0.20	2.38	0.04	124.15
사업 기획 및 홍보	0.29	5.76	0.53	6.19	0.24	184.49
사업 관리	0.48	9.64	0.67	7.77	0.19	138.59
대상자 관리	0.24	4.75	0.49	5.66	0.25	204.63
시설 관리	1.70	33.92	2.99	34.86	1.30	176.56
자원 관리	0.05	0.95	0.14	1.64	0.09	297.24
단체 및 법인 관리	0.48	9.65	0.97	11.26	0.49	200.52
행사 참여	0.31	6.28	0.45	5.28	0.14	144.63
업무관련 역량 개발	0.16	3.15	0.29	3.42	0.14	186.56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38	7.65	0.58	6.80	0.20	152.78

<부표 1-9> 복지시설 영역 직무량 분석: 2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6.00	100.00	10.49	100.00	4.49	174.77
상담	0.72	11.94	0.95	9.09	0.24	132.94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51	8.47	0.67	6.41	0.16	132.28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28	4.58	0.62	5.90	0.34	225.01
사업 기획 및 홍보	0.46	7.71	0.72	6.91	0.26	156.62
사업 관리	0.70	11.70	1.31	12.45	0.60	185.97
대상자 관리	0.38	6.28	0.76	7.28	0.39	202.51
시설 관리	1.70	28.30	3.29	31.40	1.60	193.94
자원 관리	0.09	1.53	0.12	1.17	0.03	134.08
단체 및 법인 관리	0.27	4.48	0.87	8.29	0.60	323.32
행사 참여	0.24	3.96	0.30	2.89	0.07	127.38
업무관련 역량 개발	0.25	4.20	0.32	3.04	0.07	126.66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41	6.84	0.54	5.17	0.13	132.02

<부표 1-10> 복지시설 영역 직무량 분석: 3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4.67	100.00	6.81	100.00	2.14	145.93
상담	0.74	15.80	0.96	14.14	0.23	130.56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35	7.59	0.48	7.07	0.13	136.03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16	3.48	0.22	3.24	0.06	135.82
사업 기획 및 홍보	0.45	9.55	0.78	11.43	0.33	174.56
사업 관리	0.35	7.59	0.52	7.62	0.16	146.46
대상자 관리	0.15	3.13	0.18	2.64	0.03	123.17
시설 관리	1.08	23.13	1.63	23.87	0.55	150.64
자원 관리	0.11	2.32	0.17	2.54	0.06	159.90
단체 및 법인 관리	0.37	7.86	0.57	8.38	0.20	155.66
행사 참여	0.34	7.27	0.47	6.97	0.14	139.92
업무관련 역량 개발	0.22	4.70	0.34	4.99	0.12	155.18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35	7.59	0.48	7.11	0.13	136.65

<부표 1-11> 복지시설 영역 직무량 분석: 4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4.69	100.00	6.44	100.00	1.75	137.28
상담	0.59	12.56	0.75	11.61	0.16	126.96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15	3.25	0.16	2.55	0.01	107.67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19	4.13	0.24	3.76	0.05	124.99
사업 기획 및 홍보	0.28	5.93	0.34	5.22	0.06	120.85
사업 관리	0.47	10.07	0.61	9.40	0.13	128.21
대상자 관리	0.23	4.89	0.34	5.26	0.11	147.85
시설 관리	1.28	27.26	1.71	26.55	0.43	133.70
자원 관리	0.07	1.39	0.08	1.16	0.01	114.74
단체 및 법인 관리	0.43	9.11	0.69	10.73	0.26	161.62
행사 참여	0.25	5.31	0.34	5.29	0.09	136.67
업무관련 역량 개발	0.31	6.64	0.50	7.81	0.19	161.40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44	9.46	0.69	10.65	0.24	154.58

<부표 1-12> 복지시설 영역 직무량 분석: 5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3.58	100.00	4.78	100.00	1.19	133.27
상담	0.15	4.16	0.22	4.56	0.07	146.04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13	3.72	0.15	3.13	0.02	112.09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09	2.56	0.14	2.94	0.05	153.32
사업 기획 및 홍보	0.12	3.37	0.14	2.85	0.02	112.69
사업 관리	0.16	4.42	0.28	5.80	0.12	175.00
대상자 관리	0.10	2.74	0.22	4.59	0.12	222.86
시설 관리	1.75	48.95	2.18	45.55	0.42	124.00
자원 관리	0.03	0.74	0.05	1.04	0.02	186.19
단체 및 법인 관리	0.29	8.07	0.37	7.80	0.08	128.80
행사 참여	0.23	6.44	0.28	5.84	0.05	120.79
업무관련 역량 개발	0.13	3.70	0.28	5.95	0.15	214.46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40	11.12	0.47	9.94	0.08	119.22

<부표 1-13> 복지시설 영역 직무량 분석: 6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3.82	100.00	5.46	100.00	1.64	142.91
상담	0.62	16.14	0.95	17.34	0.33	153.49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16	4.14	0.18	3.36	0.03	116.01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30	7.90	0.44	8.08	0.14	146.01
사업 기획 및 홍보	0.17	4.40	0.26	4.67	0.09	151.64
사업 관리	0.27	7.12	0.34	6.27	0.07	125.82
대상자 관리	0.26	6.71	0.31	5.65	0.05	120.19
시설 관리	1.01	26.43	1.53	28.06	0.52	151.71
자원 관리	0.05	1.43	0.09	1.72	0.04	171.67
단체 및 법인 관리	0.47	12.36	0.66	12.04	0.19	139.26
행사 참여	0.12	3.21	0.14	2.57	0.02	114.43
업무관련 역량 개발	0.11	2.98	0.14	2.49	0.02	119.71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27	7.17	0.42	7.75	0.15	154.59

<부표 1-14> 복지시설 영역 직무량 분석: 7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4.33	100.00	6.24	100.00	1.91	144.10
상담	0.55	12.74	0.78	12.55	0.23	141.92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19	4.36	0.26	4.20	0.07	138.77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59	13.59	0.77	12.30	0.18	130.39
사업 기획 및 홍보	0.32	7.28	0.44	7.05	0.12	139.51
사업 관리	0.08	1.85	0.19	2.99	0.11	233.65
대상자 관리	0.21	4.82	0.29	4.59	0.08	137.11
시설 관리	0.94	21.74	1.48	23.63	0.53	156.61
자원 관리	0.04	0.97	0.13	2.15	0.09	318.04
단체 및 법인 관리	0.53	12.15	0.67	10.71	0.14	126.94
행사 참여	0.35	8.18	0.44	6.99	0.08	123.07
업무관련 역량 개발	0.14	3.28	0.26	4.09	0.11	179.58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39	9.03	0.55	8.76	0.16	139.82

3. 지자체 유형별 직무량 분석: 통합조사 영역

<부표 1-15> 통합조사 영역 직무량 분석: 1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17.08	100.00	32.77	100.00	15.69	191.85
상담	4.36	25.53	7.81	23.83	3.45	179.12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5.78	33.81	9.31	28.40	3.53	161.16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61	3.57	1.52	4.64	0.91	248.95
사업 기획 및 홍보	0.12	0.71	0.38	1.16	0.26	313.35
사업 관리	0.17	1.02	0.70	2.15	0.53	405.12
대상자 관리	3.92	22.93	7.41	22.60	3.49	189.09
시설 관리	0.00	0.00	0.52	1.60	0.52	
자원 관리	0.06	0.38	0.31	0.93	0.24	472.92
단체 및 법인 관리	0.00	0.00	0.52	1.60	0.52	
행사 참여	0.35	2.03	0.94	2.87	0.59	271.60
업무관련 역량 개발	0.79	4.62	1.73	5.27	0.94	218.77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92	5.40	1.62	4.94	0.70	175.56

<부표 1-16> 통합조사 영역 직무량 분석: 2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6.92	100.00	9.99	100.00	3.07	144.30
상담	2.51	36.22	3.57	35.71	1.06	142.28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2.09	30.22	2.97	29.68	0.87	141.73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25	3.64	0.50	5.00	0.25	198.35
사업 기획 및 홍보	0.05	0.74	0.07	0.71	0.02	137.67
사업 관리	0.07	0.98	0.11	1.05	0.04	155.30
대상자 관리	1.13	16.33	1.79	17.93	0.66	158.42
시설 관리	0.02	0.28	0.02	0.21	0.00	111.19
자원 관리	0.03	0.44	0.04	0.36	0.01	117.23
단체 및 법인 관리	0.00	0.00	0.00	0.00	0.00	
행사 참여	0.12	1.67	0.15	1.45	0.03	125.94
업무관련 역량 개발	0.30	4.32	0.36	3.61	0.06	120.82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36	5.16	0.43	4.26	0.07	119.32

<부표 1-17> 통합조사 영역 직무량 분석: 3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10.46	100.00	19.18	100.00	8.72	183.37
상담	3.23	30.88	6.36	33.15	3.13	196.83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4.75	45.44	8.45	44.05	3.70	177.76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32	3.01	0.48	2.48	0.16	150.92
사업 기획 및 홍보	0.12	1.19	0.19	0.99	0.07	152.41
사업 관리	0.18	1.75	0.27	1.40	0.09	146.45
대상자 관리	0.91	8.68	1.91	9.93	1.00	209.89
시설 관리	0.02	0.15	0.02	0.10	0.00	130.52
자원 관리	0.00	0.00	0.00	0.00	0.00	
단체 및 법인 관리	0.00	0.00	0.00	0.00	0.00	
행사 참여	0.20	1.96	0.31	1.64	0.11	153.48
업무관련 역량 개발	0.34	3.21	0.59	3.08	0.26	176.24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39	3.74	0.61	3.18	0.22	155.87

<부표 1-18> 통합조사 영역 직무량 분석: 4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9.24	100.00	15.81	100.00	6.56	171.01
상담	3.86	41.74	6.94	43.92	3.08	179.96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3.02	32.70	4.63	29.30	1.61	153.24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28	3.05	0.50	3.14	0.22	176.43
사업 기획 및 홍보	0.13	1.43	0.27	1.73	0.14	207.18
사업 관리	0.17	1.87	0.35	2.22	0.18	203.46
대상자 관리	0.70	7.62	1.31	8.31	0.61	186.47
시설 관리	0.01	0.08	0.07	0.43	0.06	942.67
자원 관리	0.02	0.24	0.05	0.31	0.03	221.81
단체 및 법인 관리	0.00	0.00	0.05	0.31	0.05	
행사 참여	0.20	2.20	0.31	1.95	0.11	152.05
업무관련 역량 개발	0.34	3.73	0.59	3.72	0.24	170.63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50	5.36	0.74	4.65	0.24	148.52

<부표 1-19> 통합조사 영역 직무량 분석: 5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8.60	100.00	14.80	100.00	6.20	172.08
상담	3.34	38.83	5.69	38.44	2.35	170.38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2.07	24.12	3.55	23.98	1.47	171.07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27	3.14	0.59	3.98	0.32	217.62
사업 기획 및 홍보	0.05	0.62	0.07	0.49	0.02	135.12
사업 관리	0.15	1.77	0.26	1.75	0.11	170.24
대상자 관리	1.46	16.93	2.72	18.35	1.26	186.48
시설 관리	0.02	0.21	0.02	0.13	0.00	106.35
자원 관리	0.02	0.21	0.02	0.13	0.00	106.35
단체 및 법인 관리	0.01	0.08	0.01	0.05	0.00	106.35
행사 참여	0.26	3.04	0.37	2.53	0.11	143.33
업무관련 역량 개발	0.41	4.82	0.74	5.02	0.33	179.09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54	6.23	0.76	5.16	0.23	142.50

<부표 1-20> 통합조사 영역 직무량 분석: 6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5.60	100.00	8.88	100.00	3.28	158.65
상담	1.89	33.78	3.12	35.12	1.23	164.96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1.39	24.76	2.08	23.44	0.70	150.22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21	3.72	0.36	4.10	0.16	174.85
사업 기획 및 홍보	0.08	1.36	0.11	1.29	0.04	150.63
사업 관리	0.19	3.36	0.28	3.11	0.09	146.81
대상자 관리	1.19	21.18	1.87	21.00	0.68	157.33
시설 관리	0.02	0.33	0.06	0.69	0.04	332.61
자원 관리	0.01	0.11	0.02	0.24	0.01	332.35
단체 및 법인 관리	0.01	0.17	0.01	0.13	0.00	120.85
행사 참여	0.13	2.41	0.20	2.28	0.07	150.02
업무관련 역량 개발	0.23	4.04	0.41	4.62	0.18	181.43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27	4.78	0.35	3.97	0.09	131.80

<부표 1-21> 통합조사 영역 직무량 분석: 7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4.04	100.00	5.60	100.00	1.57	138.76
상담	1.27	31.53	1.71	30.48	0.43	134.11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1.05	25.92	1.41	25.19	0.36	134.85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28	6.87	0.48	8.51	0.20	171.90
사업 기획 및 홍보	0.06	1.54	0.11	1.91	0.04	171.65
사업 관리	0.09	2.12	0.13	2.33	0.04	152.05
대상자 관리	0.81	20.14	1.09	19.52	0.28	134.44
시설 관리	0.00	0.05	0.01	0.26	0.01	749.30
자원 관리	0.01	0.19	0.02	0.31	0.01	226.00
단체 및 법인 관리	0.00	0.05	0.01	0.19	0.01	555.93
행사 참여	0.13	3.11	0.17	2.98	0.04	132.88
업무관련 역량 개발	0.15	3.82	0.25	4.39	0.09	159.41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19	4.65	0.22	3.94	0.03	117.76

4. 지자체 유형별 직무량 분석: 통합관리 영역

<부표 1-22> 통합관리 영역 직무량 분석: 1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16.08	100.00	27.23	100.00	11.15	169.33
상담	3.71	23.05	5.82	21.38	2.11	157.02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2.58	16.05	4.22	15.49	1.64	163.41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74	4.61	1.72	6.30	0.97	231.27
사업 기획 및 홍보	0.10	0.61	0.11	0.42	0.02	116.87
사업 관리	0.22	1.36	0.35	1.28	0.13	159.19
대상자 관리	6.67	41.50	12.04	44.20	5.36	180.38
시설 관리	0.00	0.00	0.08	0.31	0.08	
자원 관리	0.06	0.34	0.09	0.34	0.04	167.14
단체 및 법인 관리	0.00	0.00	0.00	0.00	0.00	
행사 참여	0.41	2.57	0.49	1.80	0.08	118.99
업무관련 역량 개발	0.67	4.14	1.04	3.81	0.37	156.13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93	5.78	1.27	4.67	0.34	136.80

<부표 1-23> 통합관리 영역 직무량 분석: 2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6.53	100.00	9.05	100.00	2.52	138.58
상담	1.85	28.30	2.38	26.32	0.53	128.86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1.06	16.30	1.35	14.95	0.29	127.11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52	7.96	0.77	8.52	0.25	148.38
사업 기획 및 홍보	0.06	0.96	0.11	1.23	0.05	176.60
사업 관리	0.14	2.07	0.19	2.06	0.05	137.79
대상자 관리	2.20	33.62	3.38	37.30	1.18	153.73
시설 관리	0.00	0.00	0.00	0.00	0.00	
자원 관리	0.03	0.45	0.04	0.39	0.01	120.37
단체 및 법인 관리	0.00	0.00	0.00	0.00	0.00	
행사 참여	0.14	2.10	0.16	1.78	0.02	117.03
업무관련 역량 개발	0.33	4.99	0.43	4.76	0.10	132.12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21	3.25	0.25	2.71	0.03	115.50

<부표 1-24> 통합관리 영역 직무량 분석: 3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10.23	100.00	18.02	100.00	7.79	176.22
상담	2.37	23.20	4.67	25.90	2.29	196.70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1.30	12.70	2.35	13.05	1.05	181.03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1.02	9.98	1.54	8.54	0.52	150.75
사업 기획 및 홍보	0.14	1.35	0.19	1.08	0.06	140.87
사업 관리	0.23	2.21	0.38	2.13	0.16	169.94
대상자 관리	3.90	38.13	6.78	37.60	2.88	173.76
시설 관리	0.04	0.37	0.05	0.26	0.01	124.32
자원 관리	0.02	0.20	0.02	0.13	0.00	118.68
단체 및 법인 관리	0.00	0.00	0.00	0.00	0.00	
행사 참여	0.27	2.67	0.36	2.01	0.09	133.08
업무관련 역량 개발	0.41	4.01	0.85	4.73	0.44	207.74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53	5.17	0.82	4.56	0.29	155.33

<부표 1-25> 통합관리 영역 직무량 분석: 4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11.83	100.00	21.85	100.00	10.02	184.66
상담	3.65	30.86	7.13	32.63	3.48	195.27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98	8.27	1.88	8.61	0.90	192.28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1.50	12.67	2.90	13.29	1.40	193.64
사업 기획 및 홍보	0.10	0.83	0.12	0.53	0.02	117.80
사업 관리	0.28	2.34	0.39	1.79	0.11	141.44
대상자 관리	4.14	35.02	7.32	33.49	3.17	176.60
시설 관리	0.05	0.43	0.06	0.25	0.01	110.69
자원 관리	0.02	0.14	0.05	0.21	0.03	273.27
단체 및 법인 관리	0.00	0.00	0.00	0.00	0.00	
행사 참여	0.18	1.50	0.25	1.12	0.07	138.44
업무관련 역량 개발	0.40	3.40	0.85	3.89	0.45	211.46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54	4.54	0.91	4.17	0.37	169.51

<부표 1-26> 통합관리 영역 직무량 분석: 5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9.45	100.00	14.24	100.00	4.78	150.61
상담	2.91	30.77	4.46	31.31	1.55	153.23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1.07	11.30	1.56	10.94	0.49	145.88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67	7.10	1.04	7.27	0.36	154.31
사업 기획 및 홍보	0.03	0.29	0.03	0.23	0.01	120.85
사업 관리	0.17	1.78	0.34	2.40	0.17	203.15
대상자 관리	3.28	34.66	4.84	34.03	1.57	147.86
시설 관리	0.02	0.25	0.03	0.19	0.00	115.02
자원 관리	0.02	0.24	0.04	0.29	0.02	180.07
단체 및 법인 관리	0.00	0.00	0.00	0.00	0.00	
행사 참여	0.22	2.37	0.32	2.24	0.09	141.94
업무관련 역량 개발	0.51	5.37	0.77	5.40	0.26	151.55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55	5.87	0.81	5.70	0.26	146.26

<부표 1-27> 통합관리 영역 직무량 분석: 6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5.67	100.00	9.30	100.00	3.64	164.17
상담	1.90	33.55	3.19	34.34	1.29	168.06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1.00	17.62	1.64	17.60	0.64	164.01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26	4.51	0.51	5.47	0.25	199.13
사업 기획 및 홍보	0.09	1.66	0.16	1.69	0.06	167.15
사업 관리	0.18	3.14	0.26	2.81	0.08	146.54
대상자 관리	1.49	26.23	2.41	25.85	0.92	161.83
시설 관리	0.05	0.88	0.15	1.65	0.10	306.52
자원 관리	0.01	0.13	0.01	0.10	0.00	120.85
단체 및 법인 관리	0.01	0.20	0.01	0.15	0.00	120.85
행사 참여	0.13	2.24	0.15	1.66	0.03	121.83
업무관련 역량 개발	0.21	3.70	0.35	3.79	0.14	167.90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35	6.12	0.45	4.88	0.11	130.90

<부표 1-28> 통합관리 영역 직무량 분석: 7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4.20	100.00	5.59	100.00	1.39	132.99
상담	1.43	34.07	1.94	34.66	0.51	135.31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61	14.56	0.77	13.87	0.16	126.69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28	6.62	0.38	6.87	0.11	138.11
사업 기획 및 홍보	0.04	1.07	0.07	1.20	0.02	149.38
사업 관리	0.15	3.46	0.19	3.41	0.05	131.00
대상자 관리	1.16	27.62	1.48	26.49	0.32	127.56
시설 관리	0.01	0.19	0.03	0.61	0.03	424.44
자원 관리	0.00	0.05	0.01	0.27	0.01	749.30
단체 및 법인 관리	0.00	0.05	0.02	0.34	0.02	942.67
행사 참여	0.09	2.19	0.13	2.31	0.04	140.00
업무관련 역량 개발	0.18	4.25	0.26	4.71	0.08	147.44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25	5.89	0.29	5.27	0.05	119.07

5. 지자체 유형별 직무량 분석: 기초생활보장 영역

<부표 1-29> 기초생활보장 영역 직무량 분석: 1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9.10	100.00	16.05	100.00	6.95	176.35
상담	1.94	21.35	3.44	21.43	1.50	177.06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1.17	12.81	2.13	13.29	0.97	182.94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2.05	22.53	2.77	17.24	0.72	134.99
사업 기획 및 홍보	0.60	6.63	0.84	5.22	0.23	138.70
사업 관리	0.96	10.57	1.65	10.29	0.69	171.75
대상자 관리	0.93	10.18	2.59	16.14	1.66	279.74
시설 관리	0.11	1.24	0.43	2.67	0.32	381.09
자원 관리	0.06	0.61	0.09	0.57	0.04	165.34
단체 및 법인 관리	0.07	0.75	0.14	0.86	0.07	203.36
행사 참여	0.19	2.08	0.31	1.93	0.12	163.74
업무관련 역량 개발	0.42	4.60	0.79	4.93	0.37	188.86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61	6.66	0.87	5.41	0.26	143.36

<부표 1-30> 기초생활보장 영역 직무량 분석: 2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4.67	100.00	6.48	100.00	1.82	138.91
상담	0.96	20.66	1.18	18.15	0.21	122.09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30	6.40	0.45	7.01	0.16	152.04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1.11	23.87	1.39	21.51	0.28	125.17
사업 기획 및 홍보	0.24	5.12	0.32	4.95	0.08	134.43
사업 관리	0.47	10.12	0.58	9.00	0.11	123.44
대상자 관리	0.57	12.21	0.78	11.97	0.21	136.20
시설 관리	0.14	3.08	0.33	5.11	0.19	230.23
자원 관리	0.23	4.90	0.37	5.63	0.14	159.68
단체 및 법인 관리	0.06	1.32	0.07	1.13	0.01	118.76
행사 참여	0.09	1.88	0.13	1.96	0.04	144.79
업무관련 역량 개발	0.15	3.20	0.27	4.17	0.12	180.83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34	7.24	0.61	9.41	0.27	180.62

<부표 1-31> 기초생활보장 영역 직무량 분석: 3유형 지자체

(단위: 명, %)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7.77	100.00	14.43	100.00	6.66	185.71
상담	1.70	21.89	2.70	18.70	1.00	158.64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71	9.12	2.16	14.96	1.45	304.66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1.91	24.56	3.16	21.90	1.25	165.59
사업 기획 및 홍보	0.69	8.94	1.18	8.20	0.49	170.36
사업 관리	1.01	13.02	1.83	12.70	0.82	181.17
대상자 관리	0.55	7.03	1.01	7.02	0.47	185.33
시설 관리	0.07	0.84	0.14	0.95	0.07	211.06
자원 관리	0.04	0.47	0.06	0.44	0.03	171.27
단체 및 법인 관리	0.05	0.59	0.06	0.39	0.01	122.01
행사 참여	0.21	2.70	0.41	2.86	0.20	197.03
업무관련 역량 개발	0.29	3.74	0.70	4.88	0.41	242.12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55	7.09	1.01	7.00	0.46	183.28

<부표 1-32> 기초생활보장 영역 직무량 분석: 4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5.92	100.00	9.45	100.00	3.54	159.79
상담	1.22	20.63	1.93	20.44	0.71	158.28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79	13.41	1.20	12.71	0.41	151.43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1.67	28.26	2.57	27.13	0.89	153.42
사업 기획 및 홍보	0.28	4.77	0.47	4.97	0.19	166.27
사업 관리	0.35	5.89	0.63	6.67	0.28	180.85
대상자 관리	0.59	10.04	0.98	10.32	0.38	164.25
시설 관리	0.10	1.61	0.12	1.31	0.03	130.14
자원 관리	0.06	0.94	0.12	1.25	0.06	211.76
단체 및 법인 관리	0.04	0.67	0.08	0.80	0.04	189.33
행사 참여	0.13	2.14	0.20	2.11	0.07	157.96
업무관련 역량 개발	0.25	4.15	0.47	4.99	0.23	192.05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44	7.48	0.69	7.31	0.25	156.13

<부표 1-33> 기초생활보장 영역 직무량 분석: 5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4.86	100.00	7.14	100.00	2.29	147.07
상담	1.15	23.66	1.58	22.15	0.43	137.73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37	7.55	0.57	7.93	0.20	154.47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1.21	24.86	1.72	24.11	0.51	142.61
사업 기획 및 홍보	0.21	4.31	0.33	4.57	0.12	155.64
사업 관리	0.44	9.05	0.64	8.96	0.20	145.61
대상자 관리	0.55	11.32	0.92	12.95	0.37	168.16
시설 관리	0.07	1.36	0.11	1.53	0.04	166.13
자원 관리	0.11	2.33	0.17	2.37	0.06	149.29
단체 및 법인 관리	0.06	1.15	0.09	1.28	0.04	163.75
행사 참여	0.15	3.16	0.20	2.82	0.05	131.21
업무관련 역량 개발	0.19	3.82	0.29	4.11	0.11	158.09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36	7.43	0.52	7.24	0.16	143.17

<부표 1-34> 기초생활보장 영역 직무량 분석: 6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4.52	100.00	6.63	100.00	2.11	146.72
상담	0.82	18.13	1.36	20.53	0.54	166.17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41	8.99	0.63	9.55	0.23	155.93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94	20.90	1.36	20.53	0.42	144.14
사업 기획 및 홍보	0.29	6.35	0.40	6.04	0.11	139.45
사업 관리	0.48	10.53	0.68	10.26	0.20	143.03
대상자 관리	0.59	13.05	0.83	12.45	0.24	139.97
시설 관리	0.10	2.13	0.19	2.86	0.09	197.20
자원 관리	0.11	2.50	0.14	2.10	0.03	123.60
단체 및 법인 관리	0.11	2.49	0.16	2.39	0.05	141.02
행사 참여	0.16	3.47	0.18	2.72	0.02	115.22
업무관련 역량 개발	0.22	4.95	0.31	4.67	0.09	138.21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29	6.51	0.39	5.88	0.10	132.52

<부표 1-35> 기초생활보장 영역 직무량 분석: 7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3.41	100.00	4.27	100.00	0.86	125.12
상담	0.62	18.15	0.84	19.58	0.22	134.99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50	14.62	0.59	13.73	0.09	117.55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64	18.68	0.77	17.98	0.13	120.47
사업 기획 및 홍보	0.16	4.70	0.21	4.90	0.05	130.44
사업 관리	0.23	6.79	0.29	6.73	0.06	124.05
대상자 관리	0.72	21.03	0.85	20.03	0.14	119.15
시설 관리	0.05	1.53	0.07	1.60	0.02	130.28
자원 관리	0.03	0.81	0.05	1.23	0.03	191.15
단체 및 법인 관리	0.03	0.73	0.03	0.77	0.01	131.34
행사 참여	0.10	2.94	0.13	3.01	0.03	128.08
업무관련 역량 개발	0.15	4.35	0.19	4.49	0.04	128.99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19	5.68	0.25	5.95	0.06	131.19

6. 지자체 유형별 직무량 분석: 자활 영역

<부표 1-36> 자활 영역 직무량 분석: 1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5.44	100.00	6.92	100.00	1.48	127.12
상담	0.94	17.28	1.13	16.39	0.19	120.60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19	3.47	0.25	3.68	0.07	134.98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70	12.92	0.83	12.01	0.13	118.21
사업 기획 및 홍보	0.23	4.29	0.29	4.22	0.06	125.10
사업 관리	0.79	14.59	0.94	13.62	0.15	118.65
대상자 관리	0.61	11.17	0.81	11.71	0.20	133.33
시설 관리	0.51	9.29	0.62	8.90	0.11	121.89
자원 관리	0.01	0.24	0.02	0.32	0.01	166.78
단체 및 법인 관리	0.47	8.57	0.64	9.18	0.17	136.12
행사 참여	0.15	2.82	0.19	2.82	0.04	127.14
업무관련 역량 개발	0.28	5.14	0.41	5.91	0.13	146.16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56	10.22	0.78	11.23	0.22	139.59

<부표 1-37> 자활 영역 직무량 분석: 2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1.96	100.00	2.46	100.00	0.51	125.85
상담	0.50	25.32	0.60	24.44	0.11	121.48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11	5.85	0.16	6.44	0.04	138.43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23	11.91	0.31	12.48	0.07	131.77
사업 기획 및 홍보	0.09	4.60	0.11	4.47	0.02	122.51
사업 관리	0.25	12.87	0.30	11.99	0.04	117.18
대상자 관리	0.16	8.38	0.23	9.29	0.06	139.52
시설 관리	0.14	7.02	0.16	6.57	0.02	117.70
자원 관리	0.06	3.26	0.07	2.99	0.01	115.61
단체 및 법인 관리	0.11	5.53	0.13	5.33	0.02	121.32
행사 참여	0.04	1.96	0.06	2.30	0.02	147.71
업무관련 역량 개발	0.09	4.70	0.11	4.66	0.02	124.77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17	8.60	0.22	9.04	0.05	132.41

<부표 1-38> 자활 영역 직무량 분석: 3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4.33	100.00	6.72	100.00	2.39	155.12
상담	1.33	30.60	1.87	27.78	0.54	140.87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15	3.52	0.31	4.66	0.16	205.47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61	14.13	0.94	13.99	0.33	153.57
사업 기획 및 홍보	0.22	5.17	0.33	4.91	0.11	147.20
사업 관리	0.38	8.75	0.54	8.00	0.16	141.83
대상자 관리	0.26	5.96	0.47	7.01	0.21	182.53
시설 관리	0.54	12.52	0.87	12.96	0.33	160.53
자원 관리	0.01	0.24	0.05	0.81	0.04	520.16
단체 및 법인 관리	0.27	6.29	0.39	5.82	0.12	143.55
행사 참여	0.17	3.93	0.24	3.59	0.07	141.41
업무관련 역량 개발	0.14	3.30	0.28	4.14	0.14	194.49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24	5.59	0.43	6.34	0.18	175.92

<부표 1-39> 자활 영역 직무량 분석: 4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3.36	100.00	4.82	100.00	1.46	143.40
상담	0.55	16.50	0.83	17.17	0.27	149.20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19	5.75	0.28	5.85	0.09	145.94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48	14.40	0.60	12.41	0.11	123.58
사업 기획 및 홍보	0.15	4.58	0.24	5.02	0.09	157.11
사업 관리	0.35	10.29	0.50	10.35	0.15	144.16
대상자 관리	0.56	16.78	0.75	15.64	0.19	133.67
시설 관리	0.37	10.95	0.52	10.83	0.15	141.88
자원 관리	0.06	1.64	0.11	2.36	0.06	206.35
단체 및 법인 관리	0.26	7.88	0.42	8.68	0.15	158.04
행사 참여	0.07	2.16	0.12	2.49	0.05	165.37
업무관련 역량 개발	0.12	3.47	0.19	3.85	0.07	159.17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19	5.60	0.26	5.35	0.07	136.88

<부표 1-40> 자활 영역 직무량 분석: 5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2.44	100.00	3.52	100.00	1.07	143.80
상담	0.30	12.18	0.40	11.45	0.10	135.12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16	6.59	0.25	7.20	0.09	157.08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26	10.47	0.35	9.92	0.09	136.31
사업 기획 및 홍보	0.16	6.38	0.23	6.40	0.07	144.36
사업 관리	0.38	15.56	0.55	15.65	0.17	144.65
대상자 관리	0.24	9.98	0.37	10.63	0.13	153.15
시설 관리	0.34	14.09	0.47	13.47	0.13	137.45
자원 관리	0.05	1.94	0.07	2.01	0.02	148.71
단체 및 법인 관리	0.18	7.44	0.26	7.53	0.08	145.53
행사 참여	0.09	3.64	0.12	3.40	0.03	134.54
업무관련 역량 개발	0.10	3.95	0.17	4.72	0.07	171.59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19	7.77	0.27	7.62	0.08	140.88

<부표 1-41> 자활 영역 직무량 분석: 6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2.08	100.00	2.74	100.00	0.66	131.51
상담	0.37	17.96	0.45	16.46	0.08	120.56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11	5.50	0.19	7.01	0.08	167.74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20	9.46	0.24	8.76	0.04	121.77
사업 기획 및 홍보	0.19	9.06	0.26	9.44	0.07	137.10
사업 관리	0.23	10.94	0.32	11.63	0.09	139.75
대상자 관리	0.27	12.94	0.36	13.07	0.09	132.87
시설 관리	0.25	12.06	0.31	11.16	0.05	121.65
자원 관리	0.05	2.16	0.06	2.26	0.02	137.39
단체 및 법인 관리	0.16	7.48	0.21	7.81	0.06	137.23
행사 참여	0.05	2.50	0.07	2.59	0.02	136.17
업무관련 역량 개발	0.08	3.88	0.11	3.90	0.03	132.13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13	6.06	0.16	5.92	0.04	128.38

<부표 1-42> 자활 영역 직무량 분석: 7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1.76	100.00	2.35	100.00	0.59	133.63
상담	0.23	13.27	0.32	13.67	0.09	137.65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10	5.46	0.12	5.18	0.03	126.86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17	9.59	0.20	8.52	0.03	118.68
사업 기획 및 홍보	0.09	4.86	0.12	5.03	0.03	138.12
사업 관리	0.29	16.22	0.34	14.59	0.06	120.23
대상자 관리	0.30	16.82	0.45	19.03	0.15	151.14
시설 관리	0.14	7.97	0.20	8.51	0.06	142.65
자원 관리	0.03	1.66	0.04	1.89	0.02	151.82
단체 및 법인 관리	0.16	9.11	0.21	9.02	0.05	132.28
행사 참여	0.06	3.16	0.07	2.94	0.01	124.34
업무관련 역량 개발	0.07	3.84	0.08	3.59	0.02	125.10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14	8.03	0.19	8.03	0.05	133.68

7. 지자체 유형별 직무량 분석: 희망복지지원 영역

<부표 1-43> 희망복지지원 영역 직무량 분석: 1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7.36	100.00	12.39	100.00	5.03	168.24
상담	1.58	21.42	3.12	25.19	1.54	197.85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61	8.27	1.04	8.41	0.43	171.12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56	7.57	0.77	6.20	0.21	137.90
사업 기획 및 홍보	0.94	12.80	1.32	10.66	0.38	140.08
사업 관리	0.75	10.14	1.17	9.44	0.42	156.60
대상자 관리	0.52	7.01	1.19	9.58	0.67	229.91
시설 관리	0.12	1.60	0.15	1.25	0.04	130.55
자원 관리	0.79	10.67	1.41	11.38	0.62	179.33
단체 및 법인 관리	0.21	2.83	0.28	2.23	0.07	132.97
행사 참여	0.28	3.83	0.41	3.27	0.12	143.67
업무관련 역량 개발	0.41	5.54	0.67	5.44	0.27	165.26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61	8.31	0.86	6.94	0.25	140.60

<부표 1-44> 희망복지지원 영역 직무량 분석: 2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3.62	100.00	5.46	100.00	1.85	151.05
상담	0.62	17.27	0.96	17.66	0.34	154.46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18	5.00	0.27	5.03	0.09	151.93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19	5.36	0.23	4.14	0.03	116.53
사업 기획 및 홍보	0.41	11.28	0.68	12.42	0.27	166.34
사업 관리	0.49	13.55	0.79	14.52	0.30	161.87
대상자 관리	0.24	6.69	0.42	7.70	0.18	173.80
시설 관리	0.01	0.15	0.02	0.38	0.02	380.66
자원 관리	0.34	9.51	0.49	9.01	0.15	143.11
단체 및 법인 관리	0.35	9.74	0.50	9.07	0.14	140.58
행사 참여	0.19	5.23	0.23	4.20	0.04	121.34
업무관련 역량 개발	0.24	6.67	0.37	6.70	0.12	151.77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35	9.54	0.50	9.17	0.16	145.23

<부표 1-45> 희망복지지원 영역 직무량 분석: 3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5.09	100.00	9.25	100.00	4.16	181.78
상담	1.47	28.84	2.18	23.52	0.71	148.25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29	5.61	0.53	5.77	0.25	187.07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24	4.79	0.38	4.13	0.14	156.94
사업 기획 및 홍보	0.73	14.36	1.68	18.17	0.95	230.02
사업 관리	0.69	13.59	1.46	15.79	0.77	211.25
대상자 관리	0.10	1.89	0.16	1.78	0.07	171.09
시설 관리	0.11	2.14	0.14	1.48	0.03	125.78
자원 관리	0.38	7.46	0.85	9.21	0.47	224.32
단체 및 법인 관리	0.21	4.14	0.27	2.89	0.06	126.66
행사 참여	0.30	5.96	0.44	4.78	0.14	145.55
업무관련 역량 개발	0.28	5.59	0.74	8.03	0.46	261.24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29	5.62	0.41	4.45	0.13	143.72

<부표 1-46> 희망복지지원 영역 직무량 분석: 4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4.79	100.00	10.84	100.00	6.05	226.19
상담	1.26	26.37	2.87	26.46	1.61	227.00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30	6.17	0.59	5.43	0.29	199.16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19	4.04	0.51	4.71	0.32	263.47
사업 기획 및 홍보	0.61	12.77	1.07	9.87	0.46	174.91
사업 관리	0.49	10.21	1.37	12.63	0.88	279.78
대상자 관리	0.33	6.91	0.97	8.96	0.64	293.40
시설 관리	0.07	1.36	0.10	0.92	0.03	152.67
자원 관리	0.49	10.13	1.23	11.36	0.75	253.74
단체 및 법인 관리	0.08	1.62	0.12	1.08	0.04	151.20
행사 참여	0.33	6.93	0.69	6.38	0.36	208.23
업무관련 역량 개발	0.29	6.08	0.55	5.06	0.26	188.52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36	7.43	0.77	7.14	0.42	217.27

<부표 1-47> 희망복지지원 영역 직무량 분석: 5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4.22	100.00	6.27	100.00	2.05	148.48
상담	1.09	25.71	1.51	24.03	0.42	138.75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27	6.29	0.59	9.43	0.33	222.68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21	5.00	0.32	5.17	0.11	153.40
사업 기획 및 홍보	0.36	8.49	0.55	8.85	0.20	154.88
사업 관리	0.40	9.56	0.61	9.75	0.21	151.37
대상자 관리	0.25	5.82	0.34	5.47	0.10	139.63
시설 관리	0.13	3.02	0.19	3.07	0.06	150.70
자원 관리	0.49	11.72	0.75	11.97	0.26	151.70
단체 및 법인 관리	0.28	6.71	0.37	5.97	0.09	132.07
행사 참여	0.19	4.57	0.24	3.77	0.04	122.38
업무관련 역량 개발	0.25	6.00	0.34	5.50	0.09	136.13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30	7.11	0.44	7.03	0.14	146.66

<부표 1-48> 희망복지지원 영역 직무량 분석: 6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3.56	100.00	5.49	100.00	1.93	154.08
상담	0.89	24.87	1.31	23.81	0.42	147.55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27	7.62	0.41	7.49	0.14	151.44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25	6.97	0.30	5.39	0.05	119.19
사업 기획 및 홍보	0.31	8.71	0.52	9.54	0.21	168.81
사업 관리	0.36	10.17	0.52	9.57	0.16	145.00
대상자 관리	0.30	8.44	0.47	8.49	0.17	154.94
시설 관리	0.08	2.15	0.10	1.87	0.03	134.33
자원 관리	0.30	8.45	0.60	11.03	0.30	201.06
단체 및 법인 관리	0.24	6.64	0.33	5.94	0.09	137.80
행사 참여	0.18	4.98	0.28	5.15	0.11	159.54
업무관련 역량 개발	0.16	4.46	0.29	5.24	0.13	180.88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23	6.56	0.36	6.49	0.12	152.47

<부표 1-49> 희망복지지원 영역 직무량 분석: 7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3.28	100.00	4.56	100.00	1.28	139.01
상담	0.72	21.88	1.02	22.29	0.30	141.63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24	7.39	0.35	7.70	0.11	144.89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20	6.02	0.25	5.58	0.06	128.81
사업 기획 및 홍보	0.24	7.24	0.30	6.57	0.06	126.13
사업 관리	0.35	10.77	0.43	9.48	0.08	122.43
대상자 관리	0.31	9.48	0.45	9.98	0.14	146.39
시설 관리	0.08	2.52	0.10	2.14	0.01	117.98
자원 관리	0.36	11.06	0.53	11.54	0.16	144.99
단체 및 법인 관리	0.20	6.06	0.26	5.65	0.06	129.51
행사 참여	0.17	5.11	0.25	5.46	0.08	148.52
업무관련 역량 개발	0.14	4.28	0.21	4.69	0.07	152.30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27	8.18	0.41	8.91	0.14	151.37

8. 지자체 유형별 직무량 분석: 노인 영역

<부표 1-50> 노인 영역 직무량 분석: 1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11.00	100.00	17.13	100.00	6.13	155.77
상담	1.65	14.99	2.57	14.98	0.92	155.64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32	2.89	0.52	3.02	0.20	162.86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1.38	12.55	1.90	11.11	0.52	137.99
사업 기획 및 홍보	0.63	5.72	0.96	5.58	0.33	152.04
사업 관리	0.95	8.66	1.39	8.14	0.44	146.37
대상자 관리	0.75	6.81	1.28	7.45	0.53	170.43
시설 관리	1.82	16.54	3.38	19.73	1.56	185.90
자원 관리	0.11	1.04	0.15	0.85	0.03	127.48
단체 및 법인 관리	1.08	9.85	1.73	10.10	0.65	159.63
행사 참여	0.54	4.93	0.68	3.99	0.14	126.18
업무관련 역량 개발	0.41	3.76	0.63	3.70	0.22	153.31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1.35	12.25	1.94	11.33	0.59	144.02

<부표 1-51> 노인 영역 직무량 분석: 2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5.36	100.00	10.79	100.00	5.43	201.20
상담	0.76	14.25	1.47	13.58	0.70	191.73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23	4.22	0.47	4.38	0.25	208.84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71	13.15	1.30	12.00	0.59	183.58
사업 기획 및 홍보	0.26	4.83	0.50	4.67	0.25	194.67
사업 관리	0.43	8.02	0.98	9.06	0.55	227.40
대상자 관리	0.47	8.78	1.06	9.80	0.59	224.66
시설 관리	0.93	17.32	1.89	17.48	0.96	203.10
자원 관리	0.06	1.07	0.12	1.14	0.07	214.48
단체 및 법인 관리	0.61	11.31	1.33	12.35	0.73	219.86
행사 참여	0.29	5.47	0.49	4.51	0.19	165.79
업무관련 역량 개발	0.17	3.20	0.37	3.46	0.20	217.22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45	8.37	0.82	7.55	0.37	181.48

<부표 1-52> 노인 영역 직무량 분석: 3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9.36	100.00	14.47	100.00	5.11	154.61
상담	1.32	14.06	1.85	12.78	0.53	140.55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68	7.28	0.89	6.14	0.21	130.22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1.01	10.83	1.24	8.60	0.23	122.78
사업 기획 및 홍보	0.67	7.12	1.08	7.47	0.41	162.11
사업 관리	1.28	13.67	1.94	13.38	0.66	151.34
대상자 관리	0.58	6.18	1.07	7.41	0.49	185.33
시설 관리	1.63	17.45	2.43	16.79	0.80	148.76
자원 관리	0.17	1.85	0.40	2.76	0.23	231.38
단체 및 법인 관리	0.53	5.64	0.99	6.84	0.46	187.56
행사 참여	0.61	6.52	1.12	7.72	0.51	183.10
업무관련 역량 개발	0.40	4.29	0.70	4.83	0.30	174.12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48	5.11	0.76	5.28	0.29	159.77

<부표 1-53> 노인 영역 직무량 분석: 4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6.44	100.00	13.12	100.00	6.68	203.64
상담	0.97	15.12	1.82	13.90	0.85	187.23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28	4.41	0.60	4.56	0.31	210.81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57	8.78	1.11	8.43	0.54	195.60
사업 기획 및 홍보	0.47	7.34	0.96	7.32	0.49	203.06
사업 관리	0.79	12.19	1.70	12.98	0.92	216.73
대상자 관리	0.57	8.85	1.27	9.70	0.70	223.16
시설 관리	0.97	15.08	2.20	16.77	1.23	226.38
자원 관리	0.18	2.72	0.33	2.51	0.15	187.81
단체 및 법인 관리	0.45	7.02	0.88	6.69	0.43	194.18
행사 참여	0.47	7.35	0.78	5.93	0.30	164.39
업무관련 역량 개발	0.23	3.58	0.54	4.12	0.31	234.22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49	7.56	0.93	7.09	0.44	190.97

<부표 1-54> 노인 영역 직무량 분석: 5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6.61	100.00	12.88	100.00	6.28	194.98
상담	0.99	15.02	1.77	13.77	0.78	178.83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27	4.01	0.56	4.35	0.29	211.18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72	10.84	1.10	8.56	0.39	153.95
사업 기획 및 홍보	0.43	6.53	2.14	16.60	1.71	496.00
사업 관리	0.59	8.86	1.11	8.63	0.53	189.91
대상자 관리	0.69	10.41	1.23	9.54	0.54	178.70
시설 관리	1.00	15.16	1.79	13.87	0.78	178.32
자원 관리	0.14	2.19	0.21	1.67	0.07	148.25
단체 및 법인 관리	0.61	9.20	1.00	7.75	0.39	164.35
행사 참여	0.41	6.20	0.64	4.99	0.23	157.05
업무관련 역량 개발	0.27	4.14	0.50	3.91	0.23	184.17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49	7.44	0.82	6.36	0.33	166.69

<부표 1-55> 노인 영역 직무량 분석: 6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4.79	100.00	7.53	100.00	2.74	157.24
상담	0.67	13.96	1.04	13.82	0.37	155.68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16	3.43	0.21	2.82	0.05	129.07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38	7.90	0.52	6.93	0.14	137.95
사업 기획 및 홍보	0.31	6.46	0.59	7.79	0.28	189.57
사업 관리	0.68	14.17	1.00	13.22	0.32	146.68
대상자 관리	0.35	7.34	0.57	7.58	0.22	162.31
시설 관리	0.93	19.43	1.56	20.75	0.63	167.92
자원 관리	0.13	2.64	0.16	2.10	0.03	125.08
단체 및 법인 관리	0.45	9.41	0.77	10.19	0.32	170.38
행사 참여	0.33	6.97	0.50	6.69	0.17	150.88
업무관련 역량 개발	0.13	2.72	0.20	2.70	0.07	156.07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27	5.55	0.41	5.40	0.14	152.92

<부표 1-56> 노인 영역 직무량 분석: 7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4.23	100.00	7.84	100.00	3.62	185.53
상담	0.61	14.41	0.88	11.23	0.27	144.58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19	4.58	0.40	5.04	0.20	204.05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44	10.47	0.69	8.79	0.25	155.70
사업 기획 및 홍보	0.25	5.95	0.56	7.12	0.31	222.09
사업 관리	0.42	9.97	0.78	10.01	0.36	186.28
대상자 관리	0.31	7.38	0.58	7.34	0.26	184.73
시설 관리	0.67	15.75	1.26	16.02	0.59	188.64
자원 관리	0.10	2.26	0.28	3.51	0.18	288.27
단체 및 법인 관리	0.46	10.99	0.85	10.85	0.39	183.24
행사 참여	0.26	6.19	0.47	5.94	0.20	177.96
업무관련 역량 개발	0.18	4.19	0.47	5.94	0.29	262.71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33	7.86	0.64	8.22	0.31	193.94

9. 지자체 유형별 직무량 분석: 장애인 영역

<부표 1-57> 장애인 영역 직무량 분석: 1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10.91	100.00	19.27	100.00	8.36	176.64
상담	2.11	19.35	4.07	21.12	1.96	192.84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35	3.24	0.82	4.26	0.47	232.38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1.25	11.42	2.11	10.95	0.86	169.40
사업 기획 및 홍보	0.31	2.81	0.67	3.47	0.36	218.39
사업 관리	0.71	6.51	1.29	6.69	0.58	181.69
대상자 관리	0.65	5.96	1.30	6.73	0.65	199.46
시설 관리	2.42	22.22	3.68	19.08	1.25	151.67
자원 관리	0.16	1.46	0.36	1.85	0.20	224.06
단체 및 법인 관리	0.93	8.54	1.49	7.72	0.56	159.76
행사 참여	0.53	4.89	0.86	4.45	0.32	160.63
업무관련 역량 개발	0.49	4.50	0.98	5.07	0.49	198.93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99	9.11	1.66	8.60	0.66	166.78

<부표 1-58> 장애인 영역 직무량 분석: 2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4.53	100.00	9.07	100.00	4.54	200.17
상담	0.65	14.27	1.18	13.00	0.53	182.31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16	3.63	0.25	2.71	0.08	149.09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46	10.14	0.99	10.95	0.53	216.15
사업 기획 및 홍보	0.32	7.04	0.73	8.08	0.41	229.95
사업 관리	0.41	9.07	0.82	8.98	0.40	198.18
대상자 관리	0.27	5.98	0.57	6.23	0.29	208.58
시설 관리	0.89	19.66	1.72	19.01	0.83	193.51
자원 관리	0.09	2.04	0.17	1.84	0.07	180.36
단체 및 법인 관리	0.66	14.48	1.48	16.27	0.82	224.91
행사 참여	0.21	4.60	0.41	4.51	0.20	196.45
업무관련 역량 개발	0.20	4.50	0.42	4.60	0.21	204.47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21	4.59	0.35	3.83	0.14	167.03

<부표 1-59> 장애인 영역 직무량 분석: 4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5.24	100.00	9.33	100.00	4.09	178.08
상담	0.90	17.08	1.69	18.10	0.79	188.67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30	5.76	0.59	6.31	0.29	194.84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70	13.33	1.19	12.75	0.49	170.40
사업 기획 및 홍보	0.29	5.45	0.51	5.45	0.22	178.14
사업 관리	0.43	8.25	0.74	7.97	0.31	172.02
대상자 관리	0.38	7.25	0.73	7.87	0.35	193.35
시설 관리	0.95	18.08	1.77	18.97	0.82	186.81
자원 관리	0.10	1.90	0.14	1.53	0.04	143.78
단체 및 법인 관리	0.43	8.18	0.73	7.82	0.30	170.12
행사 참여	0.24	4.66	0.36	3.84	0.11	146.99
업무관련 역량 개발	0.21	4.05	0.39	4.13	0.17	181.56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32	6.02	0.49	5.27	0.18	155.95

<부표 1-60> 장애인 영역 직무량 분석: 5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4.50	100.00	8.71	100.00	4.21	193.53
상담	0.60	13.25	1.21	13.90	0.61	203.04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21	4.70	0.39	4.48	0.18	184.46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51	11.44	0.96	10.98	0.44	185.77
사업 기획 및 홍보	0.24	5.33	0.46	5.26	0.22	190.84
사업 관리	0.44	9.86	0.83	9.51	0.38	186.64
대상자 관리	0.27	6.11	0.57	6.52	0.29	206.33
시설 관리	0.79	17.48	1.50	17.21	0.71	190.53
자원 관리	0.09	2.10	0.23	2.65	0.14	244.38
단체 및 법인 관리	0.58	12.95	1.08	12.38	0.50	184.96
행사 참여	0.28	6.29	0.53	6.10	0.25	187.91
업무관련 역량 개발	0.17	3.87	0.36	4.13	0.19	206.31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30	6.61	0.60	6.88	0.30	201.41

<부표 1-61> 장애인 영역 직무량 분석: 6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3.29	100.00	5.18	100.00	1.89	157.61
상담	0.43	12.96	0.58	11.14	0.15	135.50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21	6.26	0.28	5.40	0.07	136.06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29	8.97	0.49	9.56	0.20	167.89
사업 기획 및 홍보	0.19	5.71	0.27	5.23	0.08	144.44
사업 관리	0.31	9.32	0.51	9.94	0.21	168.12
대상자 관리	0.27	8.07	0.46	8.95	0.20	174.81
시설 관리	0.43	13.10	0.78	15.02	0.35	180.66
자원 관리	0.10	3.12	0.15	2.95	0.05	149.30
단체 및 법인 관리	0.36	10.94	0.66	12.81	0.30	184.58
행사 참여	0.25	7.46	0.30	5.81	0.06	122.76
업무관련 역량 개발	0.13	3.90	0.19	3.69	0.06	149.09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33	10.19	0.49	9.49	0.16	146.77

<부표 1-62> 장애인 영역 직무량 분석: 7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2.82	100.00	4.06	100.00	1.24	144.01
상담	0.29	10.39	0.40	9.77	0.10	135.47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17	6.16	0.22	5.32	0.04	124.31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35	12.42	0.46	11.35	0.11	131.62
사업 기획 및 홍보	0.08	2.89	0.13	3.18	0.05	158.53
사업 관리	0.20	7.02	0.28	6.97	0.09	143.11
대상자 관리	0.23	8.16	0.37	9.08	0.14	160.29
시설 관리	0.52	18.40	0.81	19.86	0.29	155.41
자원 관리	0.07	2.31	0.10	2.39	0.03	149.12
단체 및 법인 관리	0.35	12.50	0.52	12.90	0.17	148.67
행사 참여	0.15	5.32	0.19	4.66	0.04	126.05
업무관련 역량 개발	0.12	4.19	0.20	4.82	0.08	165.44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29	10.24	0.39	9.70	0.10	136.34

10. 지자체 유형별 직무량 분석: 보육 영역

<부표 1-63> 보육 영역 직무량 분석: 1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15.91	100.00	26.02	100.00	10.11	163.57
상담	2.58	16.21	3.68	14.15	1.10	142.83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73	4.59	1.27	4.90	0.54	174.37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1.99	12.49	2.85	10.95	0.86	143.44
사업 기획 및 홍보	0.49	3.10	0.93	3.57	0.44	188.42
사업 관리	1.15	7.24	1.80	6.90	0.64	156.01
대상자 관리	0.40	2.54	0.73	2.80	0.32	179.82
시설 관리	4.68	29.40	7.75	29.78	3.07	165.67
자원 관리	0.13	0.79	0.18	0.68	0.05	140.41
단체 및 법인 관리	1.53	9.60	2.45	9.40	0.92	160.15
행사 참여	0.51	3.23	1.05	4.03	0.53	203.95
업무관련 역량 개발	0.62	3.87	1.27	4.89	0.66	206.44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1.10	6.94	2.07	7.96	0.97	187.67

<부표 1-64> 보육 영역 직무량 분석: 2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6.46	100.00	9.80	100.00	3.34	151.73
상담	1.55	24.01	1.91	19.47	0.36	123.00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33	5.07	0.47	4.83	0.15	144.62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71	10.95	1.00	10.25	0.30	141.96
사업 기획 및 홍보	0.42	6.42	0.59	5.99	0.17	141.56
사업 관리	0.58	9.02	0.95	9.70	0.37	163.14
대상자 관리	0.28	4.37	0.51	5.24	0.23	181.85
시설 관리	1.10	16.96	1.78	18.16	0.68	162.45
자원 관리	0.09	1.39	0.15	1.57	0.06	170.75
단체 및 법인 관리	0.53	8.27	0.82	8.33	0.28	152.68
행사 참여	0.24	3.78	0.34	3.42	0.09	137.28
업무관련 역량 개발	0.23	3.61	0.42	4.27	0.19	179.42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40	6.14	0.86	8.79	0.47	217.33

<부표 1-65> 보육 영역 직무량 분석: 3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8.78	100.00	12.01	100.00	3.23	136.77
상담	1.36	15.48	1.66	13.81	0.30	122.01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70	7.99	1.15	9.57	0.45	163.85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1.32	15.06	1.87	15.56	0.55	141.26
사업 기획 및 홍보	0.41	4.65	0.49	4.11	0.09	121.12
사업 관리	0.53	6.02	0.67	5.58	0.14	126.83
대상자 관리	0.23	2.64	0.29	2.38	0.05	123.51
시설 관리	1.63	18.58	2.47	20.60	0.84	151.66
자원 관리	0.07	0.77	0.25	2.08	0.18	368.98
단체 및 법인 관리	0.53	6.08	0.65	5.38	0.11	121.09
행사 참여	0.66	7.49	0.87	7.28	0.22	132.94
업무관련 역량 개발	0.42	4.84	0.52	4.30	0.09	121.55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91	10.41	1.12	9.34	0.21	122.73

<부표 1-66> 보육 영역 직무량 분석: 4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6.13	100.00	11.60	100.00	5.47	189.11
상담	0.83	13.49	1.44	12.39	0.61	173.64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36	5.90	0.68	5.90	0.32	189.07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63	10.29	1.09	9.37	0.46	172.36
사업 기획 및 홍보	0.30	4.88	0.54	4.67	0.24	181.00
사업 관리	0.42	6.93	0.96	8.23	0.53	224.82
대상자 관리	0.39	6.34	0.73	6.25	0.34	186.56
시설 관리	1.61	26.20	3.56	30.69	1.95	221.48
자원 관리	0.06	1.05	0.14	1.17	0.07	210.21
단체 및 법인 관리	0.69	11.24	1.03	8.85	0.34	148.87
행사 참여	0.21	3.45	0.37	3.17	0.16	173.62
업무관련 역량 개발	0.23	3.81	0.44	3.78	0.20	187.56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39	6.43	0.64	5.54	0.25	162.77

<부표 1-67> 보육 영역 직무량 분석: 5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4.10	100.00	7.09	100.00	2.99	173.04
상담	0.57	13.98	1.03	14.52	0.46	179.69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28	6.84	0.43	6.02	0.15	152.29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46	11.34	0.81	11.43	0.35	174.35
사업 기획 및 홍보	0.23	5.59	0.35	4.97	0.12	153.77
사업 관리	0.24	5.96	0.47	6.63	0.23	192.47
대상자 관리	0.20	4.80	0.36	5.13	0.17	184.91
시설 관리	0.77	18.88	1.54	21.75	0.77	199.37
자원 관리	0.08	1.89	0.09	1.30	0.02	119.46
단체 및 법인 관리	0.62	15.17	1.00	14.11	0.38	160.92
행사 참여	0.20	4.92	0.28	3.95	0.08	138.79
업무관련 역량 개발	0.18	4.39	0.32	4.56	0.14	179.59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25	6.22	0.40	5.63	0.14	156.52

<부표 1-68> 보육 영역 직무량 분석: 6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1.88	100.00	2.62	100.00	0.74	139.19
상담	0.20	10.55	0.25	9.54	0.05	125.77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08	4.11	0.10	3.91	0.03	132.65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21	10.94	0.25	9.65	0.05	122.88
사업 기획 및 홍보	0.07	3.74	0.10	3.94	0.03	146.29
사업 관리	0.16	8.74	0.21	7.90	0.04	125.82
대상자 관리	0.09	4.64	0.14	5.22	0.05	156.59
시설 관리	0.43	22.91	0.62	23.85	0.19	144.84
자원 관리	0.01	0.70	0.02	0.59	0.00	117.12
단체 및 법인 관리	0.34	18.06	0.50	19.08	0.16	147.06
행사 참여	0.08	4.49	0.10	3.76	0.01	116.54
업무관련 역량 개발	0.08	4.09	0.13	5.07	0.06	172.89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13	7.02	0.20	7.49	0.06	148.39

<부표 1-69> 보육 영역 직무량 분석: 7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1.50	100.00	2.26	100.00	0.76	150.48
상담	0.14	9.45	0.21	9.22	0.07	146.69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11	7.09	0.17	7.69	0.07	163.29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30	20.06	0.42	18.60	0.12	139.52
사업 기획 및 홍보	0.05	3.27	0.09	3.99	0.04	183.24
사업 관리	0.14	9.15	0.20	9.05	0.07	148.88
대상자 관리	0.11	7.15	0.15	6.66	0.04	140.11
시설 관리	0.22	14.45	0.35	15.62	0.14	162.59
자원 관리	0.04	2.67	0.06	2.73	0.02	153.90
단체 및 법인 관리	0.22	14.76	0.36	16.08	0.14	163.97
행사 참여	0.03	2.15	0.05	2.04	0.01	142.69
업무관련 역량 개발	0.05	3.61	0.07	3.01	0.01	125.63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09	6.18	0.12	5.32	0.03	129.44

11. 지자체 유형별 직무량 분석: 아동·드림스타트 영역

<부표 1-70> 아동·드림스타트 영역 직무량 분석: 1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6.00	100.00	9.52	100.00	3.52	158.63
상담	0.97	16.10	1.47	15.40	0.50	151.77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38	6.33	0.71	7.43	0.33	186.10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54	9.06	0.76	8.02	0.22	140.39
사업 기획 및 홍보	0.40	6.73	0.84	8.77	0.43	206.90
사업 관리	0.54	9.04	0.96	10.12	0.42	177.51
대상자 관리	0.62	10.28	0.94	9.90	0.33	152.80
시설 관리	0.96	16.02	1.27	13.38	0.31	132.50
자원 관리	0.29	4.84	0.53	5.54	0.24	181.48
단체 및 법인 관리	0.39	6.57	0.56	5.93	0.17	143.24
행사 참여	0.28	4.67	0.42	4.40	0.14	149.63
업무관련 역량 개발	0.23	3.88	0.37	3.92	0.14	160.24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39	6.48	0.68	7.18	0.29	175.72

<부표 1-71> 아동·드림스타트 영역 직무량 분석: 2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4.21	100.00	6.38	100.00	2.16	151.35
상담	1.01	23.92	1.36	21.34	0.35	135.06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29	6.91	0.41	6.49	0.12	142.23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26	6.19	0.35	5.56	0.09	135.82
사업 기획 및 홍보	0.37	8.87	0.59	9.20	0.21	156.91
사업 관리	0.44	10.34	0.69	10.87	0.26	159.11
대상자 관리	0.41	9.69	0.64	10.10	0.24	157.75
시설 관리	0.39	9.25	0.68	10.61	0.29	173.50
자원 관리	0.22	5.25	0.31	4.84	0.09	139.63
단체 및 법인 관리	0.15	3.56	0.32	5.02	0.17	213.27
행사 참여	0.24	5.68	0.37	5.77	0.13	153.73
업무관련 역량 개발	0.18	4.26	0.29	4.56	0.11	161.92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26	6.08	0.36	5.64	0.10	140.55

<부표 1-72> 아동·드림스타트 영역 직무량 분석: 3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5.00	100.00	8.13	100.00	3.13	162.62
상담	0.80	16.07	1.27	15.67	0.47	158.57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45	8.96	0.60	7.40	0.15	134.29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37	7.31	0.50	6.09	0.13	135.45
사업 기획 및 홍보	0.33	6.53	0.56	6.86	0.23	170.87
사업 관리	0.55	11.09	0.91	11.16	0.35	163.61
대상자 관리	0.63	12.51	1.32	16.26	0.70	211.38
시설 관리	0.43	8.55	0.65	7.95	0.22	151.27
자원 관리	0.31	6.11	0.46	5.70	0.16	151.81
단체 및 법인 관리	0.26	5.15	0.40	4.95	0.14	156.11
행사 참여	0.38	7.57	0.55	6.81	0.17	146.14
업무관련 역량 개발	0.20	3.93	0.38	4.68	0.18	193.68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31	6.22	0.53	6.48	0.22	169.33

<부표 1-73> 아동·드림스타트 영역 직무량 분석: 4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4.60	100.00	7.57	100.00	2.97	164.63
상담	1.06	22.95	1.90	25.14	0.85	180.33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27	5.93	0.48	6.37	0.21	177.07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39	8.57	0.53	7.03	0.14	134.97
사업 기획 및 홍보	0.37	8.08	0.63	8.36	0.26	170.25
사업 관리	0.33	7.21	0.56	7.34	0.22	167.58
대상자 관리	0.47	10.30	0.74	9.78	0.27	156.37
시설 관리	0.54	11.75	0.79	10.43	0.25	146.12
자원 관리	0.27	5.77	0.49	6.47	0.22	184.73
단체 및 법인 관리	0.21	4.58	0.33	4.37	0.12	157.10
행사 참여	0.18	3.97	0.27	3.62	0.09	150.09
업무관련 역량 개발	0.23	4.93	0.36	4.81	0.14	160.71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27	5.96	0.47	6.27	0.20	173.25

<부표 1-74> 아동·드림스타트 영역 직무량 분석: 5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4.48	100.00	6.78	100.00	2.30	151.29
상담	0.77	17.13	1.16	17.09	0.39	150.88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39	8.81	0.59	8.69	0.19	149.28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35	7.89	0.51	7.47	0.15	143.21
사업 기획 및 홍보	0.37	8.17	0.50	7.33	0.13	135.90
사업 관리	0.39	8.76	0.57	8.37	0.17	144.52
대상자 관리	0.41	9.11	0.58	8.51	0.17	141.30
시설 관리	0.52	11.52	0.90	13.21	0.38	173.46
자원 관리	0.21	4.60	0.31	4.57	0.10	150.27
단체 및 법인 관리	0.42	9.37	0.63	9.35	0.21	150.99
행사 참여	0.20	4.39	0.32	4.69	0.12	161.74
업무관련 역량 개발	0.17	3.80	0.27	4.02	0.10	160.25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29	6.46	0.45	6.70	0.17	157.00

<부표 1-75> 아동·드림스타트 영역 직무량 분석: 6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3.27	100.00	4.52	100.00	1.25	138.16
상담	0.71	21.60	0.93	20.48	0.22	131.03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19	5.84	0.26	5.66	0.06	133.90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25	7.55	0.34	7.46	0.09	136.43
사업 기획 및 홍보	0.28	8.57	0.37	8.28	0.09	133.55
사업 관리	0.29	8.74	0.37	8.26	0.09	130.49
대상자 관리	0.33	9.99	0.43	9.56	0.11	132.24
시설 관리	0.38	11.67	0.57	12.68	0.19	150.07
자원 관리	0.17	5.28	0.26	5.79	0.09	151.47
단체 및 법인 관리	0.20	5.97	0.33	7.34	0.14	169.81
행사 참여	0.15	4.70	0.20	4.52	0.05	132.87
업무관련 역량 개발	0.15	4.47	0.20	4.52	0.06	139.68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18	5.62	0.25	5.46	0.06	134.16

<부표 1-76> 아동·드림스타트 영역 직무량 분석: 7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2.78	100.00	3.88	100.00	1.10	139.37
상담	0.43	15.48	0.61	15.83	0.18	142.46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16	5.88	0.21	5.53	0.05	131.12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23	8.26	0.28	7.20	0.05	121.57
사업 기획 및 홍보	0.19	6.83	0.26	6.67	0.07	136.23
사업 관리	0.32	11.56	0.40	10.28	0.08	123.96
대상자 관리	0.33	11.72	0.50	12.86	0.17	152.98
시설 관리	0.31	11.10	0.48	12.28	0.17	154.18
자원 관리	0.17	6.24	0.26	6.69	0.09	149.30
단체 및 법인 관리	0.18	6.44	0.23	6.05	0.06	131.00
행사 참여	0.14	4.92	0.18	4.67	0.04	132.33
업무관련 역량 개발	0.12	4.29	0.18	4.73	0.06	153.64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20	7.28	0.28	7.20	0.08	137.77

12. 지자체 유형별 직무량 분석: 청소년 영역

<부표 1-77> 청소년 영역 직무량 분석: 1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4.14	100.00	6.52	100.00	2.38	157.44
상담	0.31	7.50	0.45	6.91	0.14	145.07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07	1.72	0.10	1.50	0.03	136.63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14	3.28	0.14	2.19	0.01	105.11
사업 기획 및 홍보	0.49	11.81	0.81	12.36	0.32	164.82
사업 관리	0.68	16.29	1.04	15.96	0.37	154.22
대상자 관리	0.02	0.52	0.03	0.39	0.00	117.83
시설 관리	0.86	20.69	1.28	19.66	0.43	149.61
자원 관리	0.02	0.52	0.03	0.39	0.00	117.83
단체 및 법인 관리	0.46	11.00	0.84	12.83	0.38	183.64
행사 참여	0.50	12.16	0.74	11.38	0.24	147.42
업무관련 역량 개발	0.23	5.60	0.42	6.46	0.19	181.37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37	8.91	0.65	9.98	0.28	176.31

<부표 1-78> 청소년 영역 직무량 분석: 2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2.70	100.00	4.15	100.00	1.45	153.62
상담	0.08	3.07	0.10	2.31	0.01	115.23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06	2.07	0.06	1.54	0.01	114.08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05	2.00	0.06	1.45	0.01	111.59
사업 기획 및 홍보	0.54	20.19	0.94	22.63	0.39	172.23
사업 관리	0.50	18.41	0.87	21.01	0.37	175.32
대상자 관리	0.03	1.11	0.03	0.79	0.00	108.77
시설 관리	0.35	12.96	0.56	13.45	0.21	159.39
자원 관리	0.11	4.00	0.13	3.24	0.03	124.28
단체 및 법인 관리	0.36	13.33	0.48	11.61	0.12	133.81
행사 참여	0.35	12.78	0.51	12.35	0.17	148.42
업무관련 역량 개발	0.11	4.11	0.18	4.26	0.07	159.11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16	5.96	0.22	5.37	0.06	138.37

<부표 1-79> 청소년 영역 직무량 분석: 3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3.75	100.00	6.31	100.00	2.56	168.37
상담	0.19	5.10	0.49	7.79	0.30	257.06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19	5.20	0.32	5.03	0.12	162.89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32	8.53	0.47	7.42	0.15	146.47
사업 기획 및 홍보	0.34	9.17	0.51	8.03	0.16	147.48
사업 관리	0.49	13.00	0.81	12.86	0.32	166.58
대상자 관리	0.13	3.33	0.23	3.60	0.10	181.62
시설 관리	0.68	18.17	1.12	17.68	0.44	163.86
자원 관리	0.09	2.50	0.21	3.33	0.12	224.27
단체 및 법인 관리	0.39	10.50	0.56	8.79	0.16	141.03
행사 참여	0.49	13.13	0.73	11.52	0.23	147.64
업무관련 역량 개발	0.15	3.87	0.27	4.30	0.13	187.17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28	7.50	0.61	9.65	0.33	216.75

<부표 1-80> 청소년 영역 직무량 분석: 4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2.38	100.00	3.33	100.00	0.95	139.84
상담	0.16	6.74	0.19	5.73	0.03	118.99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13	5.33	0.16	4.72	0.03	123.76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12	4.97	0.17	5.21	0.06	146.60
사업 기획 및 홍보	0.26	10.78	0.35	10.48	0.09	135.90
사업 관리	0.34	14.14	0.51	15.40	0.18	152.23
대상자 관리	0.14	5.75	0.18	5.31	0.04	129.01
시설 관리	0.42	17.46	0.63	18.93	0.21	151.57
자원 관리	0.05	2.01	0.06	1.85	0.01	128.37
단체 및 법인 관리	0.23	9.77	0.31	9.38	0.08	134.35
행사 참여	0.23	9.68	0.29	8.85	0.06	127.90
업무관련 역량 개발	0.10	4.03	0.14	4.08	0.04	141.73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22	9.32	0.33	10.05	0.11	150.81

<부표 1-81> 청소년 영역 직무량 분석: 5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2.88	100.00	3.94	100.00	1.07	137.12
상담	0.19	6.74	0.24	6.00	0.04	122.00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05	1.68	0.08	2.13	0.04	173.88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08	2.83	0.10	2.51	0.02	121.56
사업 기획 및 홍보	0.22	7.62	0.29	7.43	0.07	133.66
사업 관리	0.38	13.13	0.55	14.05	0.18	146.76
대상자 관리	0.05	1.87	0.06	1.58	0.01	115.91
시설 관리	0.58	20.13	0.80	20.34	0.22	138.51
자원 관리	0.03	1.12	0.04	0.90	0.00	110.31
단체 및 법인 관리	0.41	14.20	0.56	14.21	0.15	137.18
행사 참여	0.48	16.59	0.62	15.74	0.14	130.06
업무관련 역량 개발	0.12	4.01	0.17	4.19	0.05	143.03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29	10.07	0.43	10.93	0.14	148.84

<부표 1-82> 청소년 영역 직무량 분석: 6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2.06	100.00	3.05	100.00	0.99	148.03
상담	0.12	5.66	0.16	5.23	0.04	136.73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04	1.98	0.05	1.77	0.01	132.42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06	2.88	0.07	2.36	0.01	121.12
사업 기획 및 홍보	0.20	9.50	0.34	11.17	0.14	174.12
사업 관리	0.31	15.28	0.48	15.84	0.17	153.47
대상자 관리	0.05	2.56	0.07	2.29	0.02	132.25
시설 관리	0.42	20.33	0.57	18.74	0.15	136.46
자원 관리	0.03	1.37	0.04	1.34	0.01	144.01
단체 및 법인 관리	0.27	13.13	0.39	12.73	0.12	143.48
행사 참여	0.14	6.87	0.22	7.12	0.08	153.46
업무관련 역량 개발	0.14	6.76	0.23	7.65	0.09	167.54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28	13.68	0.42	13.77	0.14	149.01

<부표 1-83> 청소년 영역 직무량 분석: 7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1.90	100.00	2.60	100.00	0.69	136.35
상담	0.12	6.53	0.16	6.00	0.03	125.48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03	1.67	0.05	1.75	0.01	142.84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12	6.23	0.15	5.95	0.04	130.31
사업 기획 및 홍보	0.21	11.00	0.29	10.98	0.08	136.08
사업 관리	0.34	17.80	0.49	18.69	0.15	143.21
대상자 관리	0.06	2.90	0.08	3.02	0.02	142.02
시설 관리	0.30	15.60	0.42	15.98	0.12	139.69
자원 관리	0.06	3.32	0.10	3.70	0.03	151.75
단체 및 법인 관리	0.25	13.00	0.32	12.34	0.07	129.48
행사 참여	0.14	7.50	0.18	6.92	0.04	125.79
업무관련 역량 개발	0.10	5.48	0.15	5.95	0.05	148.12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17	8.97	0.23	8.70	0.06	132.25

13. 지자체 유형별 직무량 분석: 여성·가족·다문화 영역

<부표 1-84> 여성·가족·다문화 영역 직무량 분석: 1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8.00	100.00	11.66	100.00	3.66	145.80
상담	0.36	4.54	0.52	4.47	0.16	143.44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21	2.59	0.29	2.49	0.08	140.14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88	10.98	1.11	9.50	0.23	126.13
사업 기획 및 홍보	1.02	12.69	1.70	14.54	0.68	167.06
사업 관리	1.29	16.09	1.75	14.97	0.46	135.60
대상자 관리	0.39	4.81	0.56	4.81	0.18	145.52
시설 관리	1.07	13.41	1.58	13.52	0.50	147.03
자원 관리	0.21	2.67	0.31	2.67	0.10	145.94
단체 및 법인 관리	0.84	10.49	1.18	10.09	0.34	140.18
행사 참여	0.52	6.45	0.80	6.89	0.29	155.86
업무관련 역량 개발	0.36	4.51	0.56	4.81	0.20	155.60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86	10.76	1.31	11.24	0.45	152.34

<부표 1-85> 여성·가족·다문화 영역 직무량 분석: 2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4.58	100.00	6.49	100.00	1.91	141.59
상담	0.27	5.80	0.32	4.89	0.05	119.35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25	5.45	0.29	4.50	0.04	116.73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35	7.65	0.47	7.29	0.12	134.81
사업 기획 및 홍보	0.53	11.53	0.72	11.05	0.19	135.78
사업 관리	0.64	14.00	0.84	12.98	0.20	131.26
대상자 관리	0.31	6.85	0.48	7.47	0.17	154.28
시설 관리	0.44	9.62	0.70	10.84	0.26	159.61
자원 관리	0.12	2.51	0.14	2.14	0.02	120.99
단체 및 법인 관리	0.72	15.67	1.05	16.11	0.33	145.50
행사 참여	0.29	6.27	0.42	6.47	0.13	146.06
업무관련 역량 개발	0.24	5.20	0.38	5.87	0.14	159.88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43	9.44	0.67	10.39	0.24	155.88

<부표 1-86> 여성·가족다문화 영역 직무량 분석: 3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8.20	100.00	12.34	100.00	4.14	150.54
상담	0.62	7.57	0.82	6.64	0.20	132.09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30	3.69	0.41	3.34	0.11	136.38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71	8.62	0.95	7.68	0.24	134.04
사업 기획 및 홍보	1.11	13.48	1.86	15.08	0.76	168.50
사업 관리	1.22	14.89	1.96	15.89	0.74	160.68
대상자 관리	0.51	6.28	0.73	5.92	0.22	141.84
시설 관리	1.05	12.81	1.64	13.26	0.59	155.78
자원 관리	0.13	1.55	0.23	1.84	0.10	179.23
단체 및 법인 관리	0.62	7.52	0.99	7.98	0.37	159.83
행사 참여	0.67	8.19	0.92	7.48	0.25	137.49
업무관련 역량 개발	0.44	5.35	0.67	5.45	0.23	153.54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83	10.06	1.16	9.43	0.34	141.10

<부표 1-87> 여성·가족다문화 영역 직무량 분석: 4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4.94	100.00	8.91	100.00	3.97	180.38
상담	0.49	9.96	0.88	9.83	0.38	177.99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18	3.65	0.35	3.91	0.17	193.05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37	7.53	0.74	8.32	0.37	199.25
사업 기획 및 홍보	0.59	11.99	1.17	13.11	0.58	197.27
사업 관리	0.59	11.97	1.14	12.75	0.55	192.23
대상자 관리	0.25	5.07	0.41	4.60	0.16	163.77
시설 관리	0.74	14.98	1.26	14.17	0.52	170.71
자원 관리	0.16	3.23	0.26	2.93	0.10	163.77
단체 및 법인 관리	0.46	9.40	0.73	8.22	0.27	157.77
행사 참여	0.44	8.96	0.76	8.50	0.31	171.14
업무관련 역량 개발	0.23	4.72	0.42	4.73	0.19	180.55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42	8.55	0.80	8.93	0.37	188.33

<부표 1-88> 여성·가족다문화 영역 직무량 분석: 5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4.73	100.00	7.00	100.00	2.27	148.01
상담	0.37	7.81	0.51	7.24	0.14	137.06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22	4.75	0.29	4.07	0.06	126.94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44	9.38	0.67	9.52	0.22	150.23
사업 기획 및 홍보	0.55	11.57	0.88	12.63	0.34	161.64
사업 관리	0.61	12.87	0.94	13.43	0.33	154.41
대상자 관리	0.26	5.59	0.41	5.85	0.15	154.87
시설 관리	0.52	10.98	0.70	9.94	0.18	133.98
자원 관리	0.13	2.76	0.22	3.15	0.09	168.53
단체 및 법인 관리	0.58	12.17	0.82	11.70	0.24	142.22
행사 참여	0.47	9.86	0.73	10.39	0.26	155.94
업무관련 역량 개발	0.19	4.10	0.29	4.15	0.10	149.71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39	8.14	0.56	7.93	0.17	144.17

<부표 1-89> 여성가족다문화 영역 직무량 분석: 6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3.33	100.00	5.32	100.00	1.99	159.86
상담	0.28	8.45	0.39	7.42	0.11	140.44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10	2.95	0.17	3.14	0.07	170.32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19	5.81	0.26	4.91	0.07	134.91
사업 기획 및 홍보	0.41	12.32	0.69	12.99	0.28	168.61
사업 관리	0.51	15.36	0.95	17.92	0.44	186.41
대상자 관리	0.11	3.28	0.18	3.41	0.07	165.98
시설 관리	0.43	12.92	0.65	12.31	0.22	152.32
자원 관리	0.07	2.24	0.13	2.46	0.06	175.28
단체 및 법인 관리	0.47	13.99	0.72	13.57	0.26	155.08
행사 참여	0.38	11.32	0.54	10.08	0.16	142.30
업무관련 역량 개발	0.13	3.95	0.23	4.32	0.10	174.79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25	7.40	0.40	7.47	0.15	161.42

<부표 1-90> 여성가족다문화 영역 직무량 분석: 7유형 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적정 기준		실제 대비 적정	
	인력규모(A)	비율	인력규모(B)	비율	차이(B-A)	비율(B/A*100)
계	2.91	100.00	4.13	100.00	1.22	141.74
상담	0.30	10.28	0.37	8.90	0.07	122.61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0.12	4.03	0.15	3.54	0.03	124.66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행정	0.29	9.79	0.36	8.76	0.08	126.87
사업 기획 및 홍보	0.27	9.21	0.43	10.49	0.16	161.50
사업 관리	0.42	14.55	0.61	14.88	0.19	144.95
대상자 관리	0.18	6.04	0.23	5.51	0.05	129.12
시설 관리	0.22	7.42	0.30	7.28	0.08	139.20
자원 관리	0.08	2.67	0.12	2.89	0.04	153.22
단체 및 법인 관리	0.35	12.18	0.53	12.95	0.18	150.76
행사 참여	0.34	11.51	0.50	12.05	0.16	148.47
업무관련 역량 개발	0.14	4.88	0.23	5.49	0.08	159.57
일반 행정업무(복지 이외)	0.22	7.43	0.30	7.24	0.08	138.06

부록 2

: 시군구 읍면동 기능별·유형별 직무량 분석 <<

1. 지자체 유형별 직무량 분석: 상담 기능

<부표 2-1> 상담 기능 직무량 분석: 1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2.14	100.00	3.27	100.00	1.14	153.17
생계급여	0.31	14.47	0.50	15.36	0.19	162.62
의료급여	0.29	13.42	0.47	14.32	0.18	163.49
주거급여	0.27	12.75	0.44	13.43	0.17	161.25
한부모가족	0.12	5.63	0.20	5.96	0.07	162.14
노인	0.35	16.33	0.52	15.81	0.17	148.27
장애인	0.22	10.45	0.34	10.27	0.11	150.57
아동	0.33	15.54	0.46	13.95	0.12	137.50
범정부 바우처사업	0.14	6.60	0.21	6.31	0.07	146.52
지자체 자체사업	0.10	4.80	0.15	4.58	0.05	146.02

<부표 2-2> 상담 기능 직무량 분석: 2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1.52	100.00	2.36	100.00	0.83	154.90
생계급여	0.23	14.95	0.36	15.17	0.13	157.19
의료급여	0.22	14.53	0.34	14.49	0.12	154.48
주거급여	0.22	14.56	0.34	14.56	0.12	154.88
한부모가족	0.10	6.28	0.15	6.19	0.05	152.69
노인	0.22	14.62	0.35	14.65	0.12	155.16
장애인	0.17	10.87	0.26	11.13	0.10	158.72
아동	0.20	13.06	0.29	12.36	0.09	146.54
범정부 바우처사업	0.11	7.28	0.18	7.55	0.07	160.78
지자체 자체사업	0.06	3.86	0.09	3.91	0.03	156.84

<부표 2-3> 상담 기능 직무량 분석: 3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2.82	100.00	4.49	100.00	1.67	159.14
생계급여	0.47	16.78	0.79	17.58	0.32	166.77
의료급여	0.38	13.34	0.64	14.26	0.26	170.06
주거급여	0.39	13.84	0.67	14.87	0.28	170.93
한부모가족	0.13	4.73	0.21	4.62	0.07	155.56
노인	0.44	15.51	0.67	14.88	0.23	152.65
장애인	0.26	9.14	0.41	9.18	0.15	159.85
아동	0.41	14.54	0.61	13.59	0.20	148.72
범정부 바우처사업	0.21	7.53	0.30	6.77	0.09	142.98
지자체 자체사업	0.13	4.58	0.19	4.25	0.06	147.75

<부표 2-4> 상담 기능 직무량 분석: 4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1.56	100.00	2.36	100.00	0.80	151.38
생계급여	0.23	14.55	0.36	15.29	0.13	159.04
의료급여	0.21	13.71	0.34	14.29	0.12	157.73
주거급여	0.21	13.75	0.34	14.23	0.12	156.63
한부모가족	0.09	5.85	0.14	5.86	0.05	151.65
노인	0.26	16.60	0.38	16.13	0.12	147.05
장애인	0.15	9.92	0.23	9.94	0.08	151.71
아동	0.22	13.99	0.30	12.87	0.09	139.30
법정부 바우처사업	0.13	8.47	0.19	8.21	0.06	146.82
지자체 자체사업	0.05	3.16	0.08	3.18	0.03	152.72

<부표 2-5> 상담 기능 직무량 분석: 5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1.31	100.00	1.90	100.00	0.59	144.64
생계급여	0.20	15.06	0.30	15.59	0.10	149.74
의료급여	0.17	13.01	0.26	13.58	0.09	151.02
주거급여	0.16	11.88	0.24	12.46	0.08	151.75
한부모가족	0.06	4.88	0.09	4.95	0.03	146.57
노인	0.22	16.99	0.31	16.29	0.09	138.66
장애인	0.17	12.95	0.24	12.87	0.07	143.73
아동	0.18	13.72	0.25	12.99	0.07	136.94
법정부 바우처사업	0.10	7.33	0.13	7.07	0.04	139.64
지자체 자체사업	0.05	4.18	0.08	4.20	0.02	145.12

<부표 2-6> 상담 기능 직무량 분석: 6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87	100.00	1.24	100.00	0.37	142.56
생계급여	0.14	16.23	0.20	16.46	0.06	144.57
의료급여	0.13	15.14	0.19	15.66	0.06	147.45
주거급여	0.12	13.29	0.17	13.87	0.06	148.85
한부모가족	0.03	3.69	0.05	3.72	0.01	143.82
노인	0.17	19.57	0.24	19.33	0.07	140.77
장애인	0.10	11.30	0.14	11.63	0.05	146.69
아동	0.08	9.38	0.11	8.90	0.03	135.26
법정부 바우처사업	0.05	6.18	0.07	5.57	0.02	128.64
지자체 자체사업	0.05	5.23	0.06	4.86	0.01	132.56

<부표 2-7> 상담 기능 직무량 분석: 7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76	100.00	1.20	100.00	0.44	158.17
생계급여	0.11	15.04	0.20	16.73	0.09	175.89
의료급여	0.10	13.73	0.17	13.82	0.06	159.25
주거급여	0.09	12.36	0.16	13.06	0.06	167.20
한부모가족	0.02	3.18	0.04	3.11	0.01	154.56
노인	0.13	17.52	0.19	15.92	0.06	143.74
장애인	0.09	12.54	0.15	12.74	0.06	160.65
아동	0.08	10.23	0.11	9.14	0.03	141.18
법정부 바우처사업	0.06	7.51	0.09	7.64	0.03	160.80
지자체 자체사업	0.06	7.88	0.09	7.84	0.03	157.43

2. 지자체 유형별 직무량 분석: 신청·접수 기능

<부표 2-8> 신청·접수 기능 직무량 분석: 1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1.13	100.00	1.62	100.00	0.49	143.22
생계급여	0.13	11.57	0.19	11.83	0.06	146.50
의료급여	0.13	11.29	0.19	11.52	0.06	146.21
주거급여	0.12	10.69	0.18	11.09	0.06	148.59
한부모가족	0.05	4.09	0.07	4.23	0.02	148.22
노인	0.15	13.54	0.23	13.87	0.07	146.75
장애인	0.12	10.75	0.17	10.26	0.04	136.69
아동	0.28	24.91	0.40	24.54	0.12	141.10
법정부 바우처사업	0.09	8.03	0.13	7.72	0.03	137.78
지자체 자체사업	0.06	5.14	0.08	4.93	0.02	137.32

<부표 2-9> 신청·접수 기능 직무량 분석: 2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80	100.00	1.16	100.00	0.36	145.66
생계급여	0.11	13.22	0.16	13.82	0.06	152.26
의료급여	0.10	12.44	0.15	12.90	0.05	151.06
주거급여	0.10	12.18	0.15	12.55	0.05	150.10
한부모가족	0.04	5.20	0.06	5.02	0.02	140.54
노인	0.11	13.91	0.16	13.79	0.05	144.38
장애인	0.09	11.58	0.14	11.67	0.04	146.87
아동	0.14	17.20	0.20	16.84	0.06	142.61
법정부 바우처사업	0.07	8.72	0.10	8.65	0.03	144.65
지자체 자체사업	0.04	5.55	0.06	4.75	0.01	124.63

<부표 2-10> 신청·접수 기능 직무량 분석: 3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1.49	100.00	2.16	100.00	0.67	145.15
생계급여	0.20	13.54	0.29	13.64	0.09	146.20
의료급여	0.19	12.99	0.28	13.05	0.09	145.73
주거급여	0.17	11.48	0.25	11.48	0.08	145.20
한부모가족	0.06	4.07	0.09	4.05	0.03	144.38
노인	0.21	14.19	0.31	14.33	0.10	146.64
장애인	0.12	8.34	0.17	8.08	0.05	140.73
아동	0.32	21.79	0.49	22.49	0.16	149.81
범정부 바우처사업	0.12	8.05	0.17	7.87	0.05	141.78
지자체 자체사업	0.08	5.55	0.11	5.01	0.03	131.05

<부표 2-11> 신청·접수 기능 직무량 분석: 4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83	100.00	1.17	100.00	0.35	141.92
생계급여	0.11	12.80	0.15	13.12	0.05	145.45
의료급여	0.11	12.93	0.16	13.43	0.05	147.43
주거급여	0.10	12.19	0.15	12.61	0.05	146.82
한부모가족	0.03	4.12	0.05	4.03	0.01	138.60
노인	0.11	13.42	0.16	13.69	0.05	144.78
장애인	0.08	10.03	0.12	10.03	0.03	141.94
아동	0.17	20.82	0.23	19.73	0.06	134.52
범정부 바우처사업	0.08	9.79	0.11	9.66	0.03	140.01
지자체 자체사업	0.03	3.90	0.04	3.70	0.01	134.65

<부표 2-12> 신청·접수 기능 직무량 분석: 5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68	100.00	0.94	100.00	0.26	137.47
생계급여	0.10	14.04	0.13	14.32	0.04	140.25
의료급여	0.09	12.98	0.12	13.28	0.04	140.57
주거급여	0.08	11.80	0.11	12.21	0.03	142.30
한부모가족	0.03	4.36	0.04	4.50	0.01	141.84
노인	0.10	14.60	0.13	14.40	0.04	135.54
장애인	0.08	12.15	0.11	12.01	0.03	135.95
아동	0.11	16.15	0.15	15.72	0.04	133.82
범정부 바우처사업	0.06	9.44	0.09	9.40	0.02	136.86
지자체 자체사업	0.03	4.48	0.04	4.16	0.01	127.58

<부표 2-13> 신청·접수 기능 직무량 분석: 6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55	100.00	0.74	100.00	0.19	134.97
생계급여	0.08	14.36	0.11	14.29	0.03	134.35
의료급여	0.07	13.47	0.10	13.36	0.02	133.85
주거급여	0.07	12.33	0.09	12.39	0.02	135.56
한부모가족	0.02	3.65	0.03	3.70	0.01	136.78
노인	0.10	17.69	0.13	17.81	0.03	135.94
장애인	0.06	11.84	0.09	12.38	0.03	141.07
아동	0.07	13.23	0.10	13.52	0.03	137.89
범정부 바우처사업	0.04	7.99	0.06	7.61	0.01	128.51
지자체 자체사업	0.03	5.44	0.04	4.95	0.01	122.68

<부표 2-14> 신청·접수 기능 직무량 분석: 7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56	100.00	0.75	100.00	0.18	132.83
생계급여	0.09	15.54	0.12	15.74	0.03	134.53
의료급여	0.08	14.51	0.11	14.55	0.03	133.20
주거급여	0.08	13.45	0.10	13.72	0.03	135.47
한부모가족	0.02	2.70	0.02	2.95	0.01	145.21
노인	0.09	16.35	0.12	16.15	0.03	131.21
장애인	0.06	11.28	0.09	12.36	0.03	145.58
아동	0.06	10.68	0.08	10.14	0.02	126.09
범정부 바우처사업	0.04	7.51	0.05	7.26	0.01	128.37
지자체 자체사업	0.04	7.99	0.05	7.15	0.01	118.80

3. 지자체 유형별 직무량 분석: 대상자 사후관리 기능

<부표 2-15> 대상자 사후관리 기능 직무량 분석: 1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80	100.00	1.19	100.00	0.38	147.53
생계급여	0.13	15.82	0.19	15.98	0.06	148.97
의료급여	0.12	14.41	0.17	14.58	0.06	149.26
주거급여	0.12	15.53	0.19	15.95	0.06	151.49
한부모가족	0.06	7.78	0.09	7.86	0.03	148.97
노인	0.10	12.95	0.15	12.73	0.05	145.00
장애인	0.09	10.72	0.12	10.28	0.04	141.51
아동	0.09	11.55	0.14	11.45	0.04	146.31
범정부 바우처사업	0.05	6.50	0.08	6.44	0.02	146.35
지자체 자체사업	0.04	4.75	0.06	4.74	0.02	147.19

<부표 2-16> 대상자 사후관리 기능 직무량 분석: 2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68	100.00	1.07	100.00	0.39	157.24
생계급여	0.11	16.53	0.19	17.50	0.08	166.48
의료급여	0.10	15.31	0.17	15.91	0.07	163.41
주거급여	0.11	15.84	0.17	15.55	0.06	154.39
한부모가족	0.06	8.09	0.09	8.40	0.04	163.38
노인	0.09	13.04	0.14	12.61	0.05	152.02
장애인	0.10	14.02	0.14	13.36	0.05	149.87
아동	0.06	8.93	0.09	8.71	0.03	153.45
법정부 바우처사업	0.03	4.75	0.05	4.37	0.01	144.49
지자체 자체사업	0.02	3.50	0.04	3.58	0.01	161.11

<부표 2-17> 대상자 사후관리 기능 직무량 분석: 3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1.43	100.00	2.21	100.00	0.77	153.85
생계급여	0.26	18.19	0.41	18.40	0.15	155.60
의료급여	0.26	17.94	0.40	18.32	0.15	157.14
주거급여	0.22	15.52	0.35	15.89	0.13	157.52
한부모가족	0.10	6.64	0.15	6.92	0.06	160.39
노인	0.16	11.43	0.24	10.99	0.08	147.89
장애인	0.14	9.93	0.22	9.79	0.07	151.64
아동	0.13	8.92	0.19	8.68	0.06	149.82
법정부 바우처사업	0.10	6.76	0.13	6.05	0.04	137.78
지자체 자체사업	0.07	4.68	0.11	4.96	0.04	163.07

<부표 2-18> 대상자 사후관리 기능 직무량 분석: 4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79	100.00	1.19	100.00	0.40	150.77
생계급여	0.15	19.44	0.24	20.13	0.09	156.09
의료급여	0.14	17.64	0.22	18.37	0.08	157.02
주거급여	0.13	16.84	0.20	16.94	0.07	151.65
한부모가족	0.05	5.86	0.07	5.85	0.02	150.46
노인	0.10	12.10	0.14	11.80	0.04	147.02
장애인	0.09	11.02	0.12	10.30	0.04	140.89
아동	0.07	8.54	0.10	8.45	0.03	149.14
법정부 바우처사업	0.05	6.19	0.07	5.77	0.02	140.39
지자체 자체사업	0.02	2.36	0.03	2.40	0.01	153.49

<부표 2-19> 대상자 사후관리 기능 직무량 분석: 5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62	100.00	0.90	100.00	0.28	144.52
생계급여	0.10	16.49	0.15	17.09	0.05	149.76
의료급여	0.09	15.13	0.14	15.62	0.05	149.26
주거급여	0.11	17.41	0.16	17.27	0.05	143.42
한부모가족	0.05	7.30	0.07	7.37	0.02	145.82
노인	0.09	14.15	0.12	13.48	0.03	137.60
장애인	0.08	12.15	0.11	11.86	0.03	141.02
아동	0.05	8.31	0.08	8.57	0.03	149.02
범정부 바우처사업	0.04	5.97	0.05	5.66	0.01	136.99
지자체 자체사업	0.02	3.09	0.03	3.08	0.01	144.36

<부표 2-20> 대상자 사후관리 기능 직무량 분석: 6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51	100.00	0.72	100.00	0.21	141.59
생계급여	0.07	14.23	0.11	14.80	0.03	147.31
의료급여	0.06	11.96	0.09	12.63	0.03	149.58
주거급여	0.08	16.58	0.12	16.55	0.03	141.36
한부모가족	0.04	8.61	0.06	8.53	0.02	140.31
노인	0.09	18.60	0.13	17.46	0.03	132.92
장애인	0.06	11.89	0.08	11.78	0.02	140.27
아동	0.04	8.23	0.06	8.87	0.02	152.73
범정부 바우처사업	0.03	5.40	0.04	5.18	0.01	135.63
지자체 자체사업	0.02	4.51	0.03	4.19	0.01	131.65

<부표 2-21> 대상자 사후관리 기능 직무량 분석: 7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55	100.00	0.77	100.00	0.23	141.01
생계급여	0.07	13.39	0.11	14.03	0.04	147.73
의료급여	0.07	12.47	0.10	13.10	0.03	148.15
주거급여	0.08	14.31	0.12	15.38	0.04	151.55
한부모가족	0.04	6.96	0.05	6.70	0.01	135.82
노인	0.10	18.22	0.14	17.50	0.04	135.40
장애인	0.09	15.61	0.12	15.65	0.04	141.32
아동	0.04	8.06	0.06	7.63	0.01	133.52
범정부 바우처사업	0.03	5.91	0.04	5.34	0.01	127.39
지자체 자체사업	0.03	5.06	0.04	4.66	0.01	130.07

4. 지자체 유형별 직무량 분석: 찾아가는 방문 상담 기능

<부표 2-22> 찾아가는 방문 상담 기능 직무량 분석: 1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54	100.00	0.83	100.00	0.29	153.41
찾아가는 방문상담 계획 수립	0.10	18.40	0.16	18.89	0.06	157.51
담당 공무원의 직접 방문	0.24	43.41	0.35	42.40	0.12	149.86
지사협, 통장 등 인적안전망을 통한 방문상담	0.10	17.66	0.15	18.28	0.06	158.79
사각지대 취약정보를 통한 방문상담	0.11	20.54	0.17	20.43	0.06	152.62

<부표 2-23> 찾아가는 방문 상담 기능 직무량 분석: 2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52	100.00	0.81	100.00	0.29	155.66
찾아가는 방문상담 계획 수립	0.10	19.22	0.16	19.87	0.06	160.90
담당 공무원의 직접 방문	0.24	45.15	0.37	44.98	0.13	155.08
지사협, 통장 등 인적안전망을 통한 방문상담	0.08	14.72	0.12	15.05	0.05	159.13
사각지대 취약정보를 통한 방문상담	0.11	20.90	0.16	20.10	0.05	149.68

<부표 2-24> 찾아가는 방문 상담 기능 직무량 분석: 3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1.14	100.00	1.76	100.00	0.62	154.71
찾아가는 방문상담 계획 수립	0.31	27.04	0.48	27.06	0.17	154.82
담당 공무원의 직접 방문	0.50	44.34	0.79	44.97	0.29	156.91
지사협, 통장 등 인적안전망을 통한 방문상담	0.15	13.30	0.23	13.19	0.08	153.43
사각지대 취약정보를 통한 방문상담	0.17	15.32	0.26	14.78	0.09	149.24

<부표 2-25> 찾아가는 방문 상담 기능 직무량 분석: 4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67	100.00	1.01	100.00	0.34	150.63
찾아가는 방문상담 계획 수립	0.18	26.45	0.28	27.13	0.10	154.47
담당 공무원의 직접 방문	0.28	42.13	0.43	41.89	0.14	149.79
지사협, 통장 등 인적안전망을 통한 방문상담	0.11	15.96	0.16	15.57	0.05	146.96
사각지대 취약정보를 통한 방문상담	0.10	15.46	0.16	15.40	0.05	150.13

<부표 2-26> 찾아가는 방문 상담 기능 직무량 분석: 5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58	100.00	0.80	100.00	0.22	137.39
찾아가는 방문상담 계획 수립	0.16	27.51	0.22	27.32	0.06	136.45
담당 공무원의 직접 방문	0.24	40.60	0.32	39.65	0.08	134.16
지사협, 통장 등 인적안전망을 통한 방문상담	0.09	15.20	0.13	15.82	0.04	142.96
사각지대 취약정보를 통한 방문상담	0.10	16.69	0.14	17.21	0.04	141.69

<부표 2-27> 찾아가는 방문 상담 기능 직무량 분석: 6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56	100.00	0.82	100.00	0.25	145.33
찾아가는 방문상담 계획 수립	0.14	25.62	0.21	25.35	0.06	143.78
담당 공무원의 직접 방문	0.24	42.27	0.34	42.32	0.11	145.50
지사협, 통장 등 인적안전망을 통한 방문상담	0.08	14.82	0.13	15.57	0.04	152.67
사각지대 취약정보를 통한 방문상담	0.10	17.28	0.14	16.75	0.04	140.89

<부표 2-28> 찾아가는 방문 상담 기능 직무량 분석: 7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53	100.00	0.81	100.00	0.28	152.62
찾아가는 방문상담 계획 수립	0.12	22.16	0.18	21.66	0.06	149.18
담당 공무원의 직접 방문	0.24	45.46	0.37	45.95	0.13	154.29
지사협, 통장 등 인적안전망을 통한 방문상담	0.08	14.28	0.11	13.50	0.03	144.22
사각지대 취약정보를 통한 방문상담	0.10	18.10	0.15	18.89	0.06	159.29

5. 지자체 유형별 직무량 분석: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능

<부표 2-29>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능 직무량 분석: 1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25	100.00	0.40	100.00	0.15	162.04
전수조사 계획 수립	0.10	40.47	0.16	40.38	0.06	161.69
전수조사 수행	0.07	29.39	0.12	28.92	0.04	159.48
전수조사 사후관리 (서비스연계, 사례관리 의뢰 등)	0.08	30.14	0.12	30.69	0.05	165.02

<부표 2-30>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능 직무량 분석: 2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21	100.00	0.32	100.00	0.11	150.16
전수조사 계획 수립	0.05	23.67	0.07	23.08	0.02	146.37
전수조사 수행	0.08	36.22	0.12	37.30	0.04	154.64
전수조사 사후관리 (서비스연계, 사례관리 의뢰 등)	0.09	40.11	0.13	39.62	0.04	148.34

<부표 2-31>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능 직무량 분석: 3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41	100.00	0.60	100.00	0.19	144.90
전수조사 계획 수립	0.11	26.70	0.16	26.10	0.05	141.66
전수조사 수행	0.15	35.53	0.21	35.29	0.06	143.92
전수조사 사후관리 (서비스연계, 사례관리 의뢰 등)	0.16	37.77	0.23	38.61	0.08	148.11

<부표 2-32>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능 직무량 분석: 4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20	100.00	0.29	100.00	0.09	146.27
전수조사 계획 수립	0.04	21.64	0.06	20.42	0.02	138.08
전수조사 수행	0.07	37.29	0.11	37.09	0.03	145.47
전수조사 사후관리 (서비스연계, 사례관리 의뢰 등)	0.08	41.07	0.12	42.49	0.04	151.31

<부표 2-33>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능 직무량 분석: 5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23	100.00	0.32	100.00	0.09	136.49
전수조사 계획 수립	0.07	30.40	0.09	29.79	0.02	133.77
전수조사 수행	0.08	32.42	0.10	32.76	0.03	137.91
전수조사 사후관리 (서비스연계, 사례관리 의뢰 등)	0.09	37.18	0.12	37.45	0.03	137.46

<부표 2-34>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능 직무량 분석: 6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26	100.00	0.37	100.00	0.11	140.64
전수조사 계획 수립	0.08	30.21	0.10	28.23	0.02	131.45
전수조사 수행	0.09	33.73	0.13	35.30	0.04	147.19
전수조사 사후관리 (서비스연계, 사례관리 의뢰 등)	0.09	36.06	0.13	36.47	0.04	142.22

<부표 2-35>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능 직무량 분석: 7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23	100.00	0.30	100.00	0.07	132.77
전수조사 계획 수립	0.08	33.07	0.10	31.53	0.02	126.58
전수조사 수행	0.07	29.87	0.09	30.72	0.02	136.54
전수조사 사후관리 (서비스연계, 사례관리 의뢰 등)	0.08	37.06	0.11	37.75	0.03	135.26

6. 지자체 유형별 직무량 분석: 사례관리 기능

<부표 2-36> 사례관리 기능 직무량 분석: 1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38	100.00	0.58	100.00	0.20	152.15
초기상담	0.10	25.58	0.16	26.77	0.06	159.26
사례회의	0.04	11.46	0.06	10.34	0.02	137.25
서비스 제공 및 점검	0.13	34.10	0.20	35.18	0.07	156.95
종결 대상자 사후관리	0.11	28.86	0.16	27.71	0.05	146.09

<부표 2-37> 사례관리 기능 직무량 분석: 2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40	100.00	0.64	100.00	0.24	160.28
초기상담	0.09	22.87	0.15	22.62	0.05	158.54
사례회의	0.06	14.60	0.09	13.72	0.03	150.62
서비스 제공 및 점검	0.14	35.49	0.24	38.09	0.10	171.98
종결 대상자 사후관리	0.11	27.03	0.16	25.57	0.06	151.59

<부표 2-38> 사례관리 기능 직무량 분석: 3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75	100.00	1.10	100.00	0.36	147.75
초기상담	0.15	19.58	0.22	19.89	0.07	150.13
사례회의	0.12	16.15	0.18	16.02	0.06	146.52
서비스 제공 및 점검	0.33	44.31	0.49	44.80	0.16	149.36
종결 대상자 사후관리	0.15	19.95	0.21	19.29	0.06	142.84

<부표 2-39> 사례관리 기능 직무량 분석: 4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33	100.00	0.51	100.00	0.18	153.71
초기상담	0.07	20.96	0.11	21.61	0.04	158.52
사례회의	0.05	14.15	0.07	13.67	0.02	148.50
서비스 제공 및 점검	0.13	39.02	0.19	38.45	0.07	151.49
종결 대상자 사후관리	0.09	25.88	0.13	26.26	0.05	156.02

<부표 2-40> 사례관리 기능 직무량 분석: 5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31	100.00	0.42	100.00	0.11	135.01
초기상담	0.08	24.49	0.10	23.87	0.02	131.59
사례회의	0.03	10.73	0.05	10.84	0.01	136.45
서비스 제공 및 점검	0.12	38.47	0.16	38.60	0.04	135.46
종결 대상자 사후관리	0.08	26.31	0.11	26.69	0.03	136.94

<부표 2-41> 사례관리 기능 직무량 분석: 6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34	100.00	0.48	100.00	0.14	139.99
초기상담	0.09	26.57	0.13	26.90	0.04	141.72
사례회의	0.04	11.92	0.06	11.73	0.02	137.75
서비스 제공 및 점검	0.11	33.36	0.16	32.56	0.04	136.65
종결 대상자 사후관리	0.10	28.15	0.14	28.81	0.04	143.27

<부표 2-42> 사례관리 기능 직무량 분석: 7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35	100.00	0.54	100.00	0.19	153.42
초기상담	0.10	28.67	0.20	36.73	0.10	196.53
사례회의	0.05	14.57	0.07	12.62	0.02	132.97
서비스 제공 및 점검	0.11	31.29	0.15	27.18	0.04	133.30
종결 대상자 사후관리	0.09	25.48	0.13	23.47	0.04	141.31

7. 지자체 유형별 직무량 분석: 민관협력 기능

<부표 2-43> 민관협력 기능 직무량 분석: 1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21	100.00	0.30	100.00	0.08	139.28
민관 네트워크	0.03	13.02	0.04	13.55	0.01	145.01
인적 네트워크	0.08	39.02	0.12	39.01	0.03	139.25
복지자원관리	0.01	5.67	0.02	5.45	0.00	133.89
민관협력사업	0.09	42.30	0.13	41.99	0.03	138.27

<부표 2-44> 민관협력 기능 직무량 분석: 2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21	100.00	0.33	100.00	0.11	153.86
민관 네트워크	0.04	18.34	0.06	19.07	0.02	159.98
인적 네트워크	0.06	27.42	0.10	29.05	0.04	163.05
복지자원관리	0.02	8.22	0.03	8.93	0.01	167.09
민관협력사업	0.10	46.02	0.14	42.95	0.04	143.59

<부표 2-45> 민관협력 기능 직무량 분석: 3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36	100.00	0.52	100.00	0.16	144.23
민관 네트워크	0.08	21.15	0.11	20.77	0.03	141.60
인적 네트워크	0.10	28.45	0.15	29.08	0.05	147.42
복지자원관리	0.02	6.71	0.04	7.06	0.01	151.78
민관협력사업	0.16	43.69	0.22	43.09	0.07	142.26

<부표 2-46> 민관협력 기능 직무량 분석: 4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21	100.00	0.30	100.00	0.09	142.76
민관 네트워크	0.04	18.49	0.06	19.49	0.02	150.41
인적 네트워크	0.06	27.84	0.08	26.35	0.02	135.12
복지자원관리	0.01	5.92	0.02	6.57	0.01	158.44
민관협력사업	0.10	47.75	0.14	47.60	0.04	142.32

<부표 2-47> 민관협력 기능 직무량 분석: 5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20	100.00	0.26	100.00	0.07	135.61
민관 네트워크	0.03	17.30	0.04	16.78	0.01	131.48
인적 네트워크	0.06	33.13	0.09	34.09	0.03	139.57
복지자원관리	0.01	5.91	0.02	6.21	0.00	142.45
민관협력사업	0.09	43.66	0.11	42.92	0.03	133.32

<부표 2-48> 민관협력 기능 직무량 분석: 6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17	100.00	0.22	100.00	0.06	134.24
민관 네트워크	0.03	18.24	0.04	17.96	0.01	132.19
인적 네트워크	0.05	30.67	0.07	30.09	0.02	131.70
복지자원관리	0.01	7.11	0.02	7.83	0.01	147.81
민관협력사업	0.07	43.98	0.10	44.12	0.03	134.67

<부표 2-49> 민관협력 기능 직무량 분석: 7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15	100.00	0.21	100.00	0.06	141.72
민관 네트워크	0.03	20.73	0.04	19.78	0.01	135.24
인적 네트워크	0.05	32.46	0.06	30.53	0.02	133.32
복지자원관리	0.01	6.68	0.02	7.14	0.01	151.54
민관협력사업	0.06	40.14	0.09	42.54	0.03	150.23

8. 지자체 유형별 직무량 분석: 기타 행정 업무 기능

<부표 2-50> 기타 행정 업무 기능 직무량 분석: 1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54	100.00	0.71	100.00	0.17	100.00
행사지원	0.25	46.96	0.32	45.75	0.07	41.88
업무지원	0.17	31.71	0.23	32.53	0.06	35.14
기타 행정 업무 지원	0.11	21.33	0.15	21.72	0.04	22.98

<부표 2-51> 기타 행정 업무 기능 직무량 분석: 2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37	100.00	0.50	100.00	0.13	100.00
행사지원	0.18	47.37	0.23	45.72	0.05	40.83
업무지원	0.12	31.79	0.17	34.04	0.05	40.70
기타 행정 업무 지원	0.08	20.84	0.10	20.24	0.02	18.47

<부표 2-52> 기타 행정 업무 기능 직무량 분석: 3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58	100.00	0.82	100.00	0.24	100.00
행사지원	0.24	40.35	0.32	39.28	0.09	36.66
업무지원	0.19	32.23	0.27	33.41	0.09	36.30
기타 행정 업무 지원	0.16	27.42	0.22	27.31	0.06	27.04

<부표 2-53> 기타 행정 업무 기능 직무량 분석: 4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40	100.00	0.53	100.00	0.14	100.00
행사지원	0.15	37.87	0.20	36.60	0.04	32.89
업무지원	0.15	37.28	0.21	39.10	0.06	44.43
기타 행정 업무 지원	0.10	24.85	0.13	24.30	0.03	22.67

<부표 2-54> 기타 행정 업무 기능 직무량 분석: 5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49	100.00	0.63	100.00	0.13	100.00
행사지원	0.21	43.21	0.26	42.26	0.05	38.77
업무지원	0.18	36.25	0.23	36.83	0.05	38.95
기타 행정 업무 지원	0.10	20.54	0.13	20.91	0.03	22.28

<부표 2-55> 기타 행정 업무 기능 직무량 분석: 6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46	100.00	0.59	100.00	0.13	100.00
행사지원	0.19	40.87	0.23	38.79	0.04	31.07
업무지원	0.17	36.67	0.23	38.91	0.06	47.17
기타 행정 업무 지원	0.10	22.46	0.13	22.31	0.03	21.75

<부표 2-55> 기타 행정 업무 기능 직무량 분석: 7유형

(단위: 명, %)

구분	실제 기준 (A)		적정 기준 (B)		실제 대비 적정 (A/B)	
	인력규모 (A1)	비율 (A2)	인력규모 (B1)	비율 (B2)	차이 (B1-A1)	비율 (B1/A1*100)
계	0.49	100.00	0.60	100.00	0.11	100.00
행사지원	0.22	43.96	0.26	43.68	0.05	42.48
업무지원	0.19	38.38	0.23	38.46	0.04	38.81
기타 행정 업무 지원	0.09	17.66	0.11	17.86	0.02	18.72